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Safety Culture
in Goyang City

고양시 안전의식
실태조사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연구

이정철
황휘욱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Safety Culture in Goyang City

고양시 안전의식 실태조사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정철(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휘옥(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저자 이정철, 황휘옥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27-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안전문화의 이론적 검토	11
제1절 안전문화의 개념	13
1. 안전의 개념	13
2. 안전문화의 개념	15
제2절 안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9
1. 안전문화 관련 선행연구	19
2. 안전문화운동 관련 선행연구	22
제3절 안전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 관련 내용	25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상의 안전문화 관련 내용	27
3. 고양시 조례상의 안전문화 관련 내용	28
제3장 안전문화운동의 현황 및 사례 분석	31
제1절 안전문화운동 해외 사례	33
1. 미국	33
2. 영국	38
3. 일본	41

제2절 안전문화운동 국내 사례	49
1. 중앙정부	49
2. 민간기업	57
3. NGO -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	59
4. 광역자치단체	63
5. 기초자치단체	65
제3절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황	77
1. 고양시의 재난안전 관련 현황	77
2. 안전문화운동 관련 현황	82
3. 소결	91
제4장 고양시민 안전의식 실태 조사 결과	93
제1절 고양시민 안전의식 실태 조사 결과	95
1. 조사의 개요	95
2. 분석 결과	9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7
제1절 실태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89
제2절 정책 제언	192
1.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른 재난 유형별 대응 방안	192
2.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202
참고문헌	217
부록	221
Abstract	241

표 목차

[표 1-1] 연구의 도식도	9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 관련 개념	14
[표 2-2] 안전사고와 재난의 구분	15
[표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운동 정의	25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 진흥 노력의 예	26
[표 2-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주요 내용	28
[표 2-6]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의 주요 내용	29
[표 3-1]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서비스 성과(2018년 기준)	83
[표 3-2]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교실 운영 성과(2018년 기준)	84
[표 3-3] 2018년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적	85
[표 3-4] 2018년 안전훈련 운영 실적	86
[표 3-5] 시민안전지킴이 지역구별 규모 현황	87
[표 3-6] 2018년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내역	88
[표 3-7]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예시	89
[표 4-1] 설문내용의 구성 항목	97
[표 4-2] 응답자 특성	97
[표 4-3] 거주지별 비교(각종사고 위험으로부터 개인차원의 안전)	102
[표 4-4] 거주지별 비교(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고양시 차원의 안전)	104
[표 4-5] 거주지별 비교(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전체 차원의 안전)	105
[표 4-6] 거주지별 비교(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인식-불안의 원인)	107
[표 4-7] 위험유형별 위험도 인식 비중 - 응답자 전체	127
[표 4-8] 재난 유형 위험도 인식 거주지별 평균 비교	128
[표 4-9] 세부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 평균 순위 - 덕양구 응답자	129
[표 4-10] 세부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평균 순위 - 일산동구 응답자	130
[표 4-11] 세부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평균 순위 - 일산서구 응답자	131

[표 4-12] 세부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평균 순위 - 종합비교	132
[표 4-13] 거주지별 위험도 인식 평균 비교 - 사회재난 유형	134
[표 4-14] 거주지별 위험도 인식 평균 비교 - 치안범죄, 교통사고 유형	135
[표 4-15] 거주지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자연재난, 신종위험 유형	136
[표 4-16]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사회재난 유형	137
[표 4-17]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치안범죄, 교통사고 유형	138
[표 4-18]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자연재난, 신종위험 유형	139
[표 4-19]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 순위 비교	140
[표 4-20]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사회재난 유형	141
[표 4-21]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치안범죄, 교통사고 유형	142
[표 4-22]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자연재난, 신종위험 유형	143
[표 4-23]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 순위 비교	144
[표 4-24] 고양시 중점안전관리 대상 인식- 거주지별 응답 비율 비교	148
[표 4-25]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효과적 교육방법에 관한 인식 - 거주지별 응답 비교	175
[표 5-1] 성인(일반인)용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예	204

그림 목차

[그림 2-1] 안전문화의 3대 구성요인	17
[그림 2-2] 안전문화 형성의 삼각축	19
[그림 2-3] 안전문화 우수 진화 모델의 예시	20
[그림 2-4] 우리나라 안전문화운동의 특성 분석 예시	23
[그림 3-1] 미국 Ready 웹사이트 예시	34
[그림 3-2] 영국 Think 캠페인의 관련 웹사이트 예시	40
[그림 3-3] Think 캠페인 청소년 연령별 교육자료	41
[그림 3-4] 아이들을 위한 영상: 홍수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포인트	42
[그림 3-5] 고베시 지역방재스쿨 소방직원 방재교육	43
[그림 3-6] 센다이 방재 지도 만들기	44
[그림 3-7] 센다이 구명내비	45
[그림 3-8] 2018년도 후쿠오카 시민 통합방재 훈련 내용	47
[그림 3-9]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예시	50
[그림 3-10] 안전신문고 주요 처리 사례	52
[그림 3-11] 경기도 안전지수 현황(2018년 기준)	55
[그림 3-12] 지역안전지수 추진현황	56
[그림 3-13] 엄마손 캠페인 사례 예시	60
[그림 3-14] 사각사각 캠페인 사례 예시	62
[그림 3-15]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사례 예시	66
[그림 3-16] 송파구 어린이 대상, 학교 근처 안전문화사업	67
[그림 3-17] 송파구 카시트 대여사업 및 투명우산 만들기 체험 행사 예시	68
[그림 3-18] 대구광역시 중구 행복수호대 연락체계	71
[그림 3-19] 광주광역시 남구 부엉이가게	73
[그림 3-20] 고양시 화재 사고 발생 추이	77
[그림 3-21] 실화 발생률이 높은 지역	78

[그림 3-22] 고양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80
[그림 3-23] 고양시 교통사고 피해 추이	81
[그림 4-1]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인식	100
[그림 4-2] 개인차원의 안전성 세부 응답별 응답비중	101
[그림 4-3] 고양시 차원의 안전성 세부 응답별 응답비중	103
[그림 4-4]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인식: 불안의 원인	106
[그림 4-5] 고양시의 과거와 미래 안전상태 변화 인식	108
[그림 4-6] 고양시 안전 개선의 장애요인 인식	109
[그림 4-7] 사회 주체별 안전의식 수준	110
[그림 4-8]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	111
[그림 4-9] 고양시 안전 개선의 장애요인- 안전 불감증의 원인	112
[그림 4-10] 안전확보를 위한 규범, 제도 준수 정도	113
[그림 4-11] 안전 규범이나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113
[그림 4-12] 안전 정보 습득 정도 및 수집 경로	115
[그림 4-13] 안전 정보의 유용성 및 부정적 평가 이유	116
[그림 4-14] 재난·재해 대비 안전 대응 요령 사전 숙지 정도 결과	117
[그림 4-15] 재난·재해 대비 노력 정도(평균 비교)	118
[그림 4-16] 재난·재해 대비 노력 정도(응답 비중)	119
[그림 4-17] 재난안전 대피시설 사전 숙지 정도	120
[그림 4-18] 사회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	121
[그림 4-19] 치안 범죄 유형별 위험도 인식	122
[그림 4-20] 교통사고 유형별 위험도 인식	123
[그림 4-21] 자연재난 세부 유형별 위험도 인식	124
[그림 4-22] 신종위험에 대한 세부유형별 위험도 인식	126
[그림 4-23] 각 재난 유형별 향후 전망에 대한 고양시민 인식	146
[그림 4-24] 고양시 중점안전관리 대상 인식	147

[그림 4-25] 고양시의 사회분위기 안전 중시정도에 대한 인식	149
[그림 4-26] 개인차원의 안전 중시정도 - 업무 수행 시 안전 중시정도	150
[그림 4-27] 고양시 안전 정책 관련 인지도	151
[그림 4-28] 고양시 안전 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	152
[그림 4-29]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관련 인지도	154
[그림 4-30] 안전문화운동 정보 관련 습득 경로	154
[그림 4-31]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긍정 평가 동의 정도)	155
[그림 4-3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주체에 대한 평가	156
[그림 4-33] 안전문화운동 중점 활동 분야에 대한 인식	158
[그림 4-34] 안전문화운동 중점 적용 분야에 대한 인식	159
[그림 4-35] 재난안전사고 우선 추진 분야에 관한 지역별 비교	160
[그림 4-36] 안전문화운동 추진 장소	162
[그림 4-37] 안전문화운동 최우선 적용 장소에 대한 거주지별 비교	163
[그림 4-38] 안전문화운동 우선 추진 대상	164
[그림 4-39]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필요 분야	165
[그림 4-40]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필요 분야에 대한 거주지별 비교	166
[그림 4-41] 공공부문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에 찬성하는 이유	167
[그림 4-42] 공공부문 주도 안전문화운동에 반대하는 이유	168
[그림 4-43] 안전문화운동 유형별 참여 의사	169
[그림 4-44] 안전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171
[그림 4-45] 안전교육 이수 경험 및 내용	171
[그림 4-46] 안전교육 이수 장소	172
[그림 4-47] 안전교육 참여 의사 및 적정 횟수에 대한 의견	173
[그림 4-48] 효과적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174
[그림 4-49] 시민안전지킴이 인지도 및 활동 여부	177
[그림 4-50] 시민안전지킴이 만족도 및 개선 방안	178

[그림 4-51] 시민안전지킴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	179
[그림 4-52]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분야에 대한 평가	180
[그림 4-53] 사회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도 인식	181
[그림 4-54]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우선 투자 대상	182
[그림 4-55] 안전 정책 이슈에 대한 우선 투자 순위 분석 결과	183
[그림 5-56] 가장 시급한 안전 이슈에 대한 의견	184
[그림 4-57]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인식	186
[그림 5-1]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의 예	195
[그림 5-2] 감염병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	198
[그림 5-3]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예	202
[그림 5-4] 안전체험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예(경기 평택시)	206
[그림 5-5] 일본 사카이 시 어린이 대상 안전대피훈련 시행의 예	210
[그림 5-6] 안전 이슈별 대응 기관 및 관련 부처별 관계	212
[그림 5-7]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의 예	214
[그림 5-8]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기본계획 수립안의 예시	215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고양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안전문화 인식과 위험요인별 안전 인식 정도 등 안전의식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음.
-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경제 시스템 등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형태로 여러 영역에 걸쳐 복잡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난제로서의 성격을 지님.
-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대형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2014년 고양 터미널 화재 사고나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재난·안전사고들을 진단하면 안전규제 준수 미흡, 안전 부주의, 안전점검 소홀, 안전불감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재난·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

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안전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중점 추진과제로서 ‘안전 무시 관행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운동이 정부 주도 하에 도입·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안전문화 제고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기대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재난재해·안전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선진 안전의식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또한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 점검, 민관협력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안전의식 실태 분석을 통해 고양시 안전문화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안전 이슈를 발견하고, 이와 동시에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안전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안전문화의 개념 등을 논의함.

-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등장 배경을 논의하고, 국내 안전문화운동의 개념 및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함.

○ **둘째, 안전문화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 안전 및 안전문화 조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현황을 조사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시민들 대상의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 추진/실적 현황을 분석함.
- 또한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 지방정부 차원의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 조사하여 분석함.

○ **셋째, 고양시민 대상 안전문화 실태 조사를 수행함.**

- 고양시민(일반시민)들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여 위험요인별 안전 인식,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안전교육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그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함.

○ **넷째, 안전문화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함.**

- 고양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체계 운영 방안,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 등 정책적 관리 노력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안전문화의 개념 정립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함. 이를 바탕으로 안전문화의 개념 및 특징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안전문화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안전문화운동의 제도적 근거를 고찰함.
- 또한 고양시 안전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점검·홍보 활동 등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고양시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검토함.
-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고양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별 차이, 시민들의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등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고양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관리역량 강화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언함.

2. 이론적 논의

□ 안전문화의 개념

- 안전은 학자의 관점, 학문적 논의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재난, 안전사고,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안전 문화(Safety Culture)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조사한 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에 의해 그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개념적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직 문화(Organizational Culture)의 일종으로 연구가 이루어짐.
 - 안전문화의 개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이를 통해 행위로써 나타나는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최호진·오윤경, 2015).
 - 이를 정리하면 안전문화는 안전과 관련된 의식과 제도, 인프라 등 3대 구성요소(안전한 행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음.

□ 안전문화운동의 개념 및 현황

-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운동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됨.
 - 안전문화운동은 국민들이 안전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의 안전 정책 지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화 조성을 통해 안전의식을 체질화하는 것을 추구함.

- 이러한 측면에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운동은 정부 주도의 제도 목적의 정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이루어져 온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운동은 크게 안전문화 개념정립 및 규제, 안전교육·캠페인,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 훈련, 시민자원봉사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3. 안전문화운동 관련 현황 및 사례 분석

□ 안전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문화운동을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함.
- 또한 제8장(안전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로 지역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안전신문고, 국민안전의식 조사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 관련 국내외 사례

-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해외 사례로는 미국 FEMA의 Ready 프로그램, 영국의 지역위기회복 포럼, 일본 후쿠오카, 센다이 시 등의 방재 프로그램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국내 우수사례로서 대구시의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서울 송파구의 맞춤형 안전문화 프로그램, 대구시 중구의 행복수호대와 광주시 남구의 부엉이가게 사례 등을 검토함.
- 고양시 또한 경기도 내에서 화재사고와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등이 최상위권

을 차지할 정도로 화재, 교통안전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안전과의 주관 하에 안전교육, 안전홍보, 안전점검, 시민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고양시 현황과 국내외 우수 사례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안전문화 콘텐츠 다양화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이 요청됨.
- 둘째, 안전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의 시행이 강조되며, 유아·아동기 시기부터 생애주기별 접근방식 하에 체계적인 맞춤형 안전교육의 제공이 요구됨.
- 셋째,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정책 이해도 및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캠페인·홍보활동의 강화,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4. 고양시민 안전의식 실태 조사 결과

□ 조사 방법

○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안전의식 실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는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온라인 조사 참가자 800명, 시민안전지킴이 361명 등을 포함하여 1,161명이 조사에 참여함.
- 조사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의식 일반, ② 위험요인별 안전도 인식, ③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④ 안전 인프라 등 크게 4개 분야임.

□ 조사 결과

○ 분석 결과, 고양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안전의식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는 3.0 내외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안전의식을 보다 긍정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여지가 존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각 지역별로 개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에 대해서는 일산서구(3.10) > 덕양구(3.05) > 일산동구(3.03)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안전의식의 한계 요인으로는 관리감독 및 점검 미흡, 안전불감증, 관리자층의 무관심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됨.
- 둘째, 사회재난, 자연재난, 교통안전, 치안범죄, 신종위험 등 각 유형별 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에는 미세먼지(61.8%), 이륜차 사고(44.6%), 싱크홀(43.4%), 환경 오염(38.4%), 자동차 사고(37.0%), 보행자 사고(35.1%), 노후건물 안전(32.5%) 순으로 나타남.
- 각 지역별로 위험도 요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면 교통안전 > 사회재난, 신종위험 > 치안범죄 > 자연재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위험도 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결과 재난안전사고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위험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남.
- 셋째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안전문화운동 유형별 참가 의사 측면에서는 학교/직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참여, 안전교육 이수 등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69점, 3.70점의 평균 점수로 도출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안전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인원의 비중 또한 부정적 응답자의 비중(6.4%)과 비교하여 65.5%로 나타나 안전교육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 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 점검

과 역량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 기반으로서 장기적 정책 목표와 전략 수립과 부처, 조직 간 협업 필요성이 강조됨.

5. 결 론

□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안전문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노력 및 보완이 요청됨.

- 첫째, 화재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안전 점검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 화재감지기 설치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구 찾기 운동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안전 교육 측면에서 일본의 유소년 소방클럽 사례 등과 같이 어린이, 청소년 시기부터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화재예방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이 고려됨.
- 둘째, 환경 및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사례 등과 같이 고양시의 인구, 사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양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인근 지자체 간의 미세먼지 협력 대응 추진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셋째, 신종 질병 및 감염병, 싱크홀 및 지반침하 이슈 등 신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 등 행정적 지원 확대와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경기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권한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넷째, 교통안전 이슈에 대응하여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선진 국가 사례 등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통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V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교육 교재 개발 방안 등을 고려함.
- 마지막으로 고양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안전교육, 안전홍

보, 안전점검 및 훈련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안전교육의 경우 직접 실습하면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체험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 등이 강조되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 유형을 고려한 교육 내용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 교육의 내실화 노력이 요구됨.
- 안전홍보 측면에서는 대중매체를 비롯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앱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또한 중복 사례 등과 같이 안전 주제와 문화제 요소를 결합하여 안전 콘텐츠 축제 등을 통한 홍보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안전 점검 및 훈련 측면에서는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 훈련 등 훈련 내용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일본 사례와 같이 훈련과 이벤트를 융합하여 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러한 노력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지원 조례 제정과 안전문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내실화 및 적극적인 활용, 시민안전과를 주무부서로 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며, 여러 영역에 걸쳐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특징을 지님.
 - 정책문제로서의 현대사회의 위험은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아울러 위험의 발생은 여러 기능 또는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등 ‘난제(wicked policy problem)’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발생하였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각종 재난안전 관련 정책들을 강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각 주체에 대하여 안전행태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안전정책들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측면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 또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고양시는 현재 안전, 교육,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고양시 1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특별시’,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도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 등 4대 시정 목표 아래 CCTV 확대 및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안전보험제도 운영 등 다양한 시민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범죄, 자연재해, 자살, 화재, 감염병, 생활안전 등 7대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고양시는 지난 4년(2015~2018년)간의 평균 지

역안전지수가 1.8등급 수준인 것으로 진단되며,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양시 차원의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도시안전의 불안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인구 증가와 더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및 복합 상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술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의 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의 정도 또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재난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음(변상호 외, 2017).
 - 이러한 예로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나 백석동 온수배관 파열 사고 등은 다양한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시사하며 고양시에 내재하는 도시안전상의 불안요소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안전지수상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2014년 고양시민들의 정책만족도 가운데 도시안전 분야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16년 사회조사자료 분석 결과 소득하위계층에서 교통·주차,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도출되는 등 여전히 도시 내의 안전 분야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함.
- 이러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가 강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선제적·예방적·자발적인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안전과 위협요소에 대한 근원적 차단을 위한 참여와 관심의 유도가 요구됨.
 -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2007년 30.3점에서 2014년 17점으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안전의식이 5년 전에 비해 변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다’는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는 응답과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각각 17.5%와

17.2%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 ‘나빠졌다’는 응답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난 집단은 ‘여성’, ‘50대’, ‘자영업자’, ‘전업주부’, ‘고졸’, ‘연2천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이었음.
 - 또한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98.7%(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응답 포함)가 공감하고 있었으나, 최근 1년동안 재난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에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이 약 64%를 차지함.
 -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 효과성을 기대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재난재해·안전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 안전문화는 주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을 비롯한 지역 사회, 이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제고 가능함(조민상, 2017).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 또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년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최근에는 안전문화포럼을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선진 안전의식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문화운동 등을 통해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고양시 또한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점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 고양시에서도 시민안전지킴이활동,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만으로는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안전의식과 고양시 안전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안전문화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양시 안전의식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인식조사를 수행함.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발굴하여 고양시 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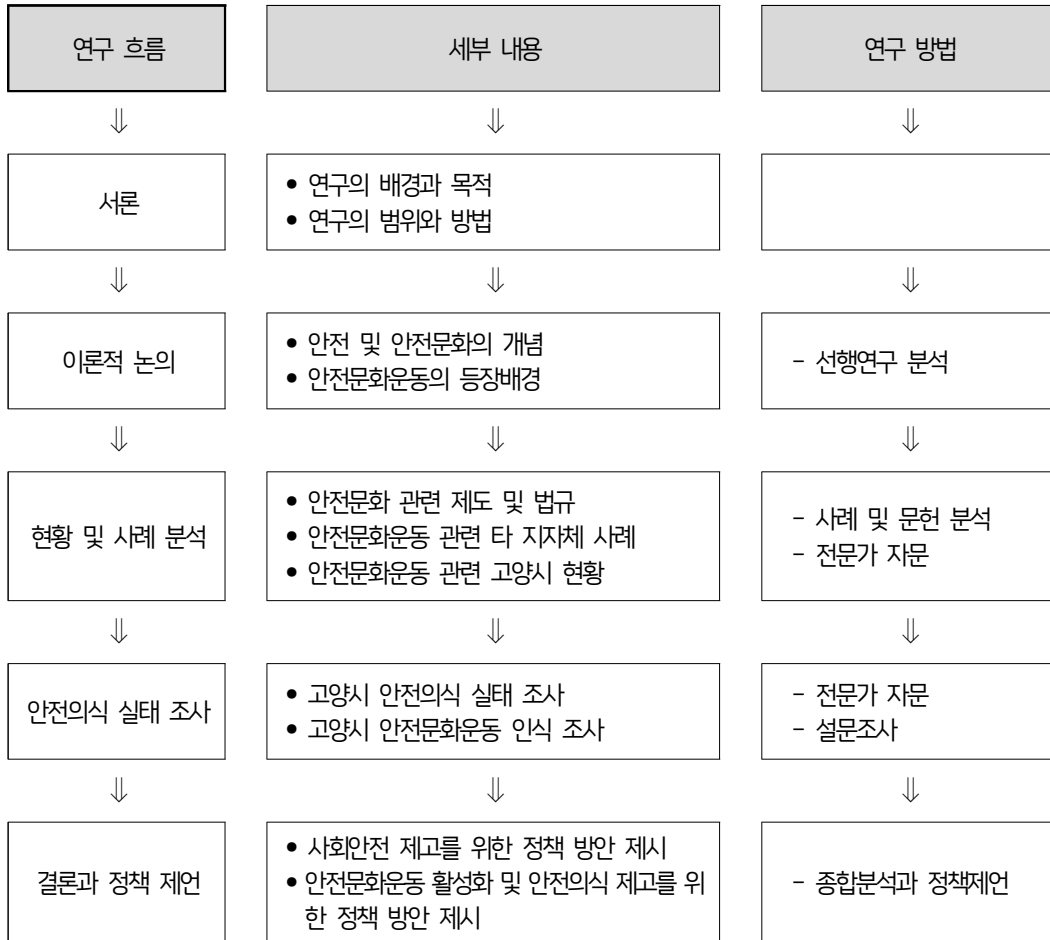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수행함.
 - 본 연구의 대상은 고양시 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고양시민들로 설정하였음.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먼저 이론적 연구는 문헌 분석 및 선행연구 분석 등을 바탕으로 안전 및 안전문화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안전의식조사 및 안전문화운동 연구가 갖는 의의에 대하여 정리함.
 - 다음으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 차원에서 고양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전문화 및 안전의식 실태 조사를 실시함.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양시 안전의식수준에 대한 인식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안전환경 및 위험요인별 안전 정도, 안전문화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안전의식 실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첫째, 안전문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써 안전문화의 개념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연구 동향을 통하여 안전문화의 구성요소와 특징, 안전문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정리하고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함.
 - 둘째,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활성화 노력과 관련된 현황 분석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문화 관련 제도, 안전문화운동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분석함.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양시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운영 사례 분석을 실시함.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안전문화운동 제도 운영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제도적인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보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 셋째, 문헌 분석과 전문가 자문, 사례 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양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양시의 안전의식 수준, 안전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설계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양시 내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 및 안전문화 실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함.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안전문제 인식 정도, 위험요인별 특징 등을 논의함.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함.
- 이상의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1-1] 연구의 도식도



제 2 장

안전문화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안전문화의 개념

제2절 안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안전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제절 안전문화의 개념

1. 안전의 개념

- 안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인적 피해나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또는 신체적·정신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서혜승, 2019).
- 또한 미국안전학회(NSC, National Safety Council)에 따르면 안전이란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안전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신체적·정신적·물질적으로 위험과 위해를 야기하는 조건들이 통제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WHO, 1998).
-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안전의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전은 위험한 상태나 손상, 인명피해에 대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질적, 사회적 위험 요인들이 통제·관리되는 상태를 의미함(윤영배, 2017: 16).
-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위해·위험 상태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거나 제거된 상태를 현실에서 기대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Redmill&Rajan(1997)은 안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지각하는 데 있어서 위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함(Redmill&Rajan, 1997; 윤영배, 2017).
- 우리나라 재난·안전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 관리 전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근거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 관련 개념

<p>제3조(정의)</p> <p>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p> <p>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p> <p>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p> <p>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또한 국민안전처(2017)의 경우 안전에 대해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지범(2009)의 경우 위험과 안전의 관계에 대해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안전(safety)과 위험(risk)과 위기(crisis), 재난(disaster) 등의 개념을 구분함(윤영배, 2017; 서혜승, 2019).
- 예를 들어 물리적 안전에는 부상, 사망 등 신체적 피해, 건물파손, 소실 등의 물적 재산 피해, 통신마비 등의 사회적 손실 등이 포함되는 한편, 심리적 안전에는 인간의 심리적 불안정 등이 포함됨(국민안전처, 2017).
- 또한 정지범(2009)은 위험(risk)을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위기로, 위기(crisis)를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정의함. 또한 재난(disaster)의 경우 결과론적 함의를 지니며 그 결과가 부정적인 위기라고 정의함(정지범, 2009: 62). 이와 비교하여 안전은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거나 그러한 상태로 정의함.

- 정지범(2009)의 논의와 같이 위험과 안전, 재난 등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김근영 외(2012)는 안전의 개념에 대하여 안전문제와 안전사고, 재난으로 구분함.

[표 2-2] 안전사고와 재난의 구분

구분	피해규모	관리주체	내용
안전문제	소규모	민간	관리주체의 일상 대응, 정부 간접 개입
안전사고	↓	공공/민간	기존 관리 주체 대응, 정부 개입 필요
재난	대규모	공공/민간	정부의 대규모, 적극적 개입 필요

자료: 김근영 외,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12; 윤영배, 「울산형 인본중심 안전문화운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2017, p.10.

2. 안전문화의 개념

- 안전문화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 「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에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됨(오금호 외, 2006; 류영아·김대욱, 2014: 14).

-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은 안전문화를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으며, 실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갖는 문화적 분위기’라고 정의함(류영아·김대옥, 2014:15).
- 이를 통해 안전을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1991년에는 INSAG-4로서 ‘안전문화’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안전문화의 개념을 정립함(류영아·김대옥, 2014; 윤영배, 2017). 해당 보고서에서는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를 강조하며 이를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여 적절한 관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련 조직과 개인의 특성 및 태도의 집합’이라고 정의함(류영아·김대옥, 2014).
- 한편 국내의 경우 1995년 이전까지는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나 개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윤영배, 2017). 그러나 1995년 2월 부산 한진 중공업 선박화재와 동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함(류영아·김대옥, 2014; 윤영배, 2017).
- 1995년 3월 안전문화운동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이 논의된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안전문화추진위원회가 민·관 협의체로서 발족되었으며, 동년 8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가 설립되는 등 국무총리 하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됨(류영아·김대옥, 2014). 또한 동년 10월 당시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었던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서 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시함(이형복, 2015).
- 당시 안전문화의 정의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이나 조직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어 개인 생활이나 조직 활동 속에서 의식이나 관행이 안전으로 체화된 상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양식과 사고방

식,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의미함¹⁾(김명열, 2017),

-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새로운 안전문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안전문화는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사회적·문화적 산물’로 정의할 수 있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²⁾).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3대 분야로 학교안전문화, 산업안전보건문화, 생활안전문화(가정안전, 교통안전, 공공안전 등)분야를 제시함. 안전문화를 구성하는 3가지 구성요인인 안전의식과 안전제도, 인프라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안전의식은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개인이나 조직 활동 속에 체질화·내재화된 상태를 의미함.
 - 둘째, 안전제도란 안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는 법·제도 등을 의미함.
 - 셋째, 인프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물, 그리고 안전한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의미함.

[그림 2-1] 안전문화의 3대 구성요인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kosha/business/contBusinessCul01.do>)

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contBusinessCul01.do>) 접속일 2019.08.12.

²⁾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contBusinessCul01.do>) 접속일 2019.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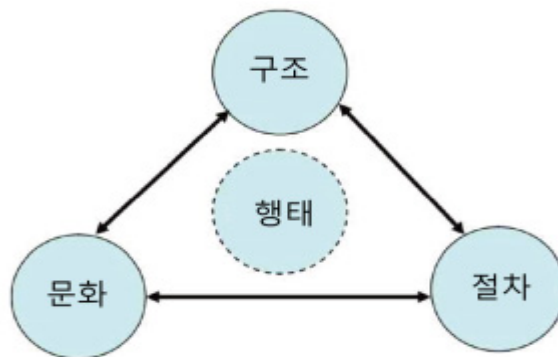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근영 외(2012)는 안전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치, 규범, 행동,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안전문화를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가치와 규범, 행동, 시스템 등이 모두 준수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최호진·오윤경, 2015: 20).
- 이 외에도 안전문화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으나, 개념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직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됨. 안전문화 개념에 관한 논의는 조직의 문화로서 조직 관리를 전제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산업영역에서 그 개념과 특징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짐(오윤경, 2015). 이후 기술, 산업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생활영역에까지 안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둘째, 안전문화는 개인과 조직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태도,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행동의 일원화·내재화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짐(류영아·김대욱, 2014).
 - 셋째, 안전문화는 개인의 의식과 조직 생활 내 행동에 내재화하는 것을 강조함에 따라 조직 내 인사관리, 리더십, 조직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조직관리 요인들과 연계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강조됨(오윤경, 2015). 또한 개인이나 조직구성원 각각의 의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개인의 참여와 자발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

제2절 안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 안전문화 관련 선행연구

-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확대·발전되어 옴.
- Berends(1995)는 안전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규범과 믿음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이 때 규범은 개인과 조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믿음은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 특성, 사고의 원인, 안전에 대한 통제가능성, 개인에 의한 조정가능성, 안전한 작업 결과,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함(윤영배, 2017: 23).
- Guldenmund(2007)는 안전문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하드웨어적 측면(물리적 환경 요인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사회적 요인 등), 인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 등 4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전문화 행동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구조적 조건과 사회문화, 절차적 요인을 제시함(윤영배, 2017).

[그림 2-2] 안전문화 형성의 삼각축



출처: 윤영배(2017). 전거서, p.23.

- 그리고 Duncan(2012)의 경우 안전문화의 형성 및 발전단계를 회피형과 순응형, 가치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최호진·오윤경, 2015).
 - 회피형은 초기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단계로서 안전을 부담으로 여기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며 회피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 순응형은 회피형 단계에서 보다 더 발전된 단계로서, 안전을 우선순위 과제로 인식하거나 주요 목표로서 설정하는 등 안전에 대해 주목하는 단계를 의미함.
 - 마지막으로 가치지향형은 안전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식하며 최종적으로는 내재화·체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의미함.

[그림 2-3] 안전문화 우수 진화 모델의 예시



출처: T. L. Mathis & S. M. Galloway. *STEPS to Safety Culture Excellenc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13); 최호진·오윤경.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p.26.

- Neal&Griffin(2006)은 안전 행동(safety behavior), 안전 동기(safety motivation), 안전 분위기(safety climate)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면서 긍정적인 안전 분위기가 안전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 동기는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명함(최호진·오윤경, 20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안전문화 연구는 점차 확장·발전되어 안전문화가 형성되는 요인에 대해서 안전 동기와 가치,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와 성과 등을 모두 고려하는 논의가 최근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예로 Mathis&Galloway(2013)는 안전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안전문화 우수 진화 모형(the safety culture excellence evolution model)으로 제시함.
 - 모형에 따르면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가 의사결정과 기대목표의 설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한 경험과 사례, 긍정적·부정적 성과가 다시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전문화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설명됨(최호진·오윤경, 2015: 25-26).
- 한편,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안전문화 형성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확대되어 안전문화의 구축은 곧 안전관리로 인식되면서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됨.
 - 이러한 예로 오영민·장근탁(2013)은 원전안전문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 원전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안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개인과 조직, 팀 단위의 진단 지표를 개발·제시함.
 - 개인 지표에는 개인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태도, 생활패턴, 책임감, 숙련도 등이 고려됨.
 - 조직 지표에는 안전리더십, 의사소통, 작업환경, 교육훈련 등이 포함됨.
 - 팀 단위 지표에는 안전리더십, 팀워크, 보고체계, 의사소통 등의 지표를 통해 안전문화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짐.
 - 이종열 외(2007) 또한 안전 문화를 측정·평가하는 데의 필수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시스템 요인, 환경적 요인을 제시함.
 -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인식이나 행동 등이 안전문화 형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예로 개인이 지닌 성격이나 행동, 태도, 믿음 등이 고려됨

- 시스템 요인은 안전과 관련된 장비, 도구 등 기술적 자원 및 인프라 요인들이 고려됨. 이종열 외(2007)의 논의에서는 시스템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와 인간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함(최호진·오윤경, 2015).
 -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은 개인이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안전문화 또한 영향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로 사회적·경제적 특성들이 포함됨. 이종열 외(2007)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요인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에 안전문화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안전문화 형성과 관련된 국내 다수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 조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앞서 제시한 논의에서 살펴본 요인들 외에도 공통적으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안전문화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는 경우 조직이나 사회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최고관리자의 역할이나 효과적인 리더십과 지원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됨(최호진·오윤경,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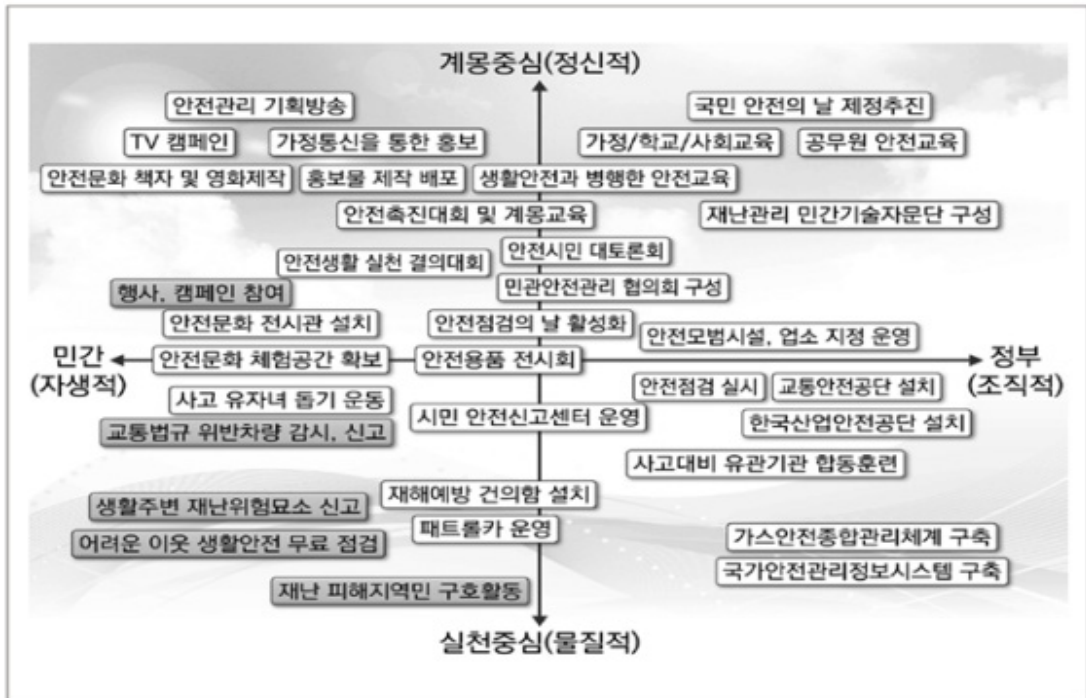
2. 안전문화운동 관련 선행연구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안전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안전문화의 형성과정과 그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연구의 경우 정부 주도적으로 안전문화를 제고·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국무총리 책임 하에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가 1995년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된 이후 오금호 외(2002, 2006)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

구라고 할 수 있음.

- 오금호 외(2002)는 안전문화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캠페인, 안전문화 개념 수립 및 규제, 안전시설 및 인프라 구축, 자원봉사 등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오금호 외(2002)는 [그림 2-4]와 같이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주체와 성격에 따라 정부/민간 주도, 계몽/실천 중심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사업별 특성을 분류함.

[그림 2-4] 우리나라 안전문화운동의 특성 분석 예시



출처: 오금호 외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민안전봉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정책연구소, 2002, p.11; 최호잔·오윤경(2015). 전개서, p.32.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금호 외(2002)는 우리나라 안전문화운동의 특징이자 한계점으로 정부 주도의 계몽 중심적 사업들이 대부분인 만큼 민간 주도의 실천 지향적 사업들이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함.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으로서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시민안전봉사자의 역할 등을 강조함.

- 오금호 외(2006) 또한 우리나라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성과 가운데 민간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오금호 외(2006)는 안전문제가 지니는 공공재적 성격,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규제 중심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주체를 통해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될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나채준(2013)은 안전문화운동의 한계로서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함.
 - 우리나라 안전문화운동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이전인 1995년부터 국무총리 지시 하에 추진되었으며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안전문화진흥)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활성화 노력과 관련된 규정이 사후적으로 마련됨(나채준, 2013).
 - 그러나 현재는 권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범국가적 추진체계로서 안전문화운동을 뒷받침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 활동 사항을 제시하는 데에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이러한 논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안전문화의 제고 및 확산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안전문화운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음.
 - 일례로 류영아·김대옥(2014)은 3필착 운동 등 박근혜 정부 당시의 주요 안전문화운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성과를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각 주체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또한 이형복(2015), 윤영배(2017) 등은 각각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언함.

제3절 안전문화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 관련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1조(목적)에 의거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운동을 안전문화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9의2).

[표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운동 정의

<p>제3조(정의)</p> <p>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p>
--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안전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3년 8장(안전문화 진흥)을 신설하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

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나 채준, 2013). 이후 2017년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문화 진흥 노력의 예

<p>제8장 안전문화 진흥</p> <p>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p>(이하 생략)</p>
--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안전문화진흥)에는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를 포함하여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안전교육, 안전캠페인 등 국가적 차원의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의해 안전문화운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규정을 통해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윤영배, 2017).

- 또한 제66조의8(안전관리현장)의 경우 과거 산업안전 등에 국한되었던 안전 문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 봉사나 주민 자치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니며 제66조10(안전지수의 공표), 제66조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님(이형복, 2015; 윤영배, 2017).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상의 안전문화 관련 내용

-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됨(「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나라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안전교육의 수립과 시행, 추진·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장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장(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장은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 추진, 재난 관리책임기관 등의 직무교육,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시행 등을 규정함(「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장(안전교육의 시행)).

[표 2-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이하 생략)

출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마지막으로 제4장은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와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하여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장(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3. 고양시 조례상의 안전문화 관련 내용

- 고양시는 12개 공공기관과 19개 시민단체 대표 3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2013년 12월 출범함. 이를 통해 각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실무자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기획홍보, 사회 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의 4개 분과별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단체·기관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범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시민홍보에 주력하고자 함(고양시, 2013)³⁾.

□ 이후 고양시는 고양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11월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를 제정함.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고양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6]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의 주요 내용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운동에 시민 자율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안전지킴이”란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시민조직을 말한다. 2. “시민안전지킴이 연합대”란 각 동별 시민안전지킴이의 대표를 위원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범죄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p>제3조(임무) ① 시민안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 2. 민관협력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시민안전홍보 4. 시민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여성 및 청소년안심귀가 서비스 지원활동 7. 학생의 안전한 등교·하교 지원활동 8. 청소년 안전생활 지원활동 9.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 10. 경찰서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11. 안전생활위험 요소(보도블록 파손, 씩크홀, 무단투기 쓰레기, 환경위해요소 등) 점검 및 신고 활동 12. 그 밖에 시민안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출처: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출범”, 고양시 보도자료(2013.11.21.).

-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자율적인 시민 참여 활동으로서 안전 및 사회질서 계도 활동, 안전 홍보, 지역사회 순찰활동 등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례 및 활동 내용은 안전문화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양시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편,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규정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를 평가할 수 있음.

제 3 장

안전문화운동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제1절 안전문화운동 해외 사례

제2절 안전문화운동 국내 사례

제3절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황

제절 안전문화운동 해외 사례

1. 미국

1)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t Management Agency, FEMA)

- 미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은 1978년 창설된 후,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2003년 창설된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음.
- FEMA의 미션은 자연 재해, 테러 행위, 기타 인적·사회적 재난 등 모든 위험으로부터 전국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는 것임.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전후처리과정에서 미흡함을 지적받아 재난에 대응역할을 넘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계획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함.
- 현재 FEMA는 모든 재난 상황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prepare), 재난 상황에서 보호(protect against)하며, 대응함(respond to). 또한 재난으로부터 회복하고(recover from), 완화(mitigate)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위험기반 응급상황 관리시스템 내에서 국가를 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최호진·오윤경, 2015).
- FEMA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운동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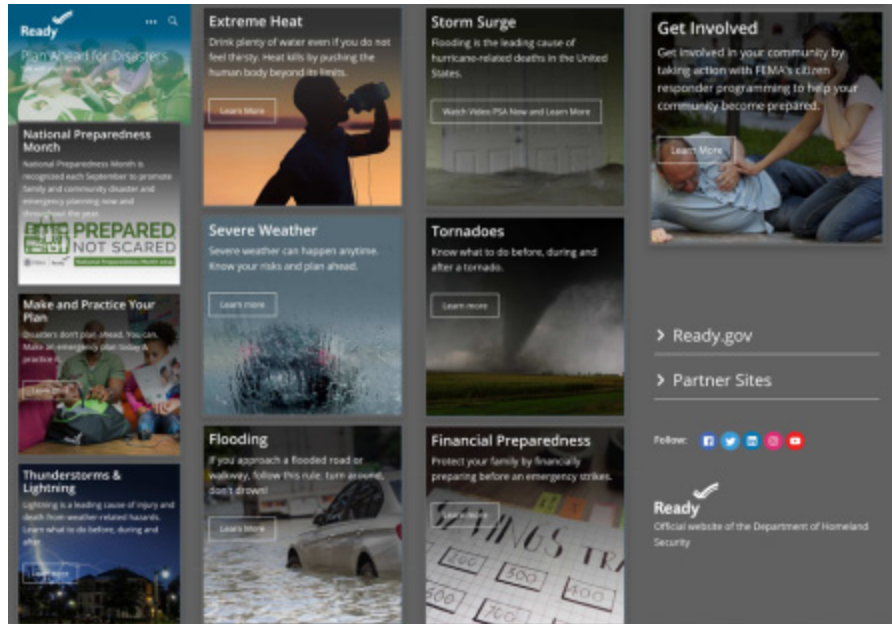
(1) Ready(대국민 홍보캠페인)

- 대표적인 안전문화운동 Ready는 FEMA의 주된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및 준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Ready 프로그램의 주된 특징은 정보를 용도, 계절, 재난별로 제공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한다는 점임.
 - 전염병 및 자연재해(가뭄, 지진, 홍수, 허리케인, 산불 등), 테러(생물학 테러, 화학테러, 사이버 테러 등), 물리적 사고(정전, 유해물질 유출사고, 원자력 사고) 등 각종 재해의 개념, 대응방법, 대피장소, 사고 후 조치 등을 설명함.
 - 집단별(어린이·영유아, 노인, 군인가족, 대학생, 직장인, 경찰, 소방관 등), 재난발생 장소(집, 공공장소 등)에 따른 대처방법도 소개하고 있음.
- Ready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Are You Ready?)은 사용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연재해의 종류, 대응방법은 물론 거주지역의 재해 대비 인프라, 담당자, 응급알림 시스템 등의 정보를 제공함.

[그림 3-1] 미국 Ready 웹사이트 예시



출처: 미국 Ready 홈페이지⁴⁾

- 또한 위급상황 발생시의 행동요령을 체크리스트 형식, 가족 및 친구 간 비상연락처 기재란 등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재난대비 키트를 만들 수 있는 방안까지 소개하고 있음.

(2) Citizen Corps(시민자원 봉사단)

- 201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난관리에 대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2002년 국토보안부 하에 USA Freedom Corps라는 명칭으로 시민자원 봉사단이 창설됨. 이 중 Citizen Corps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긴급한 안전 이슈나 응급상황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FEMA, 2011; 최호진·오윤경, 2015).
- Citizen Corps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자원의 중복이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지역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들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재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님.
- Citizen Corps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성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자, 경찰·소방조직 등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기업, 학교, 병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이 연계하여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교육 활동 등이 진행됨(최호진·오윤경, 2015: 67).
- 주요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최호진·오윤경, 2015: 68-72).
 -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프로그램은 1985년 L.A.지역 소방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재난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Fire Corps: Fire Corps 프로그램은 화재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4) 미국 Ready 홈페이지(<https://www.ready.gov/>) 접속일 2019.08.15.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처음 시행됨. Fire Corps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주로 지역 내 소방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CERT 프로그램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Fire Corps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방 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으로 Fire Corps 관련 제품 판매, 안전 가이드북 배포 등의 활동을 수행함.

- Neighborhood Watch: 1972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Neighborhood Watch는 지역사회 방범활동이나 범죄 감시 등의 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경찰 조직과 자율방범조직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와 시민 자문 위원회 등이 운영됨.

2) 미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 미국의 교통안전캠페인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기관인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NHTSA는 자동차 사고나 고속도로 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정책으로 신차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결함 차량의 신고와 같은 자동차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자동차 사고와 보행자 사고, 자전거 사고 등 교통 안전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NHTSA의 대표적인 두 가지 안전문화 운동은 다음과 같음(최호진·오윤경, 2015: 73-77).

(1) Distracted Driving(주의산만 운전자 프로그램)

- Distracted Driving(주의산만 운전자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 주의산만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됨.
 - 일례로 Distracted Driving 안내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최근 2017년 기준 한 해 동안 주의산만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약 3,166명인 것으로 나타남⁵⁾.
-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NHTSA의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주의산만 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 사례는 뉴스, 관련 법령, 통계 데이터 등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실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경험담 등을 전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주의산만 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의 수준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Take The Pledge’라는 기능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 Car Seats and Booster Seats(어린이 카시트 프로그램)

- NHTSA는 현재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카시트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안전한 자동차 탑승 및 이용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함(최호진·오윤경, 2015; 윤영배, 2017: 60).
- NHTSA는 홈페이지와 교육용 책자 등을 활용하여 차량별 카시트 설치법, 연령대별 적합한 카시트 종류, 자녀의 탑승 위치 등 카시트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카시트의 안전기준 통과 여부 등을 평가함(최호진·오윤경, 2015: 76).

⁵⁾ Distracted Driving 홈페이지 (<https://www.nhtsa.gov/risky-driving/distracted-driving>) 접속일: 2019.08.15.

- 또한 ‘Car Seats Finder’라는 사용편의성 평가를 통해 구매자의 조건에 적합한 카시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음(윤영배, 2017: 60).

2. 영국

1) 비상대비사무처(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 CCS)와 지역위기회복포럼(Local Resilience Forum)

- 2001년 설립된 비상대비사무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재난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상시 총책임부서로 효율적인 재난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고, 재난위기관리 관련 조직들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함(최호진·오윤경, 2015: 139).
- 비상대비사무처 이외에 비상설 조직으로서 국가위기대책위원회(Civil Contingencies Committee, CCC)는 재난위기 등급에 따라 운영됨.
 - 1단계(Significant): 국가위기대책위원회의 주관부처는 중앙정부의 지원 및 협력을 수행함.
 - 2단계(Serious):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관부처 주무장관이 의장을 수행
 - 3단계(Catastrophic): 수상이 의장을 수행
-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의 상시조직인 지역위기회복포럼은 경찰이 의장역할을 수행하며, 정보 공유, 기관 간 협업, 지역위험목록 작성을 담당함.

2) 런던 소방청(London Fire Brigade)

(1) 화재사관후보생 프로그램(Fire Cadets)

- 화재 사관후보생 프로그램은 14세~17세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료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소방 및 화재 관련 전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국 단위의 무료 프로그램임.

- 화재 사관후보생 프로그램은 12개월간 지속되며, 소방 기술, 호흡기 사용법, 응급 처치 및 상해관리 기술, 화재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음.

(2) 청소년 대상 화재예방 프로그램 (Juvenile Firesetters Intervention Scheme, JFIS)

- JFIS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부모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임.

- JFIS 프로그램은 런던소방청의 주관으로 운영되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지닌 전문가만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윤영배, 2017: 62).

- JFIS 프로그램은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각 연령대 별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며 어린이들도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화재 예방 교육을 제공함.

3)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1) THINK! (교통안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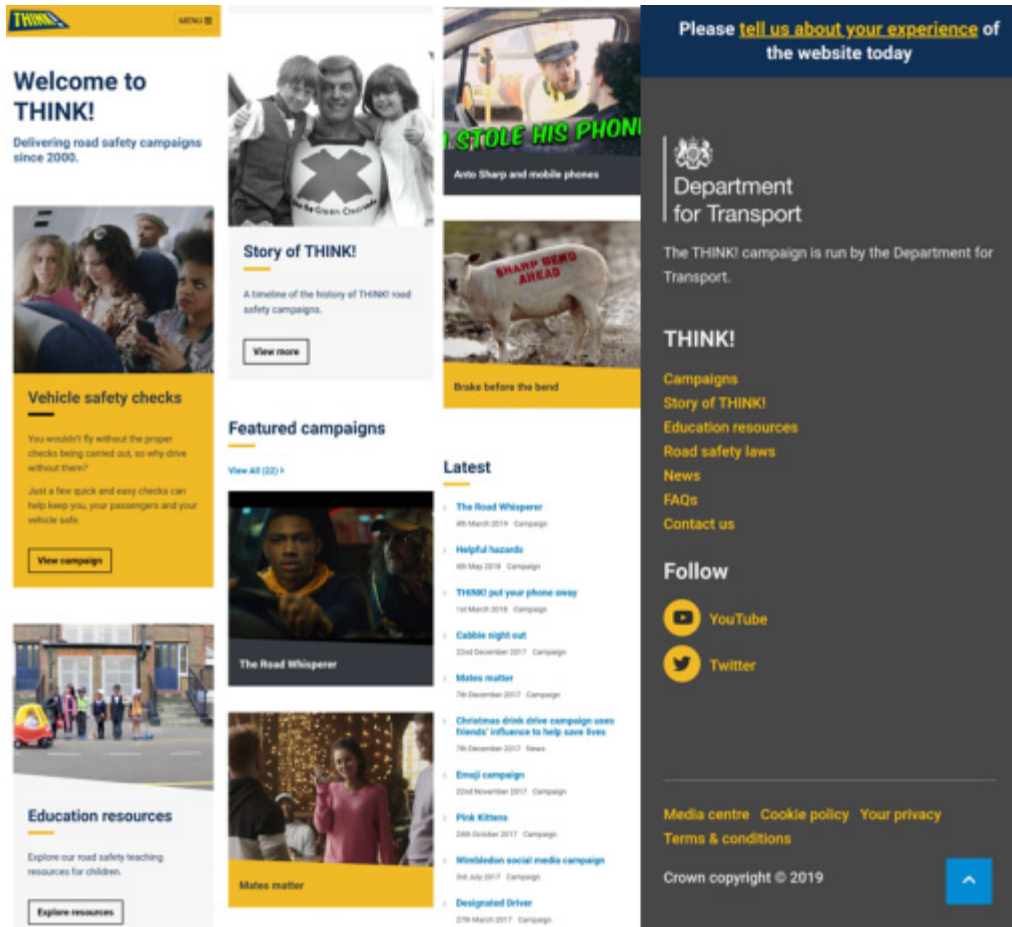
- Think! 캠페인은 2000년 교통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교통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도로 안전 정책임.

- Think! 캠페인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도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또한 Think! 캠페인은 차량 안전 점검, 안전 운전(휴대전화 사용 문제, 음주 운전

문제, 안전벨트 착용 등),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등에 대한 안전 교육 내용을 제공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교육 자료와 법률 자료, 도움말(advice) 등을 제공하고 있음(윤영배, 2017: 63).

[그림 3-2] 영국 Think 캠페인의 관련 웹사이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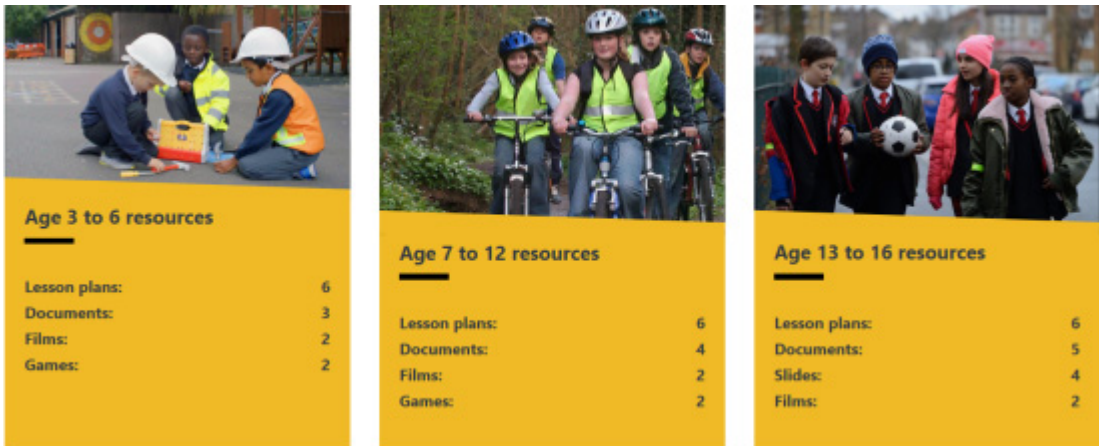


출처: 영국 Think! 캠페인 홈페이지⁶⁾

6) Think! 캠페인 홈페이지(<https://www.think.gov.uk/>) 접속일: 2019.08.15.

- 그 밖에도 Think! 캠페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자료 및 교재, 동영상, 교육 목적의 게임 등이 제공됨.

[그림 3-3] Think 캠페인 청소년 연령별 교육자료



출처: 영국 Think! 캠페인 홈페이지⁷⁾

3. 일본

1)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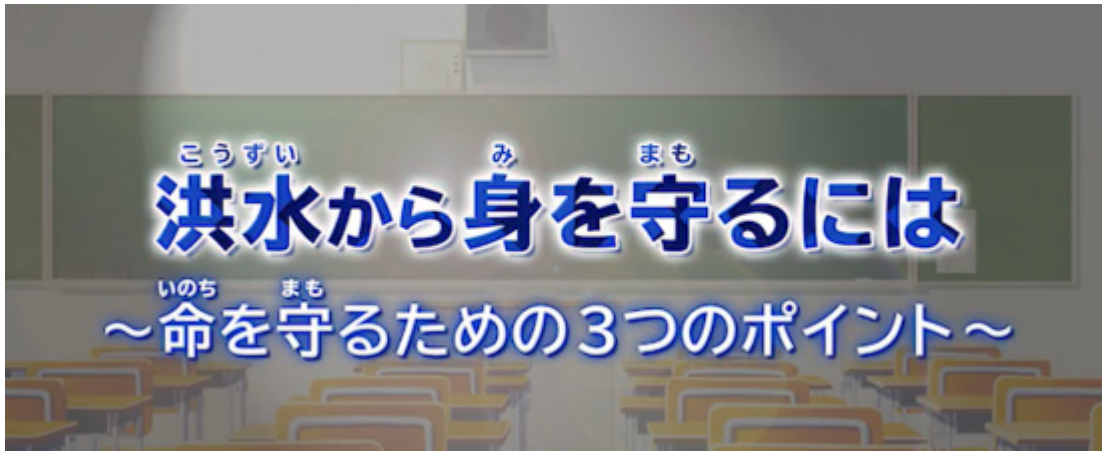
(1) 아이들을 위한 영상 시리즈(子ども向け動画)

- 아이들을 위한 영상 시리즈는 2018년(헤이세이 3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제작된 영상물로, 재난 상황 시 상대적 취약 계층인 아이들의 재난에 대한 이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교육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 영상은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상황에 대하여 제작되었으며, 각 재난에 대한 영상은

⁷⁾ Think! 캠페인 홈페이지(<https://www.think.gov.uk/>) 접속일: 2019.08.15.

재난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 재난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한 지식에 대한 실천의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4] 아이들을 위한 영상: 홍수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포인트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⁸⁾

- 영상은 근처에 어른이 없을 때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진행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독자적인 재난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또한, 실제 재난 상황의 안내 방송 등을 수록하고, 재난 상황 시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위험, 피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제공됨.
- 그 밖에도 방재를 위한 시각자료집, 교육용 게임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총무성 소방청(総務省消防庁)

(1) 지역방재스쿨(地域防災スクール)

- 2010년(헤이세이22년)부터 일본 총무성의 소방청에서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임.

⁸⁾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river/bousai/education/movie/movie.html>. 접속일: 2019.09.28.

-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아동, 학생과 같이 성장 단계의 대상을 위주로 체계적인 방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문화의 형성 및 추후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특정 재난에 대한 관련 지식, 준비 및 예방, 유사 시 필요한 지식, 실기 코스 등의 단계로 분류하여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음.
- 소방청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재스쿨 지원 교재, 각종 방재 자료 등의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지역 소방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원, 대원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림 3-5] 고베시 지역방재스쿨 소방직원 방재교육



출처: 일본 총무성 소방청(総務省 消防庁). “地域防災スクールの推進”, 消防の動き, 09年 4月, 2009.

2) 챌린지 방재 48(チャレンジ! 防災48)

- 챌린지 방재 48은 2010년(헤이세이22년)부터 소방청에서 발행한 학습용 자료로, 재난 시 안전의 확보, 초기 소화 작업, 구출구조를 위한 실천적인 행동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자료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상 및 일반인 등급의 3단계로 구분되어 제작되었음.
- 자료 제작 후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특별활동·통합적 학습시간 등의 특별교과시간에 편성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활용되었음.

3) 센다이(仙台)

(1) 방재환경도시 만들기 (防災環境都市・つくり)사업

- 2011년 9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센다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각종 기후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경제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림 3-6] 센다이 방재 지도 만들기



출처: 센다이 시[9]

- 본 캠페인은 크게 도시의 방재 인프라·안전시설 확보와 관련된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 커뮤니티 구축 워크숍 개최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들기(ひとづくり)’로 구성되어 있음.
- ‘사람 만들기’는 방재 역량을 지닌 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상황을 상정한 통합 훈련, 매뉴얼 작성, 센다이 지역 방재 리더 육성, 아동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재 지도 만들기, 센다이 방재 워크숍 등 안전문화 고취를 통한 방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구명네비(救命ナビ)

[그림 3-7] 센다이 구명네비



출처: 센다이시 소방국(仙台市 消防局), “応急手当e ラーニング &救命ナビアプリケーション”, 仙台市消防局 資料, 2013.

9) 仙台, <https://sendai-resilience.jp/efforts/government/human/education.html>, 접속일: 2019.0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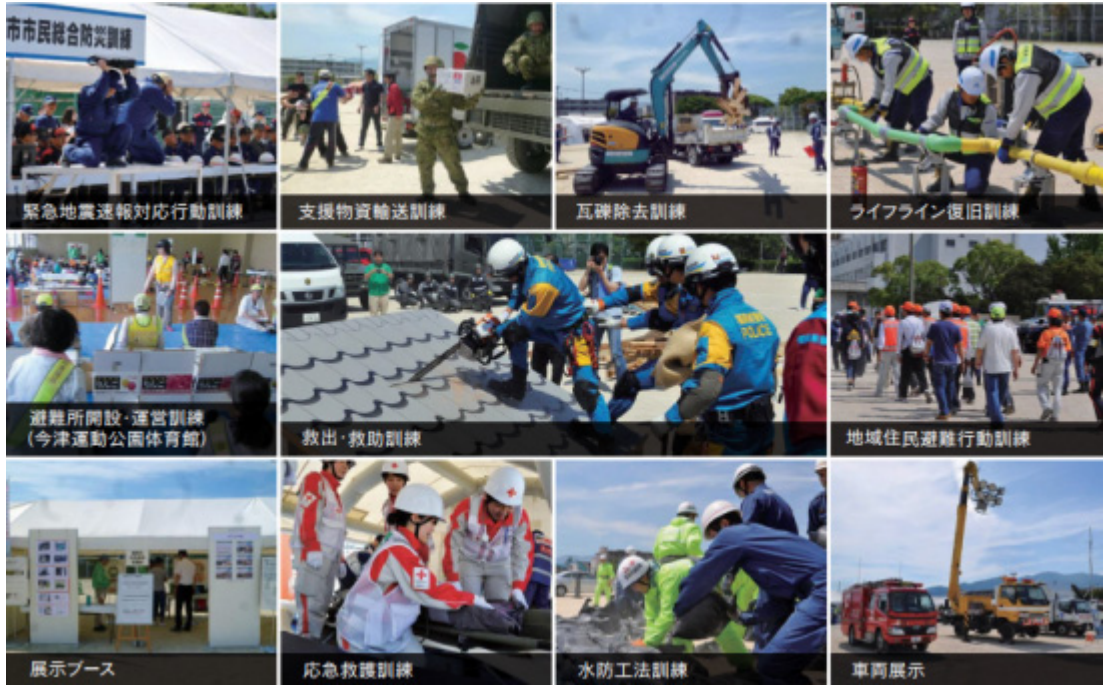
- 2019년(헤이세이 31년) 센다이 시에서 개정한 센다이 지역 방재 계획 개정의 일환으로 제작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재난 상황 혹은 일상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
- 어플리케이션은 위기상황에서 구급차 혹은 진료를 받기 이전 취약시간대의 대응능력 증진을 위해 고안되었음.
 - 심폐소생술, 지혈방법 등 응급 구호법에 대한 위기상황에서의 초동조치를 수록
 - 인근의 병원, 시설에 대한 긴급 연락망, 지도를 수록하여 초동조치 이후 대처방안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센다이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들의 긴급 구호와 관련된 E-learning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4) 후쿠오카(福岡)

(1) 후쿠오카시민 종합방재훈련(福岡市 市民総合防災訓練)

- 후쿠오카 지역 방재 계획에 의거 후쿠오카 시 주관으로 실행되는 종합 방재훈련으로, 후쿠오카의 재난 발생상황을 상정하고,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력을 제고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훈련에는 자위대, 후쿠오카 기상청, 일본 적십자, 후쿠오카 병원협의회, 경찰, 소방청 등 단체가 참여하여 유관기관들과 시민들의 종합적 재난 대응능력을 증진하고자 하였음.
 - 주로 지진,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을 상정하고 있음.
 - 훈련은 구출구조, 대피소 개설·운영, 수방 공법 훈련, 비상식 시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재난의 통제와 더불어 복구와 관련된 훈련도 포함하고 있음.

[그림 3-8] 2018년도 후쿠오카 시민 통합방재 훈련 내용



출처: 후쿠오카시(福岡市), “平成 30年度 福岡市市民 総合防災訓練”, 福岡市 市民局 防災・危機管理課 資料, 2018.

(2) 후쿠오카 시 어린이 안전계획(福岡市 子どもたちのセーフティプラン)

- 아이들을 위한 세이프티라인은 2009년(헤이세이 21년)부터 후쿠오카 시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교육용 자료임.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어린이들이 재난이나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어린이들에게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에 처했을 때 대응방안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된 교재임.
- 아이들을 위한 세이프티라인은 방재, 방범, 교통안전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임.
- 방재에는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폭우, 대규모 지진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일상에서의 예방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 방범에는 아이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죤인 납치 등과 같은 범죤과 더불어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인터넷 상의 범죤 위험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수록됨.
- 교통안전에는 자전거를 탈 때 바람직한 복장, 장비, 에티켓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음.

(3) 가을철 교통안전 운동 캠페인(秋の交通安全運動 キャンペーン)

- 후쿠오카 시에서 매년 9월 중순에 실시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자동차, 전철, 자전거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음.
- 후쿠오카 시에서 캠페인을 주관하여 진행하며, 그 해의 테마에 따라 지역 자전거 연맹, 교통안전협의회, 택시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지원함.
-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사고예방, VR 교통사고 체험 등 매년 다른 프로그램으로 캠페인을 구성하여 진행함.

제2절 안전문화운동 국내 사례

1. 중앙정부

1) 안전신문고

(1) 안전신문고 운영 형태

- 2014년 8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보다 더 세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제보를 받아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이 제시되었고, 기존의 국민신문고 내에서 운영되던 안전신고 시스템을 독립시켜 2014년 12월 12일 국민안전처는 안전제보만을 접수받는 안전신고포털 사이트 ‘안전신문고(www.safep eople.go.kr)’를 개설하였음¹⁰⁾11).
- 안전신문고는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사회안전, 해양안전 등의 하드웨어 측면부터 기타 및 다부처를 대상으로 한 관행, 법·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사항까지 대상으로 인식하여 접수를 받고 있음.
- 또한 안전신문고는 국민행동요령, 홍보영상, 재난안전뉴스속보, 연합뉴스TV, 법령정보, 재난종합상황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안전신고 및 처리 현황

① 안전신고 및 관련 뉴스 보도 통계

- 안전신문고에서 제공하는 안전신고 통계현황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8월

¹⁰⁾ 현재 안전신문고는 <https://www.safetyreport.go.kr> 로 운영됨.

¹¹⁾ 안전신문고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신고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

31일까지의 안전신고, 연합뉴스 보도, 웹수집뉴스(인터넷에서 수집한 사회, 생활분야 뉴스를 유형에 따라 분류)를 바탕으로 소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3-9]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예시

신고분야	안전신고	연합뉴스	웹수집뉴스
	2014-12-01~2019-08-31	2014-12-01~2019-08-31	2014-12-01~2019-08-31
교통	627,725	38,752	2,898,621
시설	315,186	295	4,851
생활	110,533	4,767	15,049
사회	93,428	60	2
산업	48,184	2,055	29,052
학교	46,924	169	949
기타	35,134	3,182	112,730
미지정	911	0	0
기타(제안)	332	0	0
해양	224	6,412	67,385
총계	1,278,581	55,692	3,128,639

출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¹²⁾

- 총계를 살펴보면 웹수집을 통한 안전관련 뉴스가 3,128,639건, 안전신고가 1,278,581건, 연합뉴스를 통해 보도된 안전관련 이슈가 55,692건으로 집계되었음.
- 신고분야를 살펴보면 안전신고를 기준으로 교통분야가 가장 많았고(627,725건), 가장 적은 분야는 해양분야로 224건이 집계되었음. 한편, 인터넷에서 수집한 뉴스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통분야가 2,898,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분야는 사회분야로 2건으로 집계되었음.

¹²⁾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 접속일 2019.08.31.

② 안전신고 통계

- 2014년 12월 안전신문고 웹이 개설됐을 때부터 2019년 8월까지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75,081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답변이 완료된 것이 1,272,729건으로 전체의 99.8%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졌음.
- 지역별로 살펴봤을 경우, 전술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도로서 신고 311,809건에 답변완료는 311,412건으로 전체 신고의 99.87%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졌음.
 - 한편, 가장 높은 답변율을 기록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체 신고 25,391건에 대해 25,379건의(99.95%) 답변이 완료됨.

③ 안전제안 통계

-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해당 기간 동안 전체 3,524건의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3,520건의 답변이 이루어져 99.9%의 완료율을 나타냄. 지역별로 살펴봤을 경우, 가장 많은 제안이 제기된 곳은 경상남도로 제안 853건에 답변이 852건이 이루어졌음.

(3)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및 주요처리 사례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신고서 작성→ 기관선택→ 신청완료의 과정을 거침.
 -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에 관리됨.
 -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발생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 신고 과정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하며 인증과정을 거침. 또한 안전신문고는 주요 처리 사례를 다음과 같이 포털에 제시하여 보여줌.

[그림 3-10] 안전신문고 주요 처리 사례


주요처리사례

안전신문고 소개 · 주요처리사례


다리 기둥 파손

- 신고일 : 2019-07-28
- 신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73-5
- 처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전



후



총 : 1,171건 현재 : 1/118페이지

제목

검색

번호	제목	신고일
1171	도보이용불가	2019-07-31
1170	다리 기둥 파손	2019-07-28
1169	인도 잡초제거	2019-07-25
1168	사라진 맨홀뚜껑	2019-07-25
1167	쓰러진 반사경	2019-07-23
1166	청천 우려	2019-07-22
1165	통행 방해	2019-07-21
1164	계단 파손	2019-07-18
1163	쓰러진 나무	2019-07-17
1162	보행자 낙하위험	2019-07-17

출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³⁾

(4) 안전신문고에 대한 비판

- 안전신문고는 시민이 지역사회 등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해 신고하면 7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신속성과 대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윤영배, 2017). 또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시민들의 편의성 제

¹³⁾ 안전신문고 주요처리사례(<https://www.safetyreport.go.kr/#introduction/mainProcessCase>) 접속일 2019.08.31.

고보다는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에 강제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은 사례 또한 존재함¹⁴⁾.

- 또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진단이라는 안전신문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존재함(최호진·오윤경, 2015).
- 행정안전부는 학생들의 안전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왔으며, 2018년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에 대해 신고할 경우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과 하루 최대 4시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함¹⁵⁾.

2)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3 안전문화대상을 시작으로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우수사례의 발굴 및 보급 목적으로 시행되어, 2017년부터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안전문화 유공자 포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응모부문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으로 총 5개 부문에서 선정됨.
- 공모할 수 있는 주제는 각 부문에서 조직구성원·시민 등과 함께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함¹⁶⁾.

14) “안전신문고 활용 ‘저조’...공무원 동원 ‘강제설치’ 급급”, 디지털 타임스(2015.05.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50802100860800001 접속일 2019.08.15.

15)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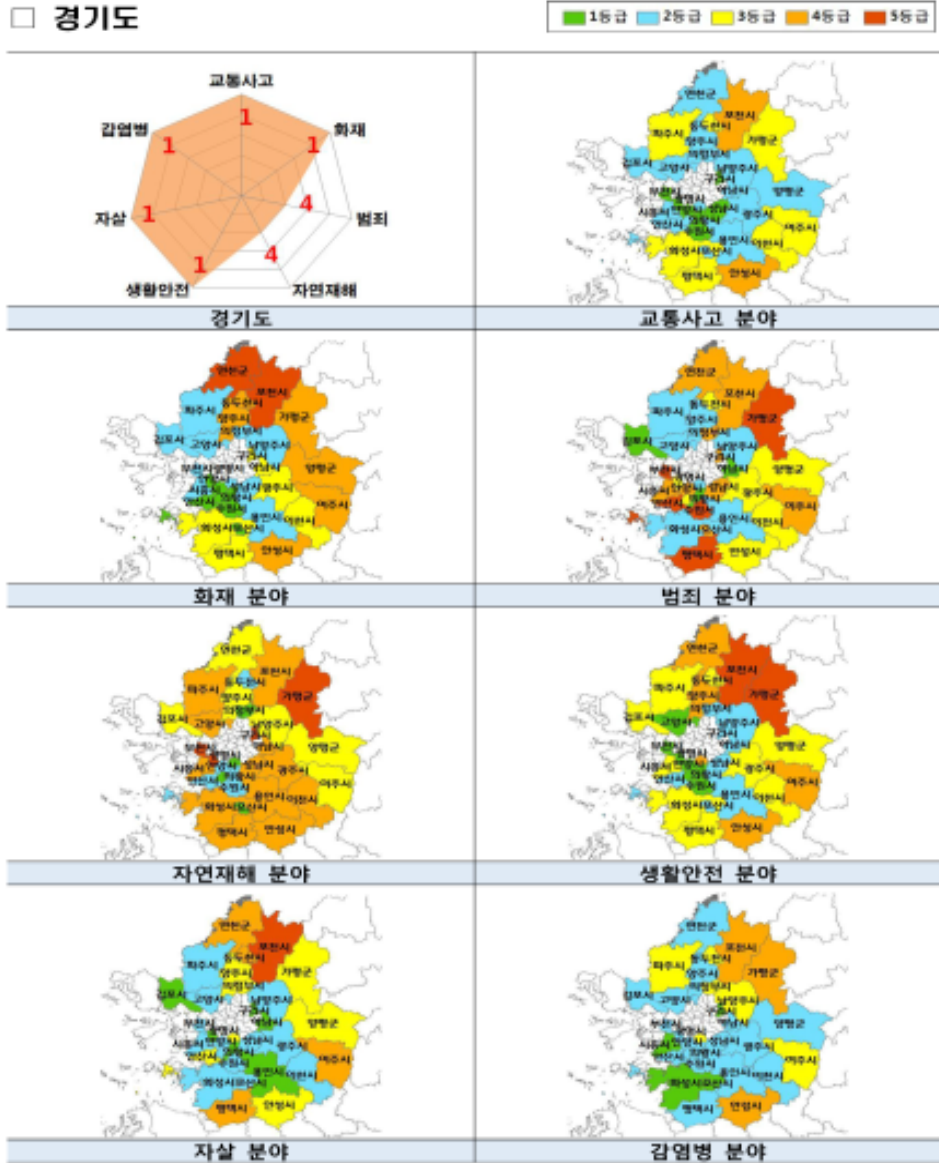
16)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07.15.)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비영리단체는 지역주민 대상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공공기관·민간기업은 안전관련 사회공헌활동으로 부문별 주제를 한정함.
-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주로 살펴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과제도출 배경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활동목표 등 활동 내용의 적절성 여부 포함
 - 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과 확산을 위한 조직 내·외 협업관계와 협업노력을 포함
 - 예: 조직구성원 및 지역사회(임직원 동호회, 지역공동체 활용여건), 공공 및 민간단체(협업 추진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NGO, 민간기업) 활용 여건, MOU, 합동 캠페인 등
 - 기존 혹은 타 기관과 차별화된 장점, 해당 활동의 장애요인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
 - 예: 안전문화 브랜드 개발, 안전문화 콘서트, 지역특화 민·관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체 구성 등

3) 지역안전지수

-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통계 및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별 안전 수준을 7대 분야로 구분하여 계량화한 수치를 의미하며, 매년 12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음.
 - 안전지수의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범죄, 화재, 자연재해, 자살,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 등임.
 - 안전지수의 공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함.

[그림 3-11] 경기도 안전지수 현황(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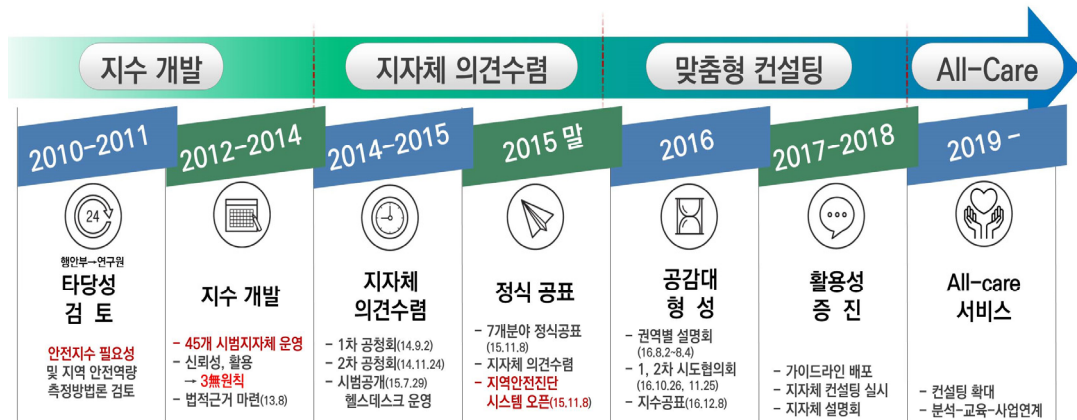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2018)¹⁷⁾

17) “2018년 지역안전등급지도(지역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2.)

-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 측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안전지수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2014~2015년에 걸쳐 지자체를 설득한 이후, 2015년 정식으로 공개되었음.

[그림 3-12] 지역안전지수 추진현황



출처: 행정안전부¹⁸⁾

- 한편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기준의 안전 관련 통계자료들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각 안전 유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안전 수준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도·농복합도시, 도시, 농촌 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대평가로 등급 구간을 구분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등급만으로 안전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는 한계점 등을 지남(행정안전부, 2018)¹⁹⁾.

¹⁸⁾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웹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접속일 2019.08.10.

¹⁹⁾ “2018년 지역안전등급지도(지역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2.)

2. 민간기업

1) 현대캐피탈 -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시행

- 현대캐피탈의 EHS는 크게 하드웨어 측면에서 신축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사옥안전 점검 및 시설물 점검, 사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EHS규정 수립 및 공표,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한 안전교육, 임직원 자녀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함.
 - 기존 건축물 안전 점검실시 결과(연 1회), 총 약 6,700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을 진행하고, 임직원 근무공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 임차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상이 보도되자 임직원의 건물 재진입 금지, 인근 거점 임시 근무 조치, 신규 임차지 확보 후 이전 등을 2주 내에 모두 조치 완료함.
 - 시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안 문제점 개선 및 경과를 확인하고 있음.
 - CEO의 신규사옥 방문 동선 및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방문 동선의 경우, 방재실 → 수변전실 → 기계실 → 기타 부속실 → 주차장 → 공용 공간 → 사무 공간 순으로 이루어짐. 주요 점검사항으로 제한구역 장비안전 점검, 층별 대피시물레이션 확인, 사옥관리소 인원대비 방독면 보유 수량 확인 과정 등임.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짐.
 - EHS 관련 사내 규정을 수립하여 매뉴얼화함.
 - EHS 교육(EHS관리규정 제12조, 13조): 모든 임직원은 EHS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야 함.
 - 본사 및 거점 자위소방대 편성 운영(EHS관리규정 제18조)
 -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및 비상연락망 구축(EHS 관리규정 제21조, 22조)
- EHS 교육 훈련은 지속적으로 수행됐으며, 전직원 대상 대피 훈련, 각 사옥환경을 기

준으로 시뮬레이션 후 대피계획 수립, 다중이용시설 대피 훈련, 안전가이드북 배포, ADE, 응급비상벨을 전사옥에 비치함.

- 입사한 첫 날 첫 시간의 교육은 안전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 용품을 임직원이 통합 구매로 구입함.
-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사옥 직원 안전 우수 사례를 분기별로 2회씩 실시함. 그 결과 2017년 기준 교육 누적인원 60,484명, 교육누적시간은 181,452시간을 달성함.

2) 삼성서울병원 - Walk Rounds Program

- 삼성서울병원의 Safety Walk Rounds는 매일 주요 경영진이 환자접점부서를 방문하여 환자안전에 대해 직원면담, 현장관찰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주제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임.
 - 참여자: 원장, 간호본부장, 질관리 부서장, 감염관리부서장, 보건관리자, 부서 내 환자안전담당자(질관리 부서, 시설팀, 의공기술실, 감염관리실)
 - 2012년 4월부터 2017년까지 총 56회 실시되었음.
- Patient Falls Walk Rounds는 낙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현장부서에서 사전점검 시행 후 현장방문을 통해 낙상 위험 요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 및 개선함.
 - 참여자: 다학제간 낙상관리팀원(의사, 간호사, 시설팀, 약사, 방사선사 등)
 - 2015년 9월~2016년 9월(분기 1회, 총 5회), 2017년(매월 1회)
- Facility Walk Rounds는 법규 및 규제만으로는 사고를 근절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장단과 전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안전점검을 전사적으로 시행(37일간).
- Weekly Patient Safety Report는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시작 전 한 주 동안 보고된 환자안전사례를 첫 번째 안건으로 발표함으로써 환자안전에 대한 관리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환자안전사례의 근본원인을 찾아 적극적 개선을 지원함(2017년 9월 기준 202회 실시).

- 삼성서울병원 전직원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 안전 인식도 조사를 2013년부터 2년마다 시행함.
 - 미국의 AHRQ(Agency Healthcare Research Quality)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병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총 44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함.
- 그 밖에도 안전문화수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
 - 삼성그룹은 규제만으로 사고를 근절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고예방 활동이 안전 환경 부서만의 업무라는 생각을 지양하고, 전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룹 공통의 안전문화수준 평가기법을 개발·운영하고, 그 결과(60개 문항)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통합 관리함.
 - 삼성 그룹 공통 SSCA(Samsung Safety Culture Assessment) 도구를 사용하며, 6개월 미만의 신입 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함(2015년부터 매년 실시).

3. NGO -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

1) 아이즈업 캠페인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캠페인이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등하교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하여,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사고예방 보행안전 교육으로서 실시됨.
- 주요 프로그램은 온라인 서약 페이지 운영, 온라인 영상 배포 및 캠페인 홍보,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참여 홍보, 초·중·고등학생 관찰조사, 설문조사 및 토론 실시, 초등

학교 대상 이론 및 체험교육을 진행하였음.

2) 엄마손 캠페인

- 2002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의 약 12.7%가 교통사고이며(2015년 통계청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중 사망자가 65%로 가장 많은 비중(2015년 경찰청 통계자료 기준)을 차지하여, 노란색 피켓을 손모양으로 만들어 이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캠페인을 실시함.

[그림 3-13] 엄마손 캠페인 사례 예시



출처: 세이프키즈코리아²⁰⁾

²⁰⁾ 세이프키즈코리아(<https://www.safekids.or.kr/>) 접속일 2019.08.15.

- 세이프키즈코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7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140만 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전국 252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여 진행됨.
- 2017년 엄마손 캠페인은 전국캠페인, 서울캠페인으로 진행됨.
 - 전국 캠페인은 2017년 3월 한 달간, 전국 252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28,825 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서울캠페인은 2017년 4월 20~23일 3일간, 서울시 안전체험 한마당 방문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교육 및 안전횡단 실습교육을 진행함.

3) 사각(死角)사각(四刻) 캠페인

- 사각(死角)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사각(四刻), 즉 네 가지 사항을 마음 속에 새기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기획된 캠페인으로 2013년부터 진행중임.
 - 네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② 차량 승차 전 잠시 차량 주변을 확인, ③ 갓길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를 대비하여 저속주행, 전방주시, ④ 어린이들이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차량과 놀이장소를 구분.
- 사각사각 캠페인은 온라인 교육으로써 온라인 안전교실을 진행하였고, 오프라인 교육을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 실내 공간에서는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 웹보레 대리점 연계 교육, 서울시교육청 연계 초등학교 교육을 진행함.
 - 실외 행사의 경우 세이프 서울 행사 참여, 부평 사회복지박람회 참여 등을 진행함.

[그림 3-14] 사각사각 캠페인 사례 예시



출처: 세이프키즈코리아²¹⁾

²¹⁾ 세이프키즈코리아(<https://www.safekids.or.kr/>) 접속일 2019.08.15.

4. 광역자치단체

1) 대구광역시 - 최우선과제로서의 “안전도시”

- 민선 6기 대구광역시장으로 당선된 권영진 시장은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를 취임사에서 발표하며 안전도시 만들기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음.
- 2013년 전국 최초로 안전문화팀을 신설하고, 2015년에는 재난안전실을 3급에서 2급으로 격상하며 위상을 제고하였음. 2017년에는 재난안전실 근무가산점 부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
- 5가지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안전한 대구 만들기를 추진함.
 - 전략과제는 안전문화운동, 안전신고, 안전교육, 공동체 안전문화, 교통안전으로 이루어짐.
- 전략과제 I 은 안전문화운동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됨.
 - 전국에서 최초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2013.07.24.),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함(연 4회).
 - 민간 주도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31곳과 공공기관 12곳이 참여하여 분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을 공유함.
- 전략과제 II는 안전신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됨.
 - 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양성과정에서 안전신문고 소개, 민방위대원 교육 및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홍보를 실시.
 - 2017년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2018년 추진함.
 - 안전신고 홍보를 위해, 자체 홍보안을 제작하여 대형 전광판(5개), 교통매체, 지하철 역사를 매체로 활용함. 축제 행사장에서 배전반, 환풍구 등 위험 구조물에 안전신문고 홍보(116개소), 아파트 밀집지역, 시민쉼터 지역에 대형 현수막을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홍보.

- 전략과제Ⅲ은 안전교육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됨.
 - 시민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연간 6만명),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운영(연간 17만명), 가족안전 119체험행사(125,111명), 지역공동체 ‘안전지킴이’양성(3회 2,896명), 어린이·청소년 안전체험 캠프 운영(4회, 5,520명)
 - 지역 언론인 TBN대구교통방송과 협력하여 ‘재난안전브리핑’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안전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함.
- 전략과제Ⅳ는 공동체안전문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시행됨.
 -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실시(10개 마을, 시비 60억, 2014~2020년 사업),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소외계층 안심주택 만들기 사업 등
- 전략과제Ⅴ의 교통안전문화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됨.
 - VISION 330 계획을 수립, 교통사고 30% 감소 특별대책을 추진함.
 -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운동을 추진.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개최(500명), 어린이 교통랜드 체험교육(연간 70,000명), 운수 종사자 안전 및 체험교육(28,000명), 사고다발지역 맞춤형 캠페인(10회) 등
-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인구수 대비 특·광역시 1위(2017년 기준)
 - 안전마을만들기 완료된 지역에서 5대 범죄 발생 건수 80% 감소
 - 2017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 2016년 지역안전지수(화재분야, 교통분야) 전년 대비 1등급 상승.

2) 전라북도 - 기존 플랫폼의 활용

-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의 전략적 홍보와 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된 프로그램은 안전신문고 정규 방송 운영,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을 운영함.

- 안전신문고 정규방송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TBN전주교통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난발생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평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신문고 홍보 방송을 송출함(월4회).
- 안전신문고의 홍보를 위해 월 2회 방송에서 ‘신문고를 올려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안전신문고 앱(APP) 설치 및 신고요령을 알리고, 안전신고처리 우수사례 등을 소개함. 한편 TBN전주교통방송 홈페이지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앱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를 홍보함.
-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시행규칙 제21조와 전라북도 고시 제2017-89호 전라북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진행됨. 지급대상은 개인 90명, 기관 3개 시·군이며 총 지급예정액은 1,200만원임.
-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시설노후화, 관리소홀,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재난위험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난위험시설·지역 중 안전사각지대 및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발굴·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10월 구성됨.
 - 구성인원은 436명이며, 시·군별로 20~50명을 구성함.
 - 민간예찰단에 의한 안전신고는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2,391건임.

5. 기초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 맞춤형 안전문화

-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최상위 핵심전략 및 규정목표 중 하나로 ‘안전’을 제시하며, 대상별, 위치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대상별 프로그램 중 주요한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다둥이가정 안심보험 가입지원: 셋째이상 자녀의 보험을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하며, 보험 신규가입 가정에 ‘안전지킴이’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 매뉴얼을 배부하고, 가정 환경 점검 및 부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2016년 기준 308가정).
- 독거노인가구·경로당 재난예방 사업: 재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및 민간주도(자율방재단)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폐지줍는 어르신 얼음조끼, 안전수레 지원: 폭염취약계층(생계형 폐지 줍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얼음조끼 150개, 비상용 얼음주머니 300개를 긴급 지원. 추가적인 사업으로 안전손수레 및 야광띠를 보급 지원함.

[그림 3-15]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사례 예시



출처: 송파안전체험교육관²²⁾

- 여성안심 프로젝트: 여성안전현장 선포 및 여성안심스카우트, 여성안심보안관(불

법촬영 감시), 안심지킴이 집 운영 및 여성문화회관 등에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함.

- 전지역주민 대상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소유의 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직장인·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운영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차량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그림 3-16] 송파구 어린이 대상, 학교 근처 안전문화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 서울 송파구편, 2017, p.10.

□ 위치별 프로그램 중 주요한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 주변 옐로카펫: 학부모회, 국제아동인권센터와의 협업과 동부화재의 후원을

22) 송파안전체험교육관(<http://www.isafeschool.com/songpa/>) 접속일 2019.08.12.

통해 사업을 확대하였음.

- 스쿨존 차량제한, LED 표지판 설치: 등교 시간 차량통행제한 제도를 총 3개교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LED 교통표지판을 총 58개소, 스쿨존 전역에 설치함.
 - 공중화장실 및 민간화장실 비상벨 설치: 전체 민간개방화장실 48개소 중 24개소 설치(전 민간개방화장실에 설치 목표), 송파구 전체 공중화장실 일반비상벨 설치 완료(43개소).
- 민간 협력 프로그램 중 주요한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송파안전보안관(SECOM) 안전협약: 민간경비 전문업체 에스원(SECOM)과 협약 하여, 공원·학교 주변 등 야간시간대 예방 순찰 및 청소년 호신술 교실 운영.

[그림 3-17] 송파구 카시트 대여사업 및 투명우산 만들기 체험 행사 예시



출처: 행정안전부(2017). 전개서, p. 16.

- 어린이 카시트 대여사업, 투명우산 나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도로교통공단, 현

대모비스 등의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어린이용 카시트 무상 보급 및 무상 대여 실시.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용 투명안전우산 나눔 및 만들기 체험 진행.

2) 부산광역시 북구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 부산광역시 북구는 2016~2018년 기간 동안 5대 분야 사망자수 감축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을 실시함. 사업비는 총 56억원(국비30, 시비 11, 구비 15)이며, 민관TF팀(9개 유관기관, 24개 민간단체, 북구청 14부서)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부산 북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부문 전국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됨.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은 크게 안전인프라 분야와 안전문화로 분류되어 추진됐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을 살펴봄.
- 안전문화운동의 전체적인 추진 현황은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구포중점개선지구 안전실태조사와 관련해 주민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음. 한편, 법무부가 지정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지 지역주민의 법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축제 시 안전문화운동 홍보관을 운영함.
- 교통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었음.
 -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2016.02.01~2016.06.30.)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2016.10.04, 2016.10.06.)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2016.02.01~2016.06.30.)
 - 교통무질서 행태개선 캠페인(2016.5.4.)
 - 구포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체험 교육(2016.08.29.~2016.11.21.)
- 화재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었음.
 - 북구 소재 요양병원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확인(2016.02.01~2016.06.30.)

- 구포시장 지진대응 주민 주도 훈련 실시(2016.08.29.)
- 소방서 길 터주기 운동(2016.08.29)
-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2016.09.05.~2016.09.08.)
- 취약지역 전기시설 안전점검(2016.08.19.~2016.08.20.)
- 범죄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었음.
 - 우리동네 톡톡 안심지도 제작비치 운영(2017.02.02. ~)
 - 북이마을 어르신 순찰대 운영(2017.3.10.~11.31. - 9개월)
 - 경찰서장 주재, 『통장연합회와 함께하는 간담회』 月1회 개최
 - 아동안전지도 제작 - 주관: 북구청(2017.05.16)
 -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안심구역內 벽화그리기 추진(2017.06.17)
 -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범죄 분석 T/F회의』 개최(2017.2.1.)
- 감염병 및 자살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었음.
 - 각종 건강정보제공 및 감염병 예방 홍보(상시)
 - 결핵 예방 집중홍보 캠페인(2016.05.11.)
 - 낙동강구포나루축제 연계 건강정보관 운영(2016.05.20.~2016.05.22.)
 - 의료기관, 올바른 손씻기 교육 실시(2016.09.26.~2016.09.27)
 - 자살 분야 지역사회 연계 강화 간담회 실시(2016.10.28.)
 - 자살 예방 캠페인(2016.10.31 외 13회)
 - 자살 예방 교육(2016.10.31 외 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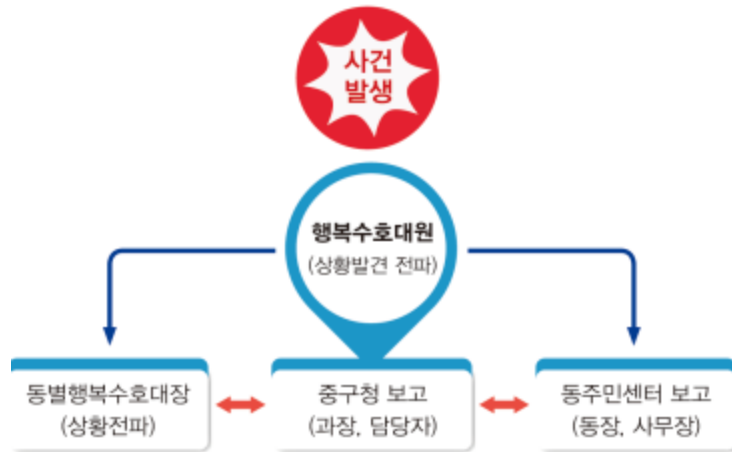
3) 대구광역시 중구 - 행복수호대

- 대구광역시 중구는 각종 재해 및 사회적 위험이 고조되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아동·여성의 지역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민선 6기 지자체장의 공약이

자 구정방침으로 선정되어, 2014~2018년 기간 동안 1억 5500만원(국비 10, 구비 145)을 투입하여 동네지킴이 행복수호대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음.

- 구성인원은 12개 동지역 199명이며,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의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 행복수호대의 운영은 아동·여성·청소년 안전분야, 지역사회 안전분야, 취약계층 돌봄분야, 마을공동체 구성운영, 여성친화분야로 역할 및 기능을 세분화하여 운영됨.
- 행복수호대의 연락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8] 대구광역시 중구 행복수호대 연락체계



출처: 행정안전부,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 대구 중구편, 2017, p.11.

- 행복수호대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은빛순라군: 지역 어르신들이 전통 순라군 복장을 하고 주야간 순찰을 통해 어린이·청소년·노인 등의 안전 귀가 및 범죄 사전 예방 활동
 - 행복수호대 행동 매뉴얼 제작 배부 및 합동간담회 개최
 - 동별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 우수동 시상(최우수, 우수, 장려)

- 중부경찰서와 은빛순라군 간 행복수호대 업무협약 체결
-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 활동, 범죄피해가정에 대한 봉사 지원
- 지진대비 주민대응반 교육
- 행복수호대 동별 대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 동별 행복수호대원 자체 순찰 활동 및 행복수호대 역량 강화(사례 발표: 12월)
- 행복수호대와 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

4) 광주광역시 남구: 안심(安心) 부영이 가게

- 광주광역시 남구의 안전문화운동의 특징은 주민참여에 기반한 문화운동이라는 점에 있음. 특히 봉선1동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안심 부영이 가게는 심야시간대에 운영 중인 상점 가운데 범죄 위협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긴급 피난처로 활용·협조 가능하도록 ‘부영이 가게’를 지정하여 심야시간대 지역사회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2014년 30개소 발굴을 시작으로 2017년 216개소까지 확대한 다음 2020년에는 500개소까지 확대할 것으로 목표로 선정하였음.
- 부영이 가게의 시스템은 주민의 도움 요청 → 부영이 가게의 보호 조치 → 112신고 (자동위치추적) → 112 출동 및 보호(경찰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7건, 2017년 8건이 접수되었음.
 - 2017년 부영이 가게의 대표적인 사례는 월산5동 중화요리집에서 폭행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오자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였음.
 - 2016년 부영이 가게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운1동 제과점에 늦은 저녁 학원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 부영이 가게에 두려움을 호소하여 부모님이 올 때까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
- 부영이 가게 이외에 매년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체험박람회와 어르신 안전체험박람회를 비롯하여 주민이 직접 제작한 16개 동 안전지도를 배포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안심학교를 운영하였음.

- 동시에 전문가를 바탕으로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 용역(2015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니터링 연구(2016년),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연구(2016~2017년)를 진행하였음.

[그림 3-19] 광주광역시 남구 부영이가게



출처: 행정안전부.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 광주 남구편, 2017, p.3.

- 주민참여 및 전문가에 기반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6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2016년)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2016년)
 - 봉선1동 안심마을 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2016년)
 - 봉선1동 2013년 범죄 건수 222건에서 2016년 173건으로 22% 감소.

5) 전라남도 순천시 : 전사적 안전문화운동

- 전라남도 순천시의 안전문화운동은 전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문화 기반(제도 및 조직), 시민주도 및 참여, 안전인재 양성, 안전인프라 조성을 핵심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정책을 추진하였음.
- 안전문화운동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문화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안전문화위원회 운영으로 안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안전문화 진흥협의회와 안전문화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진흥협의회는 안전사업을 총괄관리 및 평가하는 한편, 실무협의회는 2017년에는 7대 분야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하여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실무협의회는 시민안전리더 분과, 교통안전 분과, 노인안전 분과, 아동·청소년·여성안전 분과, 폭력·범죄예방 분과, 자살예방 분과, 재난·재해예방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었음.
 - 또한 지역사회 내의 민간단체들(자원봉사협의회, 의료기관, 방송국, 대학교)과 안전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음(안전공동체 업무협약, 안심원룸 업무협약, 공익적 재난방송 협약, 여성범죄 예방 업무협약, 자살예방 업무협약, 사회안전망 조성 업무협약).
- 시민주도 및 참여 차원에서 시민안전리더를 선정하여 육성함. 4개 분야에서 각 분야 경력자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하여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신변안전 4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학습을 통해 기본 실무교육을 실시함. 교육실적은 2017년 기준 8,594명임. 교육과정에서 통합예약 시스템을 온라인에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분야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그 외의 시민주도의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양심운전자 찾기 프로그램: 행복순천시민운동추진위원회 주관, 주민자치협의회, 로타리클럽 등 25개 시민단체 참여

- 교차로 교통질서 준수율 100% 도전 프로그램: 교차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교통질서를 준수하면 성공이며, 성공 시 성공지역의 교통사고 유가족 및 어려운 이웃에 물품을 전달함.
 - 노란 발자국 캠페인: 남산초등학교 학생 및 어머니회 등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 발자국 노면표시제를 부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이 우선입니다 캠페인: 피자, 치킨 등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야간 반사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캠페인
- 안전인재 양성을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통합관제센터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재난안전상황실 체험, 어린이 CCTV 체험, 소화기 체험 등
 - 어린이 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축대 부근, 전신주·공사장 부근 안전사고 대처 요령, 생활안전 신고 등의 생활안전교육 실시.
 - 생존수영 프로그램 및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이 외에 순천시의 산업특징을 반영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순천시 종합관제센터 운영: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CCTV 2,841대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함. 1,380건의 단속실적과 2017년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됨.
 - 독거노인 공동 안심주거제 9988 쉼터 운영
 - 도시공원 스마트 공원등 및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존(비콘) 설치
 -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택배 사칭 및 도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삼산동 주민센터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함.
- 순천시의 전사적인 안전문화운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순천시의 손상사망률은 2013년 인구10만명당 75명에서 2015년 인구10만명당 66.5명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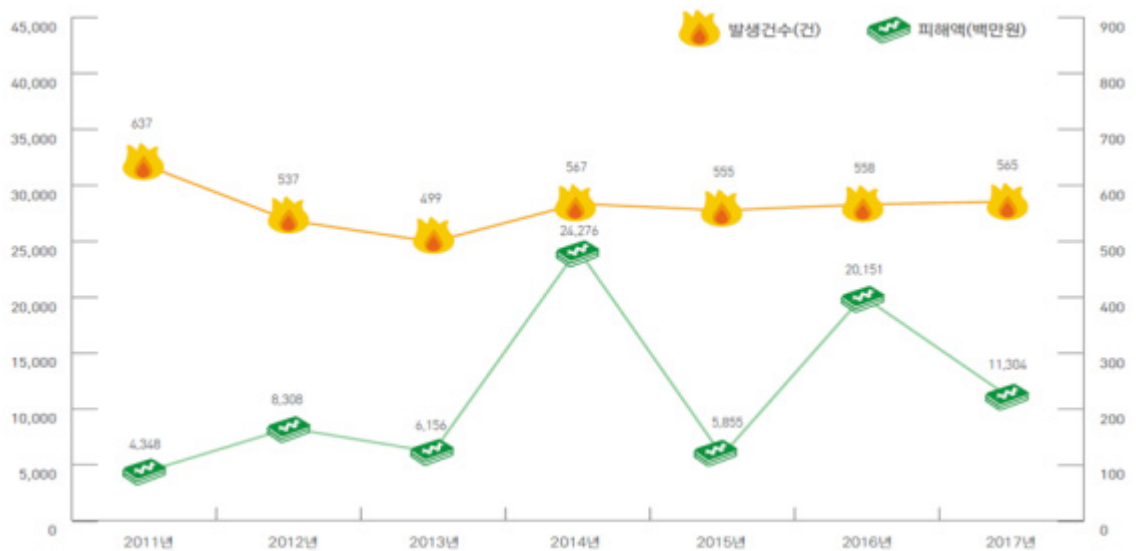
- 5대 범죄 발생 추이는 2014년 총 3,131건에서 2016년 2,55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절도 범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 교통문화지수의 경우 2014년 36위에서 2016년 5위로 상승하였음(국토교통부 통계, 인구 30만 명 미만 50개시 기준).
-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은 2013년 75.9%에서 2016년 85.4%로 증가함(통계청 시군구별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기준).

제3절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현황

1. 고양시의 재난안전 관련 현황

- 화재, 풍수해, 교통사고 등 고양시의 재난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 측면에서 교통사고와 화재안전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에 고양시 통계연보(2018)를 기준으로 고양시의 화재안전사고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최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동안 총 3,918건의 화재가 발생함.

[그림 3-20] 고양시 화재 사고 발생 추이



출처: 고양시(2018)²³⁾

²³⁾ 고양시, 「2018 고양통계연보」, 2018, p.22.

[그림 3-21] 실화 발생률이 높은 지역



출처: 변상호·조석현·이수아,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한국규제학회, 2017, p.61.

- 고양시는 화재사고로 인해 최근 7년동안 약 804억원의 피해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고양시에서 발생한 3,918건의 화재 가운데 실화에 의한 화재는 총 3,360건으로 전체의 약 8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인 부주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실화 발생률이 다른 원인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63동에서 약 664천 평방미터의 소실로 인하여 약 80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화재사고로 인하여 50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2017년 최근 한 해동안 발생한 화재 건수는 565건으로, 최근 7년동안의 평균(560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실화 발생을 또한

88.5%로 나타나 전체 평균 발생률(85.8%)보다 높게 나타나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덕양구와 일산 지역(일산동구 및 서구)의 실화로 인한 화재발생률은 각각 89.1%, 83.1%인 것으로 나타나 덕양구에서 개인의 부주의 등 실화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변상호 외(2017)에 의하면 고양시의 각 구별 실화발생률은 덕양구의 경우 토당동, 행신동, 주교동, 화정동, 성사동, 대지동, 관산동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산동구의 경우 장항동, 성석동, 백석동, 풍동, 설문동의 순으로, 일산서구의 경우 덕이동, 대화동, 일산동, 가좌동, 법곳동의 순서로 실화율이 높게 나타남(변상호 외, 2017: 61).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7년간 고양시의 전반적인 화재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637건 발생 이후 2013년 499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560건 내외 수준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고양시의 2007년 당시 인구수와 세대수가 각각 92만명, 346천세대인 것을 고려하면 2017년의 경우 인구수와 세대수 모두 1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건수(565건)는 2007년(783건)보다 약 27.8% 감소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최근 7년간 화재발생의 원인을 분석하면 3,360건(85.8%)이 실화(失火)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으며 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실화가 1,567건으로 약 40.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실화가 1,200건으로 약 30.6%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원인으로 나타남. 그 밖에 기계적 요인에 의한 실화가 10.8% (424건)을 차지하였으며 가스폭발, 화학적 요인, 교통사고 등 기타 요인에 의한 실화는 전체의 3.0%(117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발화 요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자연적 요인 또는 방화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558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14.2%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로 교통사고의 경우 고양시의 등록 자동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 또한 이러한 자동차수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중 2016년 이후 최근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555건(자동차 천대당 약 9.0건)으로 지난 7년간 평균 3,610건보다 약 2% 감소하였으며, 2017년과 2007년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각각 3,555건, 3,560건으로 나타나 지난 10년동안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시적인 감소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그림 3-22] 고양시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출처: 고양시(2018)²⁴⁾

- 최근 7년간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3,610건으로 자동차 1천대당 평균적으로 약 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평균 사망자는 53

²⁴⁾ 고양시(2018). 전거서, p.21.

명, 평균 부상자 수는 5,435명으로 나타남. 최근 7년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던 시기는 2015년으로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와 비교해 2017년의 경우 3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최근 7년동안 가장 낮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통사고 부상자 수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시기에 각각 5,777명, 5,732명의 교통사고 부상자가 발생하여 가장 부상자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3] 고양시 교통사고 피해 추이



출처: 고양시(2018)²⁵⁾

- 최근 7년동안의 고양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의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유형별 교통사고 건수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륜차 등의 순으로 사

²⁵⁾ 고양시(2018). 전계서, p.21.

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경기도 내 전체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4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량이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발생 건수 측면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자연재난의 경우 고양시는 최근 피해 발생 건수나 피해액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고양시는 2006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및 실종 1인, 침수면적 1,028ha, 약 10억 원의 피해액 등이 발생하였고 2010년에는 9억9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3년에는 2억7백만 원의 재난 피해액이 발생함(변상호 외, 2017: 71).
- 통계 자료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고양시는 최근 사회재난과 비교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고양시는 재난복구지원 차원에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관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 관리, 재난관리실태 고시, 저류지·저류조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지원, 자연재난 상황관리와 재해취약지역 지정관리,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음(변상호 외, 2017: 72).
- 이 밖에도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지역안전도평가 실시, 방재성능 목표 관리, 사전대비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음(변상호 외 2017).

2. 안전문화운동 관련 현황

-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시민들 대상의 안전문화운동, 안전교육 추진/실적 현황을 분석함. 고양시는 안전문화운동을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고양시, 2019),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안전과 주관 하에 안전문화운동을 크게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홍보의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음.

- 첫째로, 안전교육 측면에서 고양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와 시민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찾아가는 시민안전(체험)교육 서비스의 경우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 등 안전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 지진안전(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생활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을 제공함.
 - 2018년 기준 최근 한 해 동안의 실적 및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됨.

[표 3-1]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서비스 성과(2018년 기준)

	프로그램명	교육횟수(회)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3월 ~ 11월	시청각 교육	335	15,348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
	체험교육	33	2,182	학교,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
합계		368	17,530	

출처: 고양시(2019)²⁶⁾

- 또한 시민안전체험교실의 경우 시민에게 내실 있는 안전교육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가상 재난체험기회를 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사시 재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자치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음.
- 현재 민방위교육장을 시민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교사, 유관 기관, 일반시민 등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²⁶⁾ 고양시, 「2018 안전문화활동 추진 현황 보고」, 2019, p.1.

- 시민안전교육장은 2개층 건물에서 각 층에 구성된 재난홍보 영상공간, 지진체험장, 심폐소생술 실습장(이상 1층)과 화생방, 연기피난, 화재진압, 완강기구조대 체험장(이상 2층)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화재진압 및 연기피난체험, 비상탈출체험 등과 같은 체험교육이 제공됨.
- 일일 교육 적정인원은 80~120명으로 추산되며 2018년 기준 8명의 체험강사가 투입되어 운영됨. 체험방법은 실제 체험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4개조를 구성하여 순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운영됨.
- 2018년 한 해 동안 재활원, 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노래방 업주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관리자 150명, 고양시 공직자 및 철도공사직원 142명 등 1만여 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안전체험교실의 성과 및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2]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교실 운영 성과(2018년 기준)

공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	교사	복지시설	다중 이용시설	일반시민	합계(명)	비고
142	664	8,150	529	339	150	877	10,851	104회

출처: 고양시(2019)²⁷⁾

- 둘째로, 안전 홍보의 경우 고양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양시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 달에 한번 시민 스스로 위험요인을 안전점검하는 습

²⁷⁾ 고양시(2019), 전계서, p.2.

관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있음.

- 안전 홍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및 훈련,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재난유형별 시민안전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안전홍보물 배부(안전우산, 보온병, 안전가이드북, 칫솔세트 등), 안전신문고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됨.
- 2018년의 경우 매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1,710명이 참여함.

[표 3-3] 2018년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적

구분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 일시	장소	참석 인원
1	안전점검의날	겨울철 화재예방	1.05	덕양구 화정역 광장	50
2	안전점검의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2.08	일산서구 이화전월드 어린이집	10
3	안전점검의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3.07	덕양구 백양초등학교	70
4	안전점검의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4.06	일산동구 울동초등학교 등	80
5	안전점검의날	자전거 및 이륜차 안전운행	5.07	일산서구 원마운트 등	100
6	안전점검의날	풍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화활동	6.16	일산동구 도촌천 일대	80
7	안전점검의날	여름철 안전 및 물놀이 안전수칙	6.19	덕양구 충장근린공원 일대	400
8	안전점검의날	폭염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7.03	일산동구 백석중학교	200
9	안전점검의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8.02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80
10	안전점검의날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연휴 활동	9.18	화정역 광장	80
11	안전점검의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10.20	일산동구 일산문화광장	60
12	안전점검의날	서비스업 산업재해예방	11.06	스타필드 고양	100
13	안전점검의날	어린이 안전교육 및 캠페인	12.04	풍산초등학교	400
계					1,710

출처: 고양시(2019)²⁸⁾

²⁸⁾ 고양시(2019), 전계서, p.3.

- 셋째로, 안전 훈련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9 및 제35조에 근거하여 기관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고양시민의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표 3-4] 2018년 안전훈련 운영 실적

일자	훈련명	내용	참여 인원	비고
계	13회		4,490	
2018. 03.15.	문봉동 요양타운훈련	요양병원내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훈련	200	문봉동 요양타운
2018. 03.21.	전국 화재대피 훈련	다중이용시설 내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 훈련	1,000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등 4개소
2018. 04.18.	풍수해 침수대비 주민대피 훈련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	200	강고산마을
2018. 05.14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에 따른 합동 훈련	100	엠블호텔 고양
2018. 05.15.	불시 화재 대피훈련	청사내 화재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200	고양시청
2018. 05.16.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	지진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1,000	관내
2018. 05.18.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 화재, 기름유출 등에 따른 대응 훈련	240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2018. 09.20.	생물테러 재난대응 종합훈련	생물테러, 대형화재 등에 따른 대응 훈련	250	킨텍스제2전시장
2018. 10.31.	경기북부지역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시범훈련	대테러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200	스타필드 고양
2018. 11.07.	고양시청사 화재대피훈련	청사 내 화재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100	고양시청
2018. 11.07.	2018 긴급구조 종합훈련	방화에 의한 대형화재에 따른 대응훈련	200	엠블호텔 고양
2018. 11.1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대응훈련	100	일산수질복원센터
2018. 12.04.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지진, 비상벨, CPR체험 등	700	풍산초

출처: 고양시(2019)²⁹⁾

- 중점 훈련 추진방향으로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고양형 재난대비 훈련을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며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시민참여형 훈련, ICT를 활용한 미래지향적 재난대응 훈련을 추진함.
 - 최근 2019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 대비 실제 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자연재난 대응훈련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 한 해동안 전국 화재대피 훈련, 풍수해 침수 대비 주민대피 훈련,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훈련 등 13회 훈련을 시행하고, 4,490명이 참여함.
-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사회안전환경 조성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발적 봉사단체로서 시민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음.
-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의 경우,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문화운동에 시민 자율적 참여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 또한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표 3-5] 시민안전지킴이 지역구별 규모 현황

구분	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계	543명	256명	148명	139명

출처: 고양시(2019)³⁰⁾

-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의 경우 각 동 단위로 39개동 40개 단체(송산동 2개 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약 5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음.

29) 고양시(2019), 전계서, p.4.

30) 고양시(2019), 전계서, p.5.

- 시민안전지킴이는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의식을 높이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여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청소년 선도 활동, 범죄예방활동, 안전생활 위험요소 모니터링과 신고활동 등이 포함됨(고양시, 2019).
- 전년도 성과로서 위험요소 점검활동, 범죄예방 및 안심귀가 지원, 교통질서 참여, 안전 홍보, 안전환경 정비 등 30,078건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 실적 및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표 3-6] 2018년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내역

구분	합계	위험요소 점검	범죄예방 안심귀가	교통질서	홍보 (행사/훈련)	안전환경 정비	기타
계	30,078	11,267	8,932	2,234	814	4,548	2,283
덕양구	13,608	4,668	4,621	665	422	2,022	1,210
일산동구	8,006	3,029	2,188	1,113	154	977	545
일산서구	8,464	3,570	2,123	456	238	1,549	528

출처: 고양시(2019)³¹⁾

- 고양시는 이러한 안전문화운동을 바탕으로 2020년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개편, 이동안전체험 교육버스 운영을 통한 ‘고양형 안전배움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음.
-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의 경우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2020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경기도의 ‘2020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9조와 제20조,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제7조와 제8조, 제11

³¹⁾ 고양시(2019), 전계서, p.5.

조에 의거하여 추진됨.

- 이러한 안전교육은 생활 속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과 태풍·지진 등의 자연재난의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됨. 또한 재난 및 안전분야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 경기도의 ‘2020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한 해 동안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기도 각 시군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및 6대 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안전교육이 제공됨(경기도청, 2019).

[표 3-7]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예시

대상	분야	교육기관/장소	교육내용
영유아기의 보호자	생활, 교통, 범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위험 및 응급상황 인지, 실종유괴 방지, 놀이시설 안전, 장난감 놀이 안전, 안전한 승강기 이용 등
아동기	생활, 교통, 범죄	지역아동센터 등	자전거 및 대중교통 승하차 안전, 실종유괴 방지, 재난안전, 화재대피, 응급처치 등
청소년기 청년기	생활, 교통, 범죄, 재난, 보건	대안학교, 청소년 공부방 등	학교 내 안전사고 방지, 자전거 및 교통안전, 재난안전, 화재예방, 응급처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터넷·스마트폰 올바른 사용습관 등
성인기	생활, 교통, 범죄, 재난	주부대학, 주민자치센터 등	안전사고 대처 및 대응 요령, 재난안전, 화재예방,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노년기	생활, 교통, 자연재난, 보건	경로당, 노인정, 노인학교 등	안전한 가사활동 실천, 전기·가스안전, 건강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화재예방, 약물관리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보이스피싱 등 - 도시형: 대중교통, 승강기 안전 - 농촌형: 이(사)륜차, 농기계 안전
취약계층	생활, 교통, 자연재난, 보건	경로당, 노인정,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한 가사활동 실천, 전기·가스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화재 예방 등

출처: 경기도청(2019)³²⁾

- 교육대상은 생애주기별 전(全)연령층 및 안전취약계층으로 함(경기도청, 2019). 즉,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등 각 생애주기에 맞추어 전(全)연령층이 교육대상으로 포함되며 안전취약계층에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등을 비롯하여 이들의 보호자 등이 포함됨(경기도청, 2019).
 - 교육 방식은 각 교육과정별로 1~2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수요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진행됨. 교육 대상별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구체적인 추진 방식으로는 각 시·군에서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선발강사들을 우선적으로 기본·심화과정 및 교육훈련 기법 등의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군별 안전교육 강사로서 투입·운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또한 교육 관련 공통 교재 및 교육 콘텐츠(동영상 등) 등은 안전교육 관련 포털(국민안전교육 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배포될 수 있도록 함.
- 둘째로, 고양시는 내년도부터 이동안전체험 교육버스를 운영하여 고양형 안전배움터 구축을 추진함. 이는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이 시민 안전교육장을 방문하기에는 이동 시 위험에 노출되거나 접근성의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안전체험 교육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안전 체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 ‘고양형 안전배움터’ 추진계획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행복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리고 고양시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킨텍스, 스타필드, 이케아를 비롯하여 대형병원, 백화점,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화재 발생 우려 또한 존재³³⁾하는 만큼 고양시에 특화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32) “2020년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추진계획”, 경기도청 보도자료(2019.08.21.).

33) 고양시는 경기도 내 시군별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2018년 기준 화재건수와 인명 피해 측면에서 각각 2위(541건, 사망 5명/부상 36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8년 한 해동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207억원으로 추산됨(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19)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형 안전배움터’의 추진은 찾아가는 체험 위주 교육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흥미 위주의 교육 제공으로 안전생활 습관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리고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리고 고양형 안전배움터는 VR 안전체험장비 등 최신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안전체험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됨.

3. 소결

- 타 지자체를 포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고양시 현황 진단을 통해 고양시가 기초지자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문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는 시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강조됨.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발굴하고 안전교육의 경우 연령대나 성별 등 계층별 특성과 관심사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내용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을 통해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윤영배, 2017).
 - 또한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강조됨. 현재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주로 명목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최호진·오윤경, 2015),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볼 때 향후

안전문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현장 중심의 실무자와 전문가 참여의 확대, 전담운영기관을 통한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는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해외 사례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1회성의 단기적인 홍보가 아니라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다 실천지향적인 캠페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윤영배, 2017).
 - 홍보 및 캠페인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윤영배, 2017). 따라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에 대한 내실화, 전문화 노력이 강조됨.
 - 안전문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필요성 또한 강조되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한 단순히 시행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령 대별, 성별 등 각 계층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 교재 개발, 세부적인 교육 내용 개발 등의 내실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체험형, 실습형 교육의 시행이 강조되며,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됨(최호진·오윤경, 2015).
 - 이를 위해서는 서울 송파구 등의 사례와 같이 안전체험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안전체험시설에서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윤영배, 2017).

제 4 장

고양시민 안전의식 실태 조사 결과

제철 고양시민 안전의식 실태 조사 결과

제절 고양시민 안전의식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의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고양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의식 정도, 위험의식 및 인지 정도,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안전 인프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함.
- 설문조사는 1차적으로 온라인 조사에 기반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위한 설문은 설문조사 전문 수행기관인 ‘케이씨에프 파트너스’를 통해 진행됨. 조사기간은 2019년 9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됨.
-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집단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쿼터샘플링을 통해 진행됨.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50대 50으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등 6개 군으로 구분하여 할당함. 이를 통해 최종 도출된 전체 유효 응답자 표본 수는 800명임.
-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고령자 응답자의 참여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시민안전지킴이에 활동하고 있는 고양시민들을 비롯하여 동 센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부를 통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함. 이를 통해 온라인 조사와는 별개로 361명이 참여함.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최종 응답자 표본은 1,161명임.

2) 설문지 구성

-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안전 인식도, 위험 인식 및 인지도,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안전 인프라에 대한 인식의 4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함.
- 안전 의식 및 안전인식도 영역을 고양시의 안전도 및 안전 의식 수준, 고양시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 안전정보의 취득 정도 및 취득경로, 안전 대비 요령 및 숙지 정도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열(5점 척도) 및 명목 척도로 구성된 13개의 문항으로 인식을 조사함.
- 위험 의식 및 인지도 영역은 고양시 안전정책의 인지도 및 이해도, 고양시 내 위험요인에 대한 유형별 위험의식 정도의 2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42개의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함.
- 안전문화 일반,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항목은 고양시민들의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이해도·인지도·평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개선 방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으며, 총 22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안전 인프라 영역은 건축시설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안전 인식과 고양시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함.
- 설문지는 정지범·류현숙(2009)에서 제시한 국민 안전의식 지표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문항들을 안전문화운동 담당자와 관련 업무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작성함.
- 구체적인 설문내용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 설문내용의 구성 항목

구분	주요내용	문항수	척도
안전의식 및 안전 인식도	고양시 안전도 및 안전의식 수준 고양시 안전의 장애요인 안전 정보의 취득 정도 및 취득 경로 안전 대비 요령 및 숙지 정도	13	서열/ 명목
위험 의식 및 인지도	고양시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 고양시 내 위험요인에 대한 유형별 위험의식 정도	42	서열/ 명목
안전문화일반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이해도, 인지도, 평가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22	서열/ 명목
안전 인프라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안전의식 고양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견	6	서열/ 명목

2.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표 4-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단위: 명)	비율 (단위: %)
성별	남성	43.2
	여성	56.8
연령	15~19세	3.8
	20~29세	13.7
	30~39세	13.5
	40~49세	19.9
	50~59세	31.1
	60세 이상	18.0

거주지	덕양구	503	43.3
	일산동구	321	27.6
	일산서구	337	29.0
혼인여부	미혼	353	30.4
	기혼	807	69.6
자녀양육여부 (기혼자에 한함)	예	579	72.3
	아니오	222	27.7
최종학력	중졸이하	46	4.0
	고졸	310	26.9
	전문대 졸업	182	15.8
	대학교 졸업	521	45.3
	대학원 이상	92	8.0
주거형태	단독주택	102	8.8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140	12.1
	아파트	863	74.7
	주상복합/ 오피스텔	47	4.1
	기타	3	3.0
직업	전문직	102	8.8
	일반 사무직	393	34.0
	서비스판매직	104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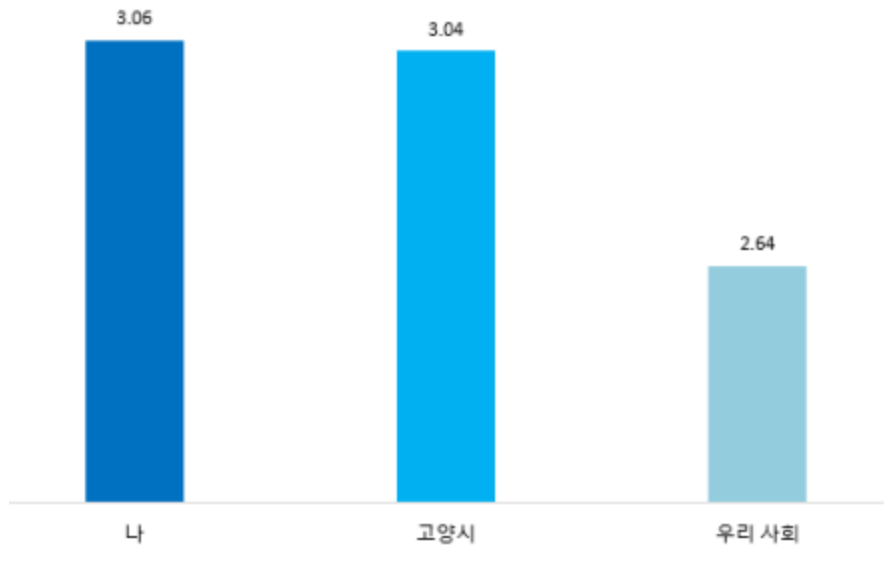
농림어업 종사자	27	2.3
생산제조 등 기능직	29	2.5
단순 노무직	17	1.5
공무원/군인	20	1.7
전업주부	255	22.0
학생	90	7.8
무직	79	6.8
기타(자영업, 프리랜서 등)	40	3.5

-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이 56.8%(660명), 남성이 43.2%(501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응답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 약 55:45 수준의 비율로 응답자 표본이 확보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거주지 유형의 경우 덕양구가 43.3%(503명), 일산동구 27.6%(321명), 일산서구 29.0%(337명)으로 나타나 일산동구 및 서구와 비교하여 덕양구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 형태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의 비율이 74.7%(863명)로 단독주택 8.8%(102명),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빌라 12.1%(140명), 주상복합·오피스텔 4.1%(47명)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직업 유형과 같은 경우에도 일반사무직(34.0%, 393명) 종사자와 전업주부(22.0%, 255명)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의식

(1)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인식

[그림 4-1]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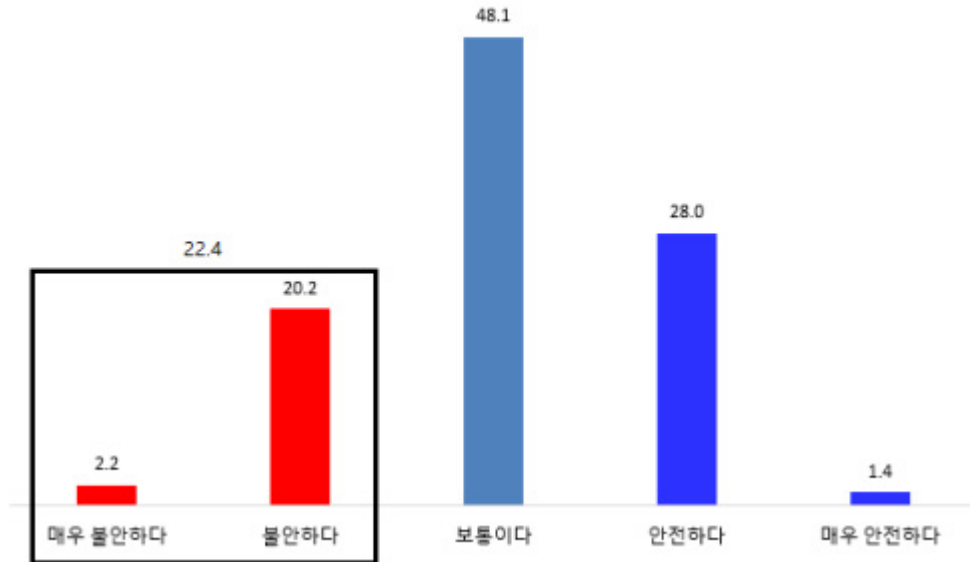


- 본 연구는 개인, 고양시,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하여 분석함. 그 결과, 개인, 고양시 차원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은 5점 만점에 개인 차원의 경우 3.06점, 고양시 차원은 3.04점으로 나타남.
- 개인과 고양시 차원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안전성 인식은 5점 척도 기준임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고양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결과로 살펴볼 수 있음.
-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성 인식의 경우 5점 만점에 2.64점으로, ‘보통’ 수준 이하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개인, 고양시 차원의 안전 인식에 비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과 고양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성 인식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대한) 개인 차원의 안전성 인식

[그림 4-2] 개인차원의 안전성 세부 응답별 응답비중



- 개인 차원의 안전성 인식의 세부 문항별 응답비중을 분석한 결과, 개인이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2.2%+ 불안하다 20.2%)고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22.4%(258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 수치는 안전하다(안전하다 28.0%+ 매우 안전하다 1.4%)는 응답 29.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
- 그러나 개인 차원의 안전성에 대한 전체 인식 평균이 3.06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인원의 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 차원의 안전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결과로 살펴볼 수 있음.

[표 4-3] 거주지별 비교(각종사고 위험으로부터 개인차원의 안전성)

거주지	사례수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보통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종합평가		5점 평균	
							불안	안전		
전체	1,149	2.2	20.2	48.1	28.0	1.4	22.4	29.4	3.06	
거주지	덕양구	496	2.6	20.0	48.2	28.0	1.2	22.6	29.2	3.05
	일산동구	320	3.1	20.9	47.5	27.2	1.3	24.0	28.5	3.03
	일산서구	333	0.9	19.8	48.6	28.8	1.8	20.7	30.6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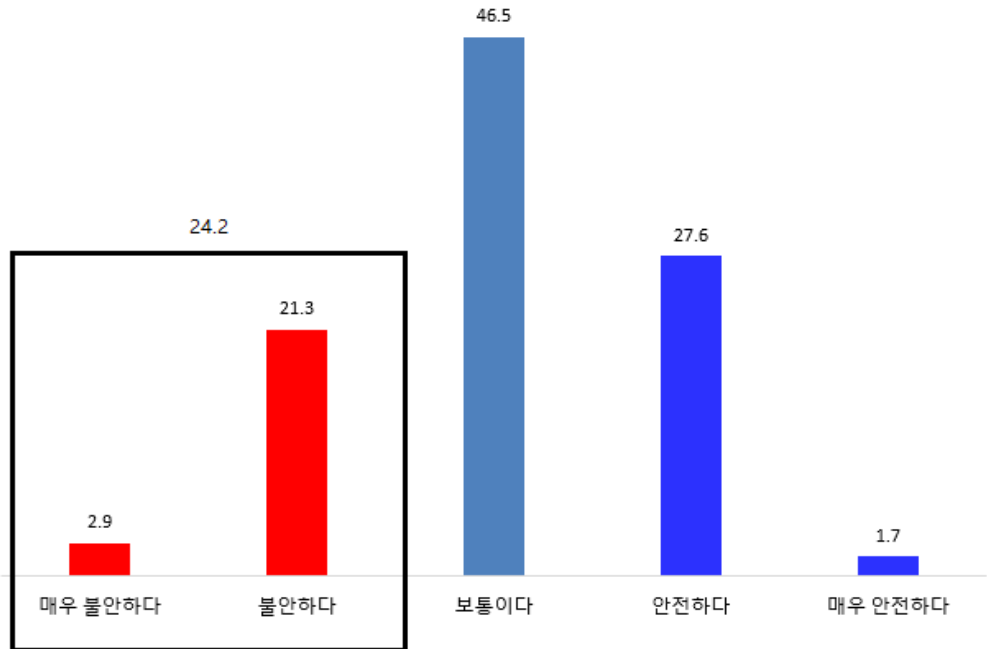
- 개인 차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응답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응답(매우 불안하다 + 불안하다) 순으로 일산동구(24.0%) > 덕양구(22.6%) > 일산서구(20.7%)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유사하게 안전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과 안전하다(안전하다 +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일산서구(30.6%) > 덕양구(29.2%) > 일산동구(28.5%)의 순으로 나타남.

②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안전성 인식

- 고양시 차원의 안전성 인식에 대한 응답의 비중을 확인한 결과,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2.9%+ 불안하다 21.3%)고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의 24.2%(275명)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안전하다(안전하다 27.6% + 매우 안전하다 1.7%)의 비율은 29.3%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5.1% 높게 나타남.

[그림 4-3] 고양시 차원의 안전성 세부 응답별 응답비중



- 부정적 응답(매우 불안하다 + 불안하다)의 경우에는 일산서구(25.2%) > 일산동구(23.9%) > 덕양구(23.8%)의 순으로 조사됨.
- 한편 안전하다(안전하다 +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일산동구(30.0%) > 덕양구(29.8%) > 일산서구(27.8%)의 순으로 나타남.

[표 4-4] 거주지별 비교(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고양시 차원의 안전성)

구분	사례수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보통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종합평가		5점 평균	
							불안	안전		
전체	1,137	2.9	21.3	46.5	27.6	1.7	24.2	29.3	3.04	
거주지	덕양구	489	2.7	21.1	46.4	27.6	2.2	23.8	29.8	3.06
	일산동구	314	3.8	20.1	46.2	28.7	1.3	23.9	30.0	3.04
	일산서구	334	2.4	22.8	47.0	26.6	1.2	25.2	27.8	3.02

- 3개구 지역의 안전성 인식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는 전체 평균 3.0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산서구가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3개구 모두 3.0점대로 유사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특정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③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대한) 사회 전체 차원의 안전성 인식

- 사회 전체 차원으로는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 6.3%+불안하다 39.3%)는 응답은 45.6%로 앞선 개인 차원(22.4%), 고양시 차원(24.2%)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안전하다 + 매우 안전하다) 14.9%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앙정부의 차원의 안전정책 노력과 지역 안전정책 연계성 제고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표 4-5] 거주지별 비교(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안전성인식)

구분	사례수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보통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종합평가		5점 평균	
							불안	안전		
전체	1,134	6.3	39.3	39.3	13.8	1.1	45.6	14.9	2.64	
거주지	덕양구	489	6.7	35.6	42.5	13.3	1.8	42.3	15.1	2.68
	일산동구	314	8.0	43.0	35.0	13.4	0.6	51.0	14.0	2.56
	일산서구	331	4.2	41.4	38.7	15.1	0.6	45.6	15.7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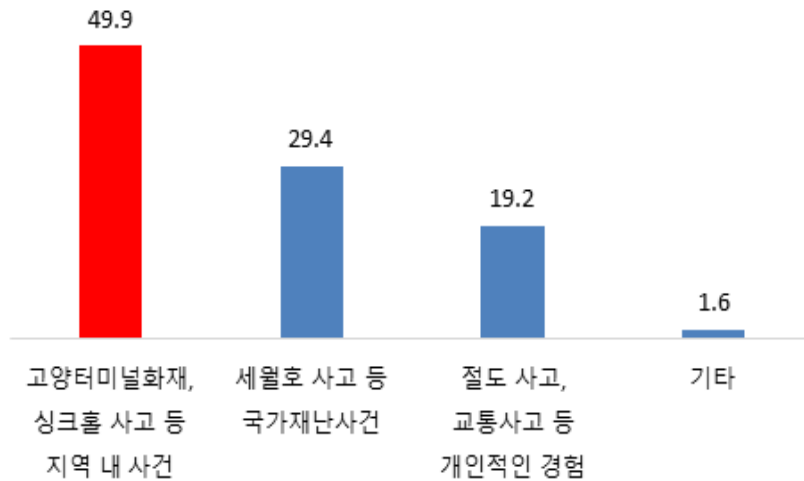
- 사회 전체 차원의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인식을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응답 순으로 일산동구(51.0%)> 일산서구(45.6%)> 덕양구(42.3%)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일산서구(15.7%)> 덕양구(15.1%)> 일산동구(14.0%)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3개구 모두 전반적으로 15%내외의 인원만이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됨.

④ 불안감의 원인 및 계기

- 안전성 인식 조사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추가적으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고양터미널 화재, 싱크홀 사고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중이 49.9%로 가장 높았음.

[그림 4-4]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인사: 불안의 원인



- 그 뒤로 세월호 사고 등 국가재난 사건(29.4%)> 절도사고, 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경험(19.2%)> 기타(1.6%) 순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의식하는 데에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형 재난 사건·사고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사고 중에서도 자신의 거주지나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의 유무가 지역 주민들의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불안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구 공통적으로 지역재난 사고> 국가재난 사고> 개인적인 경험> 기타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표 4-6] 거주지별 비교(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인식-불안의 원인)

구분		고양터미널화재, 싱크홀 사고 등 지역재난	세월호 사고 등 국가재난 사고	절도 사고, 교통 사고 등 개인적인 경험	기타
전체		49.9	29.4	19.2	1.6
거주지	덕양구	47.5	29.2	21.2	2.2
	일산동구	49.7	32.8	16.9	0.7
	일산서구	53.7	26.4	18.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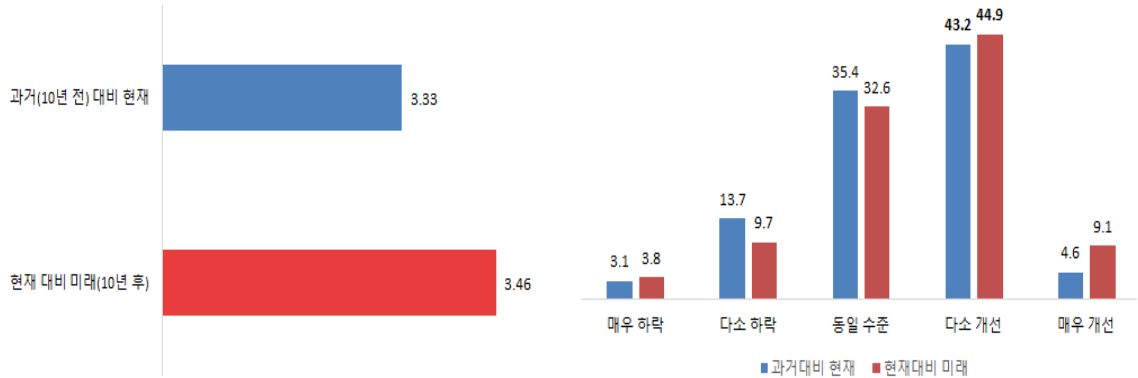
- 덕양구의 경우 절도·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경험(21.2%)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타 거주지 응답자의 응답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일산동구의 경우 각 원인 항목 중에서 국가재난 사고 등의 영향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32.8%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산 서구의 경우 지역 재난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53.7%로 타 거주지 응답자의 응답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사례들을 대표적인 불안감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⑤ 고양시의 과거와 미래의 안전상태 변화 인식

-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10년 전 과거 대비 현재의 안전 상태, 그리고 향후 10년 후 안전 상태에 대한 전망을 조사함.
- 조사 결과, 과거 대비 현재 나아진 정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33점, 현재 대비 미래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평균 3.46점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나 거의 동일

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5] 고양시의 과거와 미래 안전상태 변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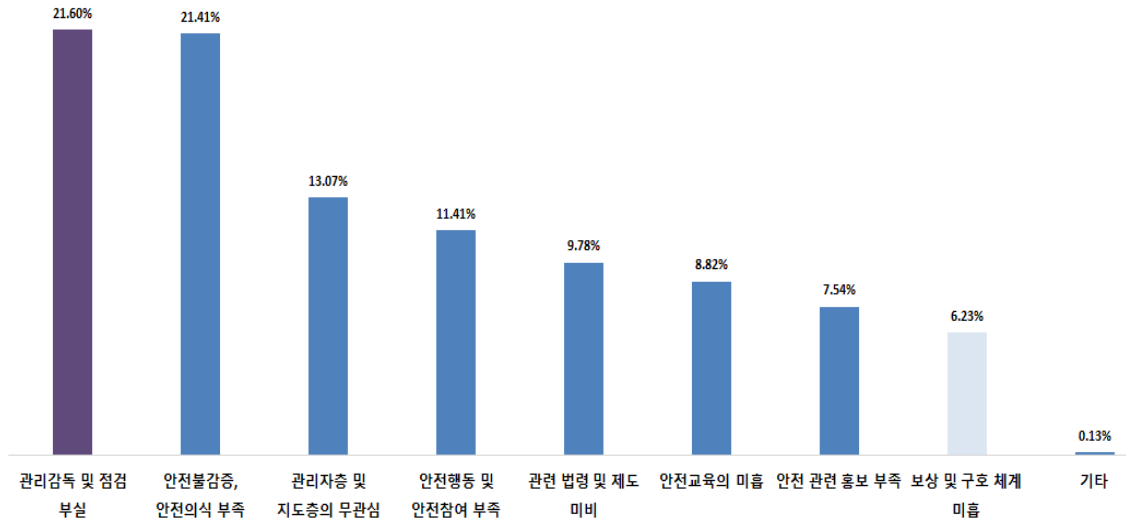


- 응답 중에서는 다소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과거 대비 현재 부문과 현재 대비 미래 부문에서 각각 43.2%,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일 수준이라는 응답과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양시 전반적으로 안전 상태를 보다 나은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⑥ 고양시 안전 개선의 장애요인

- 고양시의 안전 실태의 개선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복수 응답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함.
- 고양시 안전 개선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안전 개선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 중 관리 감독 및 점검 부실에 대한 응답이 21.6%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6] 고양시 안전 개선의 장애요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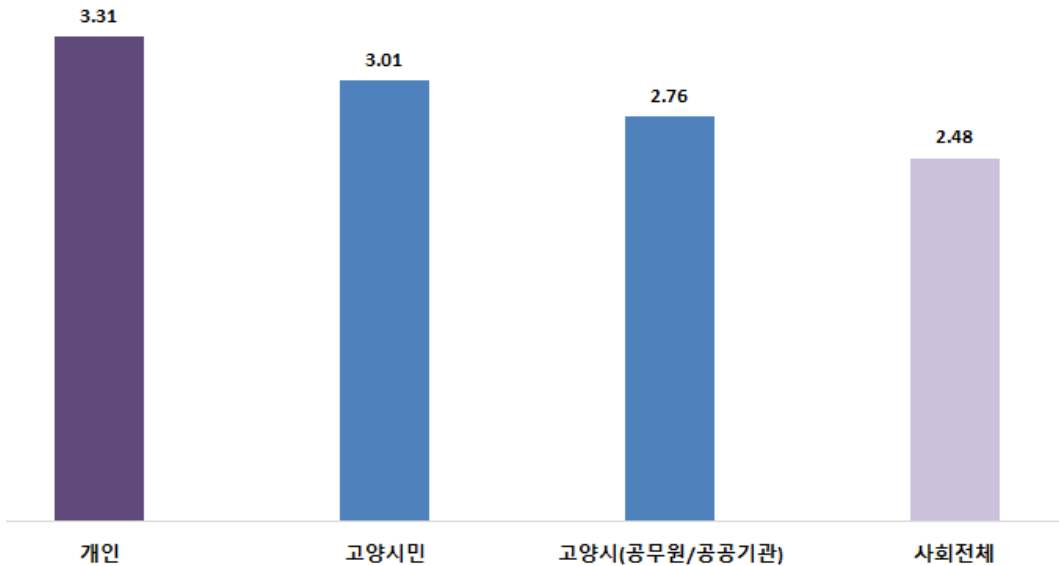
- 그리고 개개인의 안전불감증, 안전의식의 부재 문제 또한 21.4%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순위로 제시된 관리감독 및 점검 부실 문제와 응답 비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선정됨.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 문제와 안전의식의 부재 문제가 안전 개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한편, 보상 및 구호 체계가 미흡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응답은 6.23%로 상대적으로 가장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의 안전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 불감증,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됨.

(2)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인식

- 안전 개선의 장애 요인으로 관리·점검 미흡과 함께 안전의식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고양시민이 생각하는 안전의식 수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응답자 본인(자신), 고양시민 전체, 고양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전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안전의식 수준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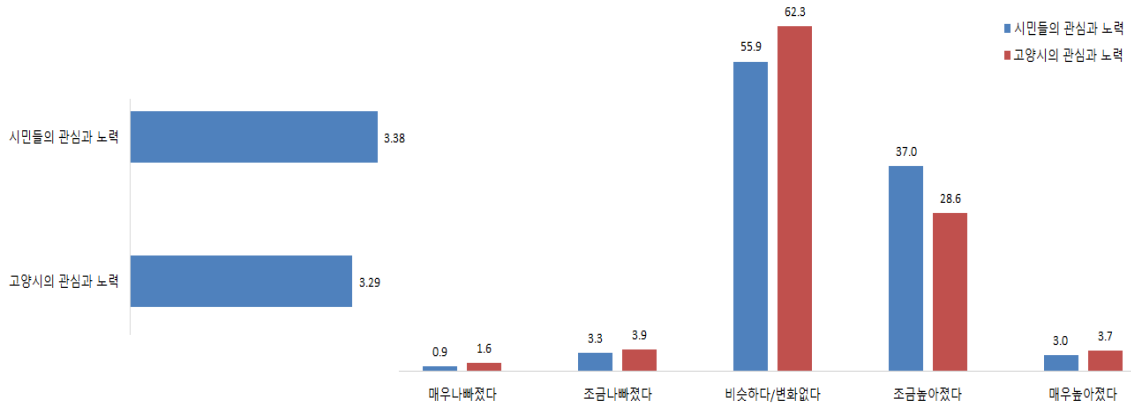
[그림 4-7] 사회 주체별 안전의식 수준



- 그 결과, 개인 차원의 안전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3.31점으로, 다른 사회주체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점수로 도출됨. 다음으로 고양시민 (3.01점)> 고양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2.76점)> 우리 사회 전체(2.48점)의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각 사회 주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개인 차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비롯하여 각 항목의 평균 점수가 모두 '보통' 수준에 머무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음.

① 안전의식 수준의 변화

[그림 4-8] 고양시민과 고양시의 안전의식 개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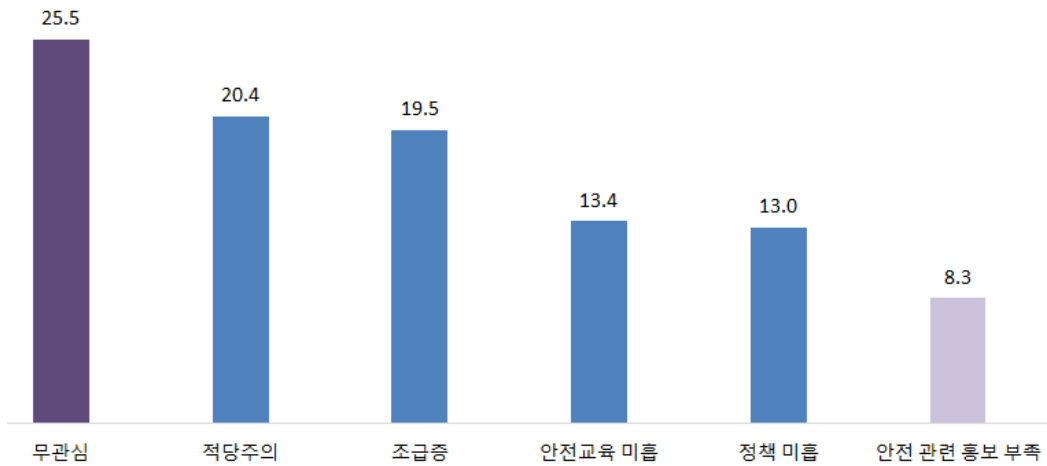
- 세월호 사고,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사건·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차원의 안전 노력의 경우 평균 3.38점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 차원의 안전 개선 노력은 3.29점으로 평가됨.
- [그림4-8]과 같이 부정적인 응답의 비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변함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대형 재난 사고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의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진단됨.

② 안전불감증 관련 조사 결과

- 이러한 안전의식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현상과 관련하여 먼저, 안전불감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적당주의, 조금증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안전의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회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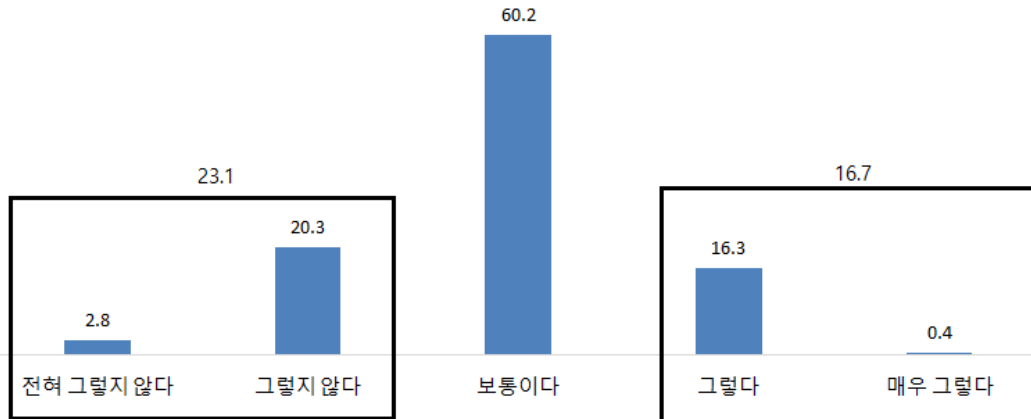
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의식 차원에서 안전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4-9] 고양시 안전 개선의 장애요인- 안전 불감증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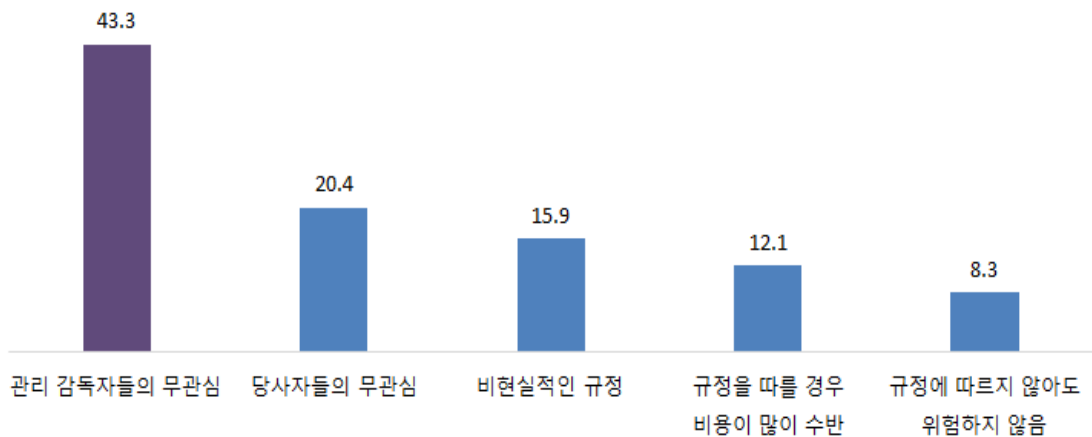
- 두 번째로, 안전의식 및 안전불감증 개선과 관련된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인 안전 관련 규범 및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고양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60.2%로 가장 높게 도출됨.
- 전반적으로 부정적인(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응답의 비중이 23.1%로, 긍정적인 응답(그렇다 + 매우 그렇다) 1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평균 결과 또한 2.91점으로 고양시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 안전 규범이나 제도의 준수 정도에 대해 ‘보통’ 수준 미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됨.

[그림 4-10] 안전확보를 위한 규범, 제도 준수 정도



- 마지막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나 규범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규범이나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조사함.

[그림 4-11] 안전 규범이나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 그 결과, 관리 감독자들이 관련 규범이나 제도 준수에 대해 무관심한 데에서 기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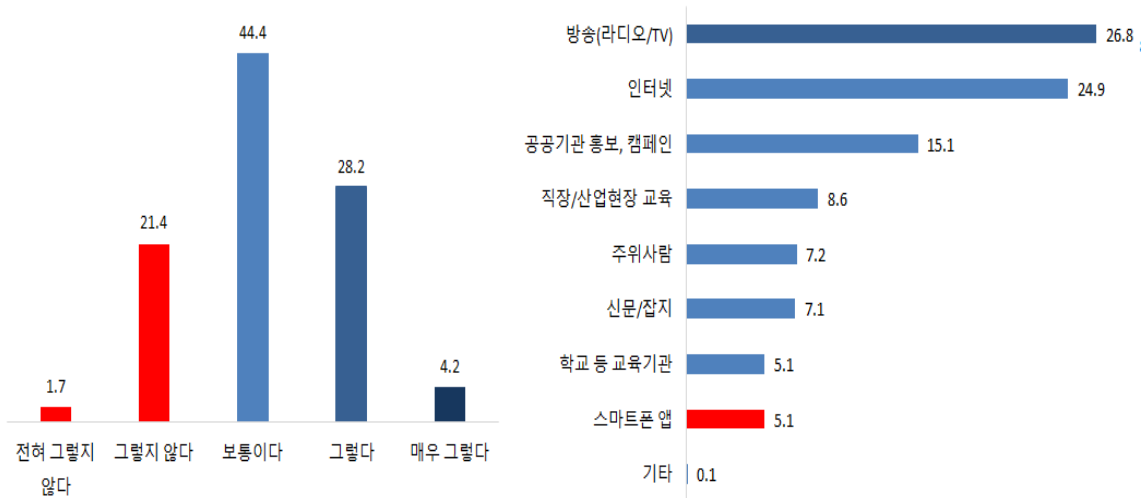
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비율 중 4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다른 보기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등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어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한편, 관련 규범이나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원인과 관련하여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약 8.3%를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 관련 제도나 규범에 대한 준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제·감독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인식 개선 사업 노력 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③ 안전 정보 관련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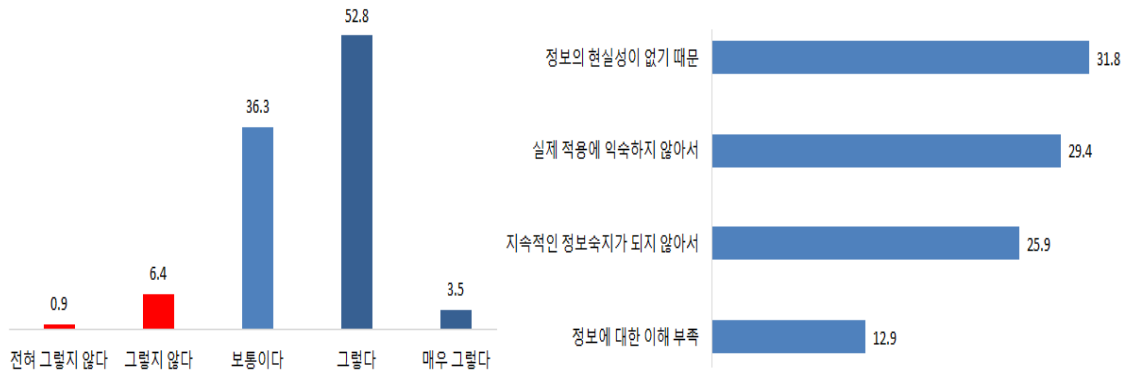
- 안전의식의 근간이 되는 안전 정보의 습득 정도와 이러한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수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분석 결과, 안전 정보를 자주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44.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또한 습득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전체의 32.4%로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의 비중 23.1%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안전 정보의 주요 수집 경로와 관련하여서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인터넷을 통해 안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방송 매체와 인터넷의 경우 각각 26.8%, 2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습득 경로의 5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안전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그림 4-12] 안전 정보 습득 정도 및 수집 경로



- 이와 대조적으로 안전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1%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단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 정보 습득 역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송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습득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홍보·캠페인, 직장/산업현장에서의 교육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교육기관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 제공 형태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폰 앱 개발 및 관련 앱 홍보 등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
- 안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 평가(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중이 56.3%로 부정적 평가(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 7.3%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3] 안전 정보의 유용성 및 부정적 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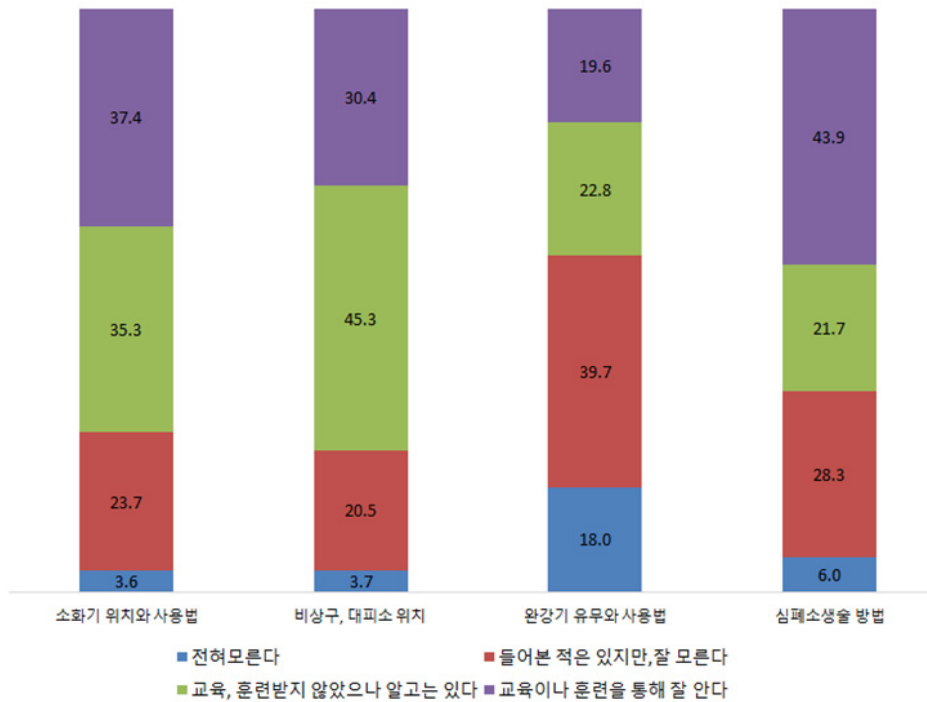


- 또한, 보기별 응답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중이 52.8%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민들은 일상에서 습득하게 되는 안전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나아가, 안전 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보통이다’ 이하 부정적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에 한하여 안전 정보의 유용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분석 결과, 습득한 안전 정보에 대해 ‘정보의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실제 적용하는 데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를 차지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안전 정보가 한계를 지니고 있거나 시민들이 유용성에 대해 부정적인 데에는 안전 정보의 적실성, 현실적용 가능성 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등 정부 차원에서 안전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적실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성이 제기됨.

(3) 안전 예방·대비 노력

- 본 연구는 고양 시민들의 안전 대응 역량 및 보유 지식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비 안전 대응 요령에 대한 사전 숙지 정도를 분석함.

[그림 4-14] 재난·재해 대비 안전 대응 요령 사전 숙지 정도 결과



- 조사 결과,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비상구 및 대피소의 위치, 심폐소생술 등의 조사 항목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으나, 알고는 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약 70% 내외의 비중에 해당하는 응답자 인원들이 안전대응 요령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이 가운데 교육·훈련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한 인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심폐소생술로 43.9%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한편, 숙지 정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완강기 유무와 사용법 항목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중은 전체의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일산 지역 등 고양시 내에 아파트 단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노후 건물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는 특징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고양시민들의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숙련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로, 재난 예방 및 대비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난·재해 대비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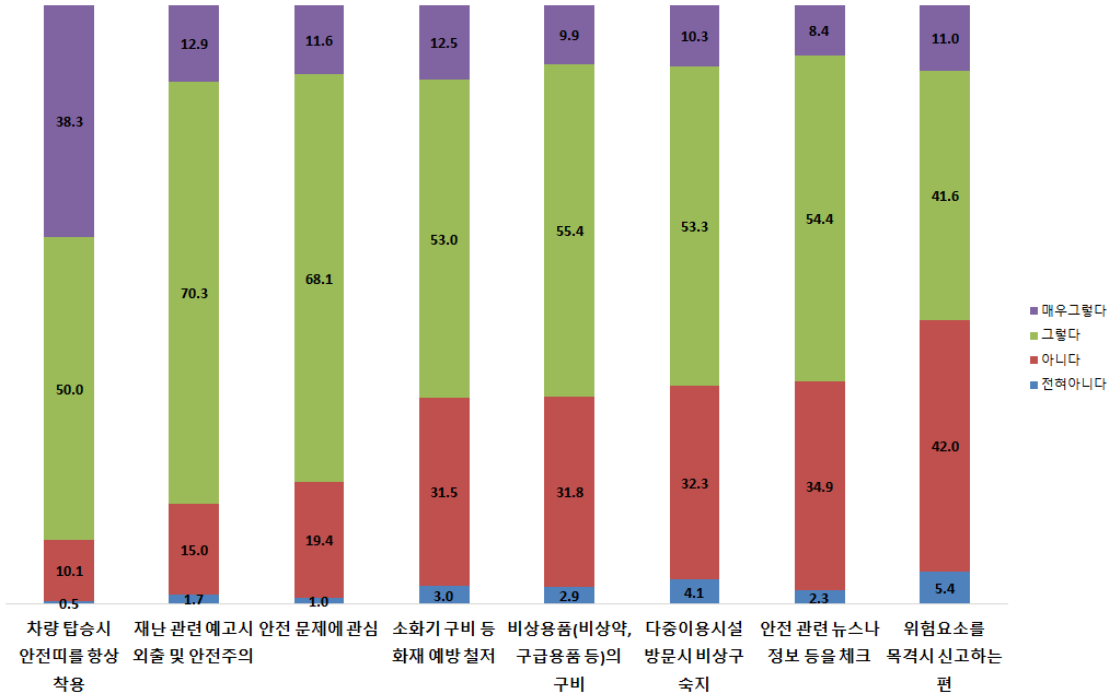
[그림 4-15] 재난·재해 대비 노력 정도(평균 비교)



- 분석 결과, 차량 탑승 시 안전띠를 항상 착용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3.2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재난 관련 예고시 외출 및 안전을 주의하거나, 평소에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는 등의 예방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해 안전 관련 뉴스나 정보 등을 스스로 꼼꼼히 체크하거나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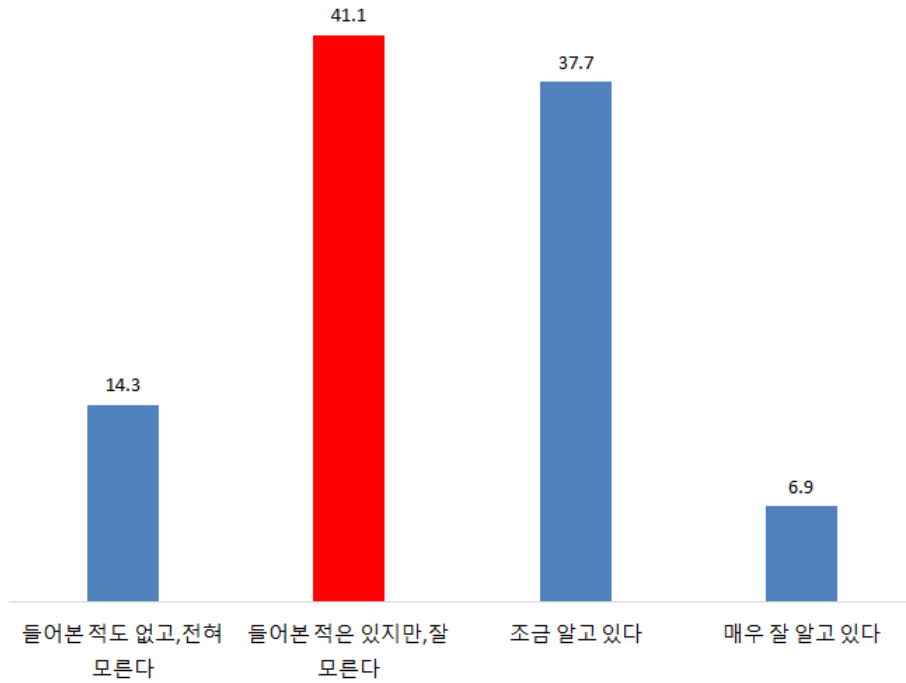
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그림 4-16] 재난·재해 대비 노력 정도(응답 비중)



- 마지막으로, 시에서 지정한 재난 안전 대피시설(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장소 등)에 대한 사전 숙지 정도를 조사함.
- 조사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41.1%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조금 알고 있다(37.7%),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14.3%), 매우 잘 알고 있다(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항목으로 파악됨.

[그림 4-17] 재난안전 대피시설 사전 숙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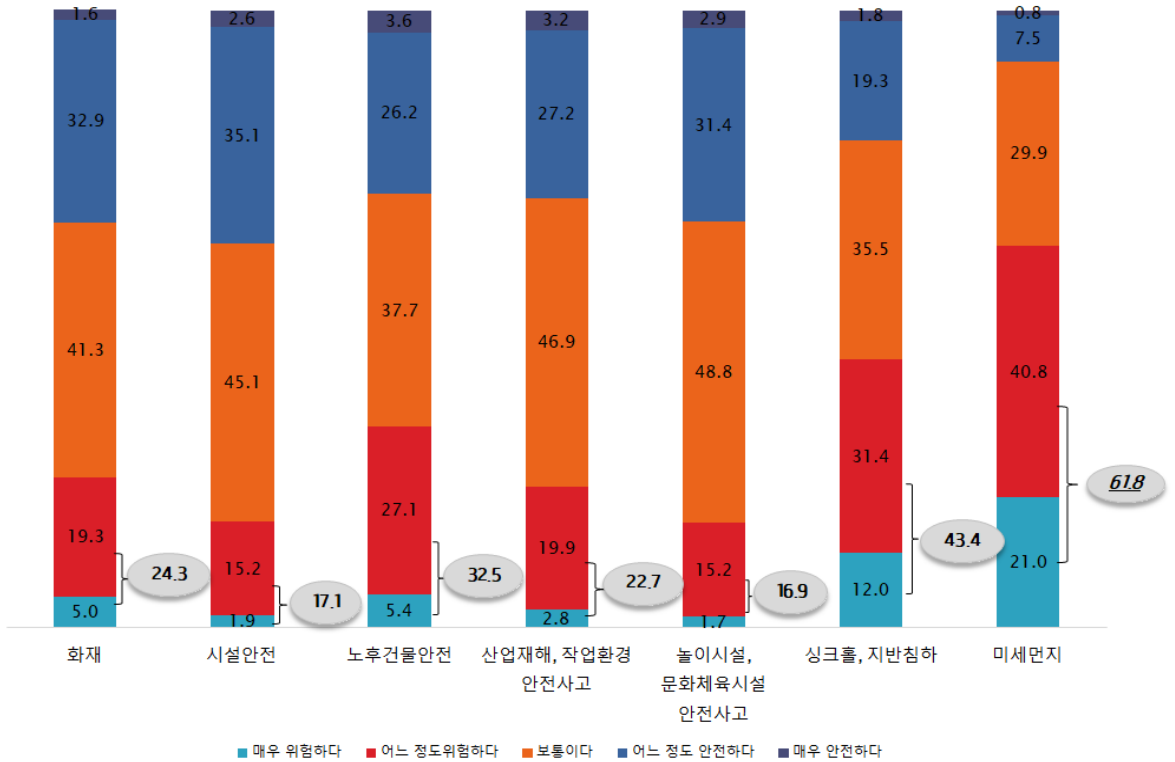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민들의 재난안전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위험의식 및 인지

(1) 사회재난 위험도 인식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각 유형의 재난들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위험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 인식 비중(매우 위험하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이 61.8%로 가장 높았음.

[그림 4-18] 사회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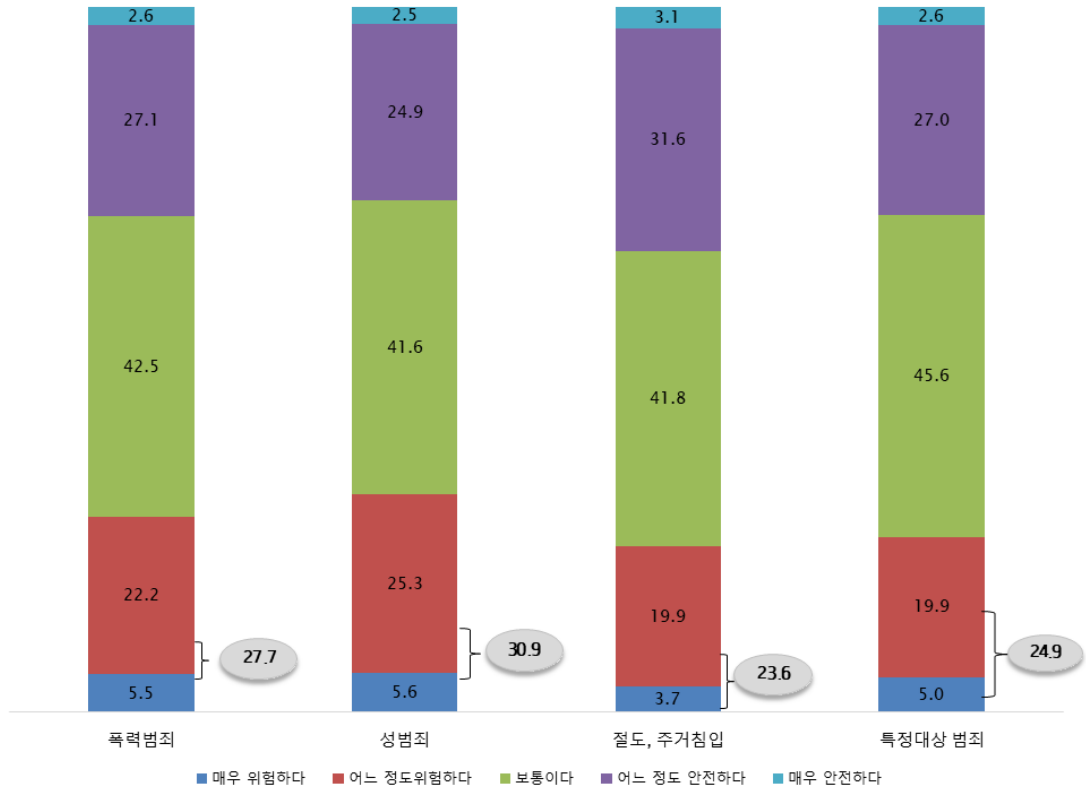


- 그 밖의 유형에서는 싱크홀 및 지반침하(43.4%), 노후건물안전(32.5%), 화재(24.3%)의 순으로 고양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놀이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도는 16.9%로 다른 사회재난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치안 범죄 위험도 인식

- 치안 범죄 위험도와 관련하여서는 폭력범죄, 성범죄, 절도 및 주거침입, 어린이·장애인·노인·여성 등 특정대상 범죄 등에 대하여 각 유형별 위험성 인식을 분석함.

[그림 4-19] 치안 범죄 유형별 위험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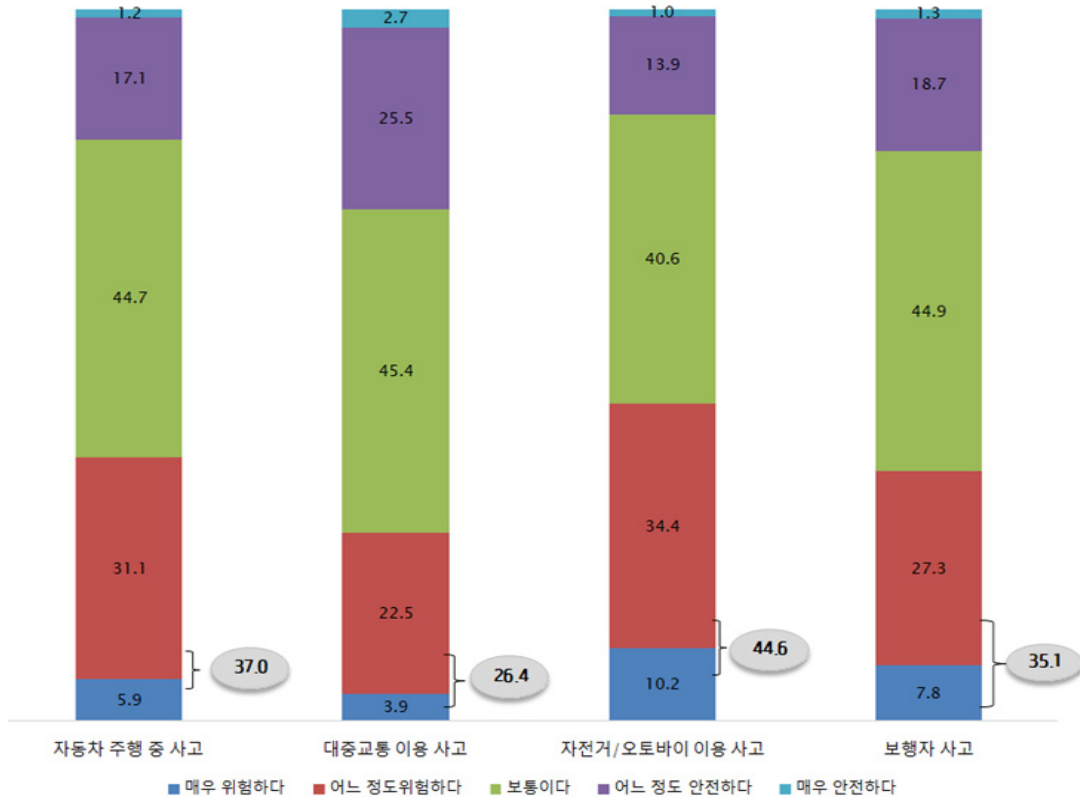
- 분석 결과, 각 범죄 유형별 위험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은 대체로 2.5~3.1%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범죄 유형별로 위험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위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매우 위험하다 + 어느 정도 위험하다)의 비중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27.7%) > 특정대상 범죄 (24.9%) > 절도, 주거침입(23.6%) 순으로 고양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진단됨. 이에 따라 범죄 유형들 가운데 성범죄, 폭력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우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연령별 차이나 성별 인식 차이

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됨.

(3) 교통사고 안전 인식

- 교통사고 위험도에 대한 분석은 자동차 주행중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이륜차(자전거/오토바이) 이용 사고, 보행자 사고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위험도 인식 분석 결과 고양시민들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해 44.6%가 부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가장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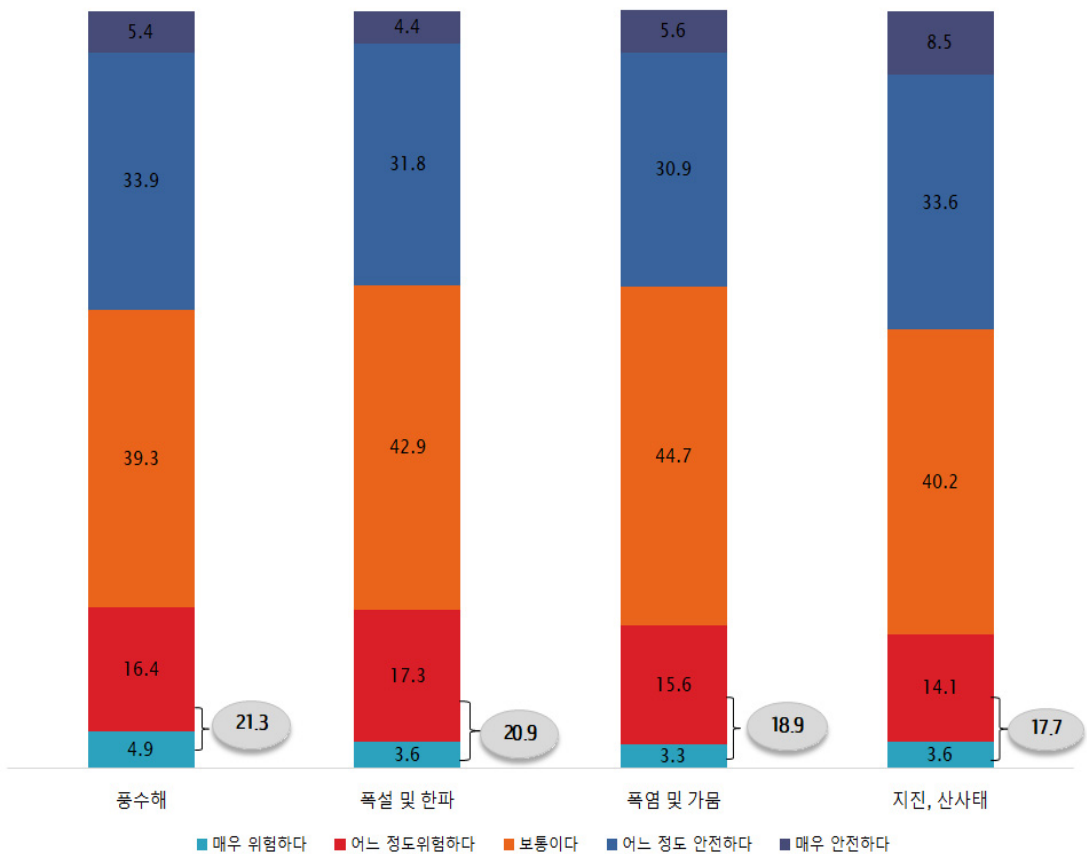
[그림 4-20] 교통사고 유형별 위험도 인식



- 그 다음으로 자동차 주행 중 사고(37.0%)> 보행자 사고(35.1%)> 대중교통 이용사고(26.4%)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인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민들이 교통안전사고 방지에 있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4) 자연재난 안전 인식

[그림 4-21] 자연재난 세부 유형별 위험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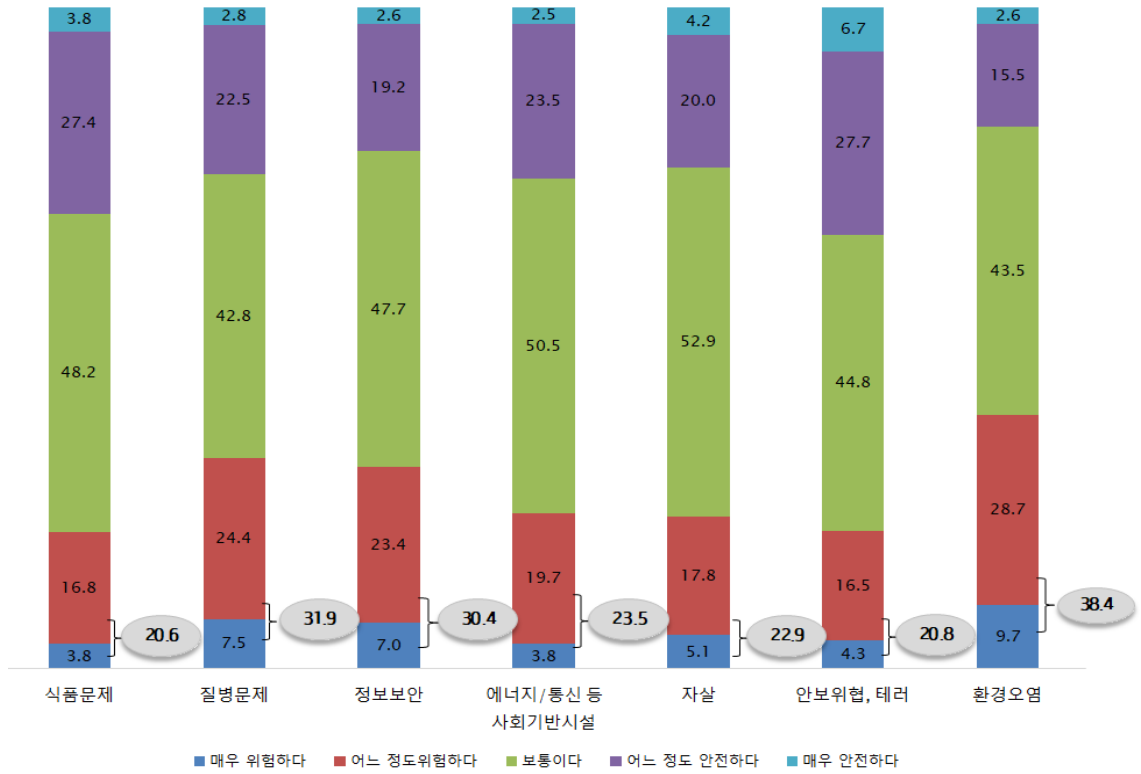


-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도 인식 분석은 크게 풍수해(태풍, 침수·범람 등) 피해, 폭설 및 한파 피해, 폭염 및 가뭄 피해, 지진·산사태 피해 등의 유형으로 구분됨.
-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유형들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침수·범람 등 풍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폭설 및 한파(20.9%) > 폭염 및 가뭄(18.9%) > 지진 및 산사태(17.7%)의 순으로 위험하다고 응답함.
-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 인식의 경우 모든 세부 재난 유형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위험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응답)의 비중은 20% 내외 또는 그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재난, 교통사고, 치안·범죄 등 앞서 논의한 다른 재난 유형들과 비교하였을 때 고양시민들이 자연재난의 잠재적 위험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5) 신종위험에 대한 위험도 인식

- 사회다변화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안전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질병 문제, 식품안전 문제, 환경오염, 정보 보안 위협 문제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재난·안전 유형들을 신종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위험도 인식을 조사함.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위험하다(매우 위험하다 +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유형은 ‘환경오염’으로 38.4%로 파악됨.
-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 인식 다음으로는 신종 질병·감염병 문제(31.9%), 정보보안(30.4%)의 순으로 고양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2] 신종위험에 대한 세부유형별 위험도 인식



- 반면, 식품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6%로 신종위험 세부 유형 중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일대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의 경우 ICT 발전 이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보호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살펴볼 수 있음.

(6) 위험도 평균 비교

[표 4-7] 위험유형별 위험도 인식 비중 - 응답자 전체

구분(상위)	위험도 인식 비중	구분(하위)	위험도 인식 비중
미세먼지	61.8	화재	24.3
이륜차 사고	44.6	절도 범죄	23.6
싱크홀	43.4	사회기반시설 안전	23.5
환경오염	38.4	자살	22.9
자동차 사고	37.0	산업안전	22.7
보행자 사고	35.1	풍수해	21.3
노후건물 안전	32.5	폭설, 한파	20.9
질병, 감염병	31.9	안보 및 테러	20.8
성범죄	30.9	식품안전	20.6
정보보안	30.4	폭염, 가뭄	18.9
폭력범죄	27.7	지진, 산사태	17.7
대중교통 사고	26.4	시설안전	17.1
특정대상 범죄	24.9	놀이문화시설 안전	16.9

□ 각 재난·안전사고 유형에 대하여 고양시민들의 위험 인식이 높은 순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4-7]과 같음. 위험도 우려가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결과 26가지 유형의 재난안전사고 가운데 상위 13개 항목에 대하여 [표4-7]과 같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치안·범죄, 교통안전, 신종위험 등 상위 유형별로 그룹화하면 사회재난 3건, 교통안전사고 4건, 신종 위험 3건, 치안·범죄 3건의 재난·안전사고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각 유형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와 같이 사회재난과 교통안전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재난 유형에 따른 위험도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항목 중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가 61.8%로 고양시민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우려하는 재난은 미세먼지 이슈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한편, 자연재난의 경우 시민들의 우려도가 높은 상위 13개 재난안전사고 가운데 포함되는 재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각 세부 항목 중 자연재난 유형의 폭염 및 가뭄, 지진·산사태 발생에 대해서는 각각 18.9%, 17.7%만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안전사고와 놀이시설·문화체육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각각 17.1% 16.9%로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① 위험도 평균 비교- 거주지별 평균 인식 순위 비교

[표 4-8] 재난 유형 위험도 인식 거주지별 평균 비교

구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교통안전	2.82	2.72	2.81
사회재난	2.93	2.92	2.91
신종위험	3.02	2.87	2.99
치안범죄	3.05	3.00	3.03
자연재난	3.21	3.13	3.29

- 본 연구는 교통안전, 사회재난, 신종위험, 치안범죄, 자연재난 등 5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위험도 인식의 평균을 거주지역별로 비교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 유형에 따른 위험도 인식의 평균 점수에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덕양구, 일산서구에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재난 유형의 순위는 교통안전> 사회재난> 신종 위험> 치안범죄> 자연재난의 순으로 나타남.
- 일산동구 지역 또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신종위험> 사회재난> 치안범죄> 자연재난의 순으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어, 타 지역과 달리 신종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종위험 유형에 포함되는 각 세부 유형(환경오염, 정보보안 등)별 위험도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평균 2.66점으로 다른 지역(덕양구 2.80점, 일산서구 2.69점)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과거부터 폐기물 처리장 등 유해시설의 밀집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일산동구 식사지구의 개발 및 환경 오염물 처리 이슈를 비롯해 최근에도 식사2 도시개발구역 일원 공사 현장 일대에서 비산 먼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지역 문제화되고 있는 사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4-9] 세부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 평균 순위 - 덕양구 응답자

구분(상위)	평균	구분(하위)	평균
사회재난 - 미세먼지	2.26	교통 - 대중교통 이용 사고	3.05
교통사고 - 이륜차사고	2.63	신종위험 - 자살	3.05
사회재난 - 싱크홀	2.78	신종위험 - 사회기반시설 사고	3.08
교통사고 - 자동차주행사고	2.79	사회재난 - 산업현장 안전	3.09
신종위험 - 환경오염	2.80	치안범죄 - 절도·주거침입	3.09
교통사고 - 보행자사고	2.81	신종위험 - 식품안전	3.13
치안범죄 - 성범죄	2.92	자연재난 - 폭설 및 한파	3.16

신종위험 - 정보보안	2.93	자연재난 - 풍수해	3.19
신종위험 - 신종질병, 감염병	2.94	신종위험 - 안보, 테러	3.19
사회재난 - 노후건물안전	2.96	자연재난 - 폭염 및 가뭄	3.19
치안범죄 - 폭력범죄	3.00	사회재난 - 놀이시설안전	3.20
사회재난 - 화재	3.02	사회재난 - 시설안전	3.21
치안범죄 - 특정대상범죄	3.04	자연재난 - 지진	3.30

- 덕양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재난 유형의 세부항목에 대한 위험도 인식평균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항목이 2.26점으로 주민들은 위험 요인들 가운데 미세먼지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4-7]에 제시된 전체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덕양구의 경우 화재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노후건물 안전, 대중교통 이용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표 4-10] 세부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평균 순위 - 일산동구 응답자

구분(상위)	평균	구분(하위)	평균
사회재난 - 미세먼지	2.29	치안범죄 - 폭력범죄	3.00
사회재난 - 싱크홀	2.56	신종위험 - 식품안전	3.02
교통사고 - 이륜차 사고	2.58	사회재난 - 노후건물 안전	3.03
신종위험 - 환경 오염	2.66	자연재난 - 폭설 및 한파	3.05
교통사고 - 자동차 주행 사고	2.69	자연재난 - 풍수해	3.06
교통사고 - 보행자 사고	2.74	치안범죄 - 절도, 주거침입	3.06
신종위험 - 정보 보안	2.76	신종위험 - 안보, 테러	3.07
신종위험 - 신종 질병, 감염병	2.80	사회재난 - 산업현장 안전	3.07

신중위험 - 사회기반시설 안전	2.88	사회재난 - 화재	3.10
신중위험 - 자살	2.89	자연재난 - 폭염	3.15
교통사고 - 대중교통 이용 사고	2.90	사회재난 - 놀이문화시설 안전	3.17
치안범죄 - 성범죄	2.94	사회재난 - 시설안전	3.20
치안범죄 - 특정범죄 대상 범죄	3.00	자연재난 - 지진	3.24

[표 4-11] 세부 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평균 순위 - 일산서구 응답자

구분(상위)	평균	구분(하위)	평균
사회재난 - 미세먼지	2.23	신중위험 - 자살	3.05
교통사고 - 이륜차사고	2.61	신중위험 - 생활기반시설 안전	3.05
사회재난 - 싱크홀	2.63	사회재난 - 산업현장 안전	3.08
신중위험 - 환경오염	2.69	사회재난 - 화재	3.11
교통사고 - 보행자 사고	2.79	신중위험 - 식품안전	3.15
교통사고 - 자동차 주행 사고	2.80	치안범죄 - 절도, 주거침입	3.17
사회재난 - 노후건물 안전	2.88	사회재난 - 놀이,문화시설	3.18
신중위험 - 정보 보안	2.88	신중위험 - 안보, 테러위험	3.20
신중위험 - 신종 질병, 감염병	2.89	사회재난 - 시설안전	3.24
치안범죄 - 성범죄	2.95	자연재난 - 폭염 및 가뭄	3.25
치안범죄 - 폭력범죄	2.97	자연재난 - 폭설 및 한파	3.26
치안범죄 - 특정대상 범죄	3.01	자연재난 - 풍수해	3.30
교통사고 - 대중교통 이용 사고	3.05	자연재난 - 지진	3.33

-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의 재난유형별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덕양구 사례와 유사하게 재난유형의 세부항목 중 미세먼지, 이륜차 사고, 싱크홀 및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

가 높은 것으로 도출됨.

- 한편 덕양구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일산동구 및 서구에서는 화재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의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위험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폭설 및 한파, 풍수해, 폭염·가뭄, 지진 및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 유형에 대한 위험도는 다른 유형의 재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세부재난 유형별 위험도 인식평균 순위 - 종합비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13순위
덕양구	미세 먼지	이륜차 사고	싱크홀, 침하	자동차 사고	환경 오염	보행자 사고	성범죄	정보 보안	신종 질병 감염병	노후 건물 안전	폭력 범죄	화재	특정 대상 범죄
일산 동구	미세 먼지	싱크홀, 침하	이륜차 사고	환경 오염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정보 보안	신종 질병 감염병	사회 기반 시설	자살	대중 교통 사고	성범죄	특정 대상 범죄
일산 서구	미세 먼지	이륜차 사고	싱크홀, 침하	환경 오염	보행자 사고	자동차 사고	노후 건물 안전	정보 보안	신종 질병 감염병	성범죄	폭력 범죄	특정 대상 범죄	대중 교통 사고

-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고양시 내 3개구의 재난 유형별 위험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 4-12]와 같이 종합함.

○ 그 결과 미세먼지, 싱크홀 이슈, 이륜차 사고 등이 최우선순위로 부각되는 것이 유사하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먼저, 덕양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자동차 사고, 성범죄, 화재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대중교통 사고 우려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덕양구의 경우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도농 복합 지역의 성격을 지니며 교통 시스템상 대중교통수단 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차 운전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삼송, 지축 등 택지개발지역이 많고 토당 동 원룸밀집지역 등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변상호 외(2017)에 의하면 토당동, 행신동, 주교동, 화정동, 성사동, 대지동, 관산동 등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失火)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는 만큼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됨.
- 둘째로 일산동구의 경우 덕양구, 일산서구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으로 신종질병 및 감염병 위험, 사회기반 시설 안전, 자살 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고 성범죄, 폭력범죄 등에 대한 위험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보 보안, 신종 질병 및 감염병, 사회기반시설 안전, 자살 등의 이슈는 모두 과거에는 자주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의 현대화, 도시화에 따라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위험과 관련되는 재난·사고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전형적인 도시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일산동구의 경우 대중교통 사고와 관련된 이슈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우선순위상으로 높게 도출된 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일산서구의 경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우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노후 건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특징을 지님.
- 이러한 특징을 통해 일산서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 개발 사업 이후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대로변 뿐만 아니라 골목길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 이슈가 강조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있는 주거 단지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② 위험도 평균 비교- 거주지별 평균 인식의 재난 유형별 비교

[표 4-13] 거주지별 위험도 인식 평균 비교 - 사회재난 유형

거주지	사례수	미세먼지	싱크홀, 지반침하	노후건물 안전	화재	산업현장 안전	놀이 문화 시설	시설안전
덕양구	489	2.26	2.78	2.96	3.02	3.09	3.20	3.21
일산동구	319	2.29	2.56	3.03	3.10	3.07	3.17	3.20
일산서구	329	2.23	2.63	2.88	3.11	3.08	3.18	3.24

- 사회재난 유형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거주지별 평균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함.
- 덕양구는 화재에 대한 안전 인식이 5점 만점 기준 3.02점으로 다른 거주지역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일산 지역이 덕양구 거주자들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노후건물 안전에 대해서는 일산서구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싱크홀 이슈의 경우 일산동구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또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현장 안전, 놀이·문화시설 안전, 시설안전 등에 대해서도 일산동구 지역에서 가장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음. 해당 결과는 2017년과 2018년 일산 백석동에서 여러 차례 발생

하였던 지반 침하 사고와 2018년 12월 백석역 부근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 등의 이슈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됨.

[표 4-14] 거주지별 위험도 인식 평균 비교 - 치안범죄, 교통사고 유형

거주지	사례수	치안범죄				교통사고			
		폭력	성범죄	절도 주거침입	특정대상 범죄	자동차 사고	대중교통 사고	2륜 차량 사고	보행자 사고
덕양구	489	3.00	2.92	3.09	3.04	2.79	3.05	2.63	2.81
일산동구	319	3.00	2.94	3.06	3.00	2.69	2.90	2.58	2.74
일산서구	331	2.97	2.95	3.17	3.01	2.80	3.05	2.61	2.79

- 치안 범죄에 대한 위험도를 거주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덕양구와 일산동구·서구 모두 공통적으로 성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덕양구: 2.92점, 일산동구: 2.94점, 일산서구: 2.95점).
- 성범죄 안전과 관련하여 덕양구 지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폭력범죄 안전의 경우에는 일산서구 지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절도 및 주거침입, 특정 대상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 측면에서는 일산동구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지역별로 치안·범죄 유형 가운데에서도 차별적으로 각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범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선결될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음.
- 교통사고의 경우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의 사고를 모든 거주지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덕양구: 2.63점, 일산동구: 2.58점, 일산서구: 2.61점).

- 일산동구의 경우 교통사고 유형 중 자동차 사고가 2.69점, 대중교통 사고가 2.90점으로 다른 거주지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사고와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도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각각 2.58, 2.74점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응답함.

[표 4-15] 거주지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자연재난, 신종위험 유형

거주지	사례수	자연재난				신종 위험						
		풍수해	폭설 및 한파	폭염 및 가뭄	지진, 산사태	식품 안전	질병 감염	정보 보안	사회기반시설	자살	안보 위협	환경 오염
덕양구	492	3.19	3.16	3.19	3.30	3.13	2.94	2.93	3.08	3.05	3.19	2.80
일산동구	319	3.06	3.05	3.15	3.24	3.02	2.80	2.76	2.88	2.89	3.07	2.66
일산서구	331	3.30	3.26	3.25	3.33	3.15	2.89	2.88	3.05	3.05	3.20	2.69

- 자연재난 유형의 세부 항목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거주지에서 폭설 및 한파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도출됨. 일산서구의 경우에는 폭설 및 한파 뿐만 아니라 폭염 및 가뭄에 대해서도 다른 자연재난 유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각 항목들에 대해 3.3점대 내외 수준으로 도출됨.
- 일산동구의 경우 침수·범람 등 풍수해에 대한 인식이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다른 거주지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2018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일산동구 내곡3 지하차도와 같은 도로 등을 포함해 일산동구 일대(풍동, 정발산동 등)의 저지대 지역의 주택 침수 피

해가 크게 발생하였던 사례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됨.

- 신중위험의 경우 모든 거주지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덕양구: 2.80점, 일산동구: 2.66점, 일산서구: 2.69점).
- 일산동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 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 인식이 2.76점으로 고양시 덕양구, 일산서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안전도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신중 위험과 관련된 다른 항목들의 경우에도 일산동구에서 안전도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신중위험의 경우 자살, 사회기반 시설 안전, 환경오염 등 지역의 현대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 변화에 기인해 발생하는 재난 유형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일산동구에서 주로 도시 안전 이슈와 관련된 우려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③ 위험도 평균 비교 - 성별 간 평균 인식 비교

[표 4-16]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사회재난 유형

성별	사례수	화재	시설안전	노후건물 안전	산업재해	다중시설	싱크홀, 지반침하	미세먼지
남성	490	3.16	3.27	3.05	3.16	3.24	2.80	2.41
여성	628	3.00	3.17	2.88	3.02	3.14	2.58	2.15

- 사회재난 유형에 대한 남/녀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응답자 모두 미세먼지에 대하여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남: 2.41점, 여성: 2.15점).
-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시설안전, 노후건물 안전 등 모든 세부 유형의 재난에서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치안범죄, 교통사고 유형

성별	사례수	치안범죄				교통사고			
		폭력	성범죄	절도 주거침입	특정대상 범죄	자동차 사고	대중교통 사고	2륜 차량 사고	보행자 사고
남성	492	3.15	3.11	3.20	3.13	2.85	3.12	2.69	2.89
여성	630	2.87	2.80	3.02	2.94	2.70	2.92	2.55	2.70

- 치안범죄 유형의 세부 항목 중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범죄를 가장 위험한 범죄·치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남성: 3.11점, 여성: 2.80점). 여성 응답자 그룹의 경우 치안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남성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각 항목별 위험도 인식 순위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룹 사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성범죄, (노인 등) 특정대상 범죄, 폭력범죄, 절도 등의 순으로 위험 인식이 높은 것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우 성범죄 다음으로 폭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사고 유형과 관련된 세부 안전사고 항목 중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2륜 차량 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남성: 2.66 점, 여성: 2.55점).
- 교통사고와 관련된 세부 유형의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이륜차 등 주행 사고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사고, 보행자 사고 측면에서 여성들의 안전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자연재난, 신종위험 유형

성별	사례수	자연재난				신종 위험						
		풍수해	폭설 및 한파	폭염 및 가뭄	지진, 산사태	식품 문제	질병 문제	정보 보안	사회기반시설	자살	안보 위협	환경 오염
남성	491	3.27	3.20	3.23	3.34	3.21	2.99	3.01	3.12	3.05	3.21	2.79
여성	632	3.11	3.13	3.17	3.26	3.02	2.81	2.76	2.93	2.97	3.12	2.68

- 자연재난 유형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는 남성의 경우 폭설 및 한파에 대한 안전 인식이 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3.11점으로 풍수해 안전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도출됨.
- 또한 신종 위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환경오염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남성: 2.79점, 여성:2.68점).
- 자연재난 및 신종 위험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응답자 그룹에서 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에 대한 평균 인식 점수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인 위험도 순위 측면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룹 상호 간에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자연재난의 경우 침수·범람 등의 풍수해 피해였으며, 신종위험과 관련하여서는 개인 정보 보안 이슈 등과 관련된 정보 보안 문제로 나타남.

[표 4-19] 성별 위험도 인식 평균 순위 비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11순위	12순위
남성	미세 먼지	이륜차 사고	환경 오염	싱크홀, 침하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질병, 감염병	정보 보안	노후 건물 안전	자살	성범죄	대중 교통 안전
여성	미세 먼지	이륜차 사고	싱크홀, 침하	환경 오염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정보 보안	성범죄	질병, 감염병	폭력 범죄	노후 건물 안전	대중 교통 안전

- 상기 표는 재난 유형의 세부 항목 중 남성과 여성이 위험하게 인식하는 우선순위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종합하여 비교한 것임
-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륜차 사고, 환경오염, 싱크홀 및 지반침하 이슈 등에 대한 위험을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재난사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남성과 여성 응답자 집단을 상호 비교하였을 때에 [표4-19]와 같이 남성의 경우 환경오염, 신종 질병 및 감염병, 노후 건물 안전 등에 대해서 여성보다 더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싱크홀 및 지반 침하, 정보 보안, 성범죄 이슈에 대해 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그리고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의 경우에만 자살 문제가 상위권에 속하는 안전 문제로 도출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반대로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에만 폭력 범죄가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녀 성별에 따라 지니고 있는 안전 이슈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

④ 위험도 평균 비교 - 연령대별 평균 인식 비교

[표 4-20]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사회재난 유형

구분	사례수	화재	시설안전	노후건물 안전	산업재해	다중시설	싱크홀, 지반침하	미세먼지
15~19세	44	3.14	3.52	3.30	3.50	3.61	3.11	2.14
20~29세	159	3.06	3.38	3.13	3.17	3.38	2.63	2.12
30~39세	156	3.10	3.26	2.97	3.08	3.21	2.49	2.10
40~49세	229	2.98	3.08	2.83	2.93	3.07	2.56	2.14
50~59세	327	3.09	3.17	2.91	3.10	3.16	2.76	2.37
60세 이상	171	3.09	3.21	2.95	3.08	3.11	2.77	2.48

- 사회재난 유형의 위험도 인식을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를 다른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 인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싱크홀 및 지반 침하 이슈를 제외한 사회재난 유형과 관련하여 40대의 응답자 그룹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진단됨.
- 이와 비교해 싱크홀 및 지반 침하, 미세먼지 이슈의 경우 30대 응답자가 5점 만점 기준 각각 2.49점, 2.10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속한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치안범죄, 교통사고 유형

구분	사례수	치안범죄				교통사고			
		폭력	성범죄	절도 주거침입	특정대상 범죄	자동차 사고	대중교통 사고	2륜 차량 사고	보행자 사고
15~19세	44	3.18	3.02	3.27	3.05	2.73	3.16	2.61	2.95
20~29세	159	3.13	3.02	3.26	3.07	2.70	3.00	2.58	2.77
30~39세	156	3.05	2.97	3.13	3.12	2.68	2.84	2.58	2.69
40~49세	229	2.88	2.81	2.97	2.90	2.70	3.00	2.51	2.74
50~59세	327	2.99	2.92	3.10	3.04	2.84	3.04	2.67	2.83
60세 이상	171	2.93	2.99	3.09	3.01	2.83	3.07	2.66	2.80

- 치안범죄 유형의 경우 60대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성범죄에 대하여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진단됨.
- 한편, 60세 이상 응답자 그룹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위험을 지역 내에서 가장 우려되는 치안범죄 관련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치안범죄 유형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40대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더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교통사고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 그룹에서 이륜차량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0대 응답자의 경우 이륜차량 사고에 대한 안전도 인식은 5점 만점 기준 2.51점으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에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륜차량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는 30대 연령의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에 비해 보다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음.

[표 4-22]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비교 - 자연재난, 신종위험 유형

구분	사례수	자연재난				신종 위험						
		풍수해	폭설 및 한파	폭염 및 가뭄	지진 산사태	식품 안전	질병 감염병	정보 보안	사회기반시설	자살	안보 위협	환경 오염
15~19세	44	3.70	3.64	3.68	3.45	3.45	3.27	3.05	3.36	3.34	3.73	2.91
20~29세	159	3.38	3.32	3.35	3.48	3.35	3.02	2.95	3.12	3.07	3.32	2.66
30~39세	156	3.24	3.17	3.31	3.37	3.13	2.71	2.90	2.99	3.09	3.12	2.71
40~49세	229	3.17	3.10	3.13	3.28	3.07	2.87	2.78	2.97	2.89	3.14	2.68
50~59세	327	3.14	3.16	3.17	3.28	3.07	2.89	2.91	3.01	2.97	3.11	2.75
60세 이상	171	2.96	3.00	3.02	3.09	2.91	2.85	2.78	2.94	2.99	3.04	2.77

- 자연재난 유형의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 그룹 내에서 3점대 내외의 평균 점수가 도출됨에 따라 고양시민들이 느끼는 재난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재난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0대 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자연재난 중 가장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폭설 및 한파 항목으로 진단됨.
 - 1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과는 달리 지진 및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5점 만점에 3.45점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 사례수가 타 연령대 그룹과 비교하여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향후 보완이 요구됨.
- 자연재난 유형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

들에 비해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종위험의 경우 30대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음. 30대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 인식 역시 가장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연령대의 응답자들과는 달리, 질병 및 감염병에 대해서도 가장 위험한 안전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점 만점 기준, 2.71점).

[표 4-23] 연령별 위험도 인식 평균 순위 비교

구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순위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2순위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싱크홀, 침하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이륜차 사고
3순위	자동차 사고	싱크홀, 침하	이륜차 사고	싱크홀, 침하	환경 오염	환경 오염
4순위	환경 오염	환경 오염	자동차 사고	환경 오염	싱크홀, 침하	싱크홀, 침하
5순위	보행자 사고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정보 보안
6순위	성범죄	보행자 사고	환경 오염	보행자 사고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7순위	정보 보안	정보 보안	신종 질병, 감염병	정보 보안	신종 질병, 감염병	자동차 사고
8순위	특정대상 범죄	대중교통 사고	대중교통 사고	성범죄	정보 보안	신종 질병, 감염병
9순위	싱크홀, 침하	성범죄	정보 보안	노후건물 안전	노후건물 안전	식품 안전
10순위	화재	신종 질병, 감염병	성범죄	신종 질병, 감염병	성범죄	폭력 범죄
11순위	대중교통 사고	화재	노후건물 안전	폭력범죄	자살	사회기반시설 안전
12순위	폭력 범죄	자살/ 특정대상 범죄	사회기반시설 안전	자살	폭력 범죄	노후건물 안전

- 상기 표는 재난 유형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연령대별로 가장 우려도가 높은 재난안전 사고 이슈 상위 12개 항목에 관한 사항을 비교한 것임.
- 연령대별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연령대별로 생활 패턴이나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집단들에서 주로 지니고 있는 안전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 연령별 분석에서도 앞선 거주지, 성별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10대 응답자 그룹의 경우 다른 연령대 응답자 그룹과 비교하여 성범죄, (노약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의) 특정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연령층과 관계없이 대체로 모든 응답자 그룹에서 미세먼지와 싱크홀 이슈, 교통사고 관련 이슈(주행자 사고, 보행자 사고, 이륜차 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한편, 3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대 그룹에서는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주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노후건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상승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모든 응답자 그룹에서 자동차 사고, 보행자 사고 등의 교통사고 안전 이슈가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60세 이상 응답자 집단에서는 다른 연령대 집단과 달리 자동차 주행 사고보다 보행자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60세 이상의 응답자 집단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진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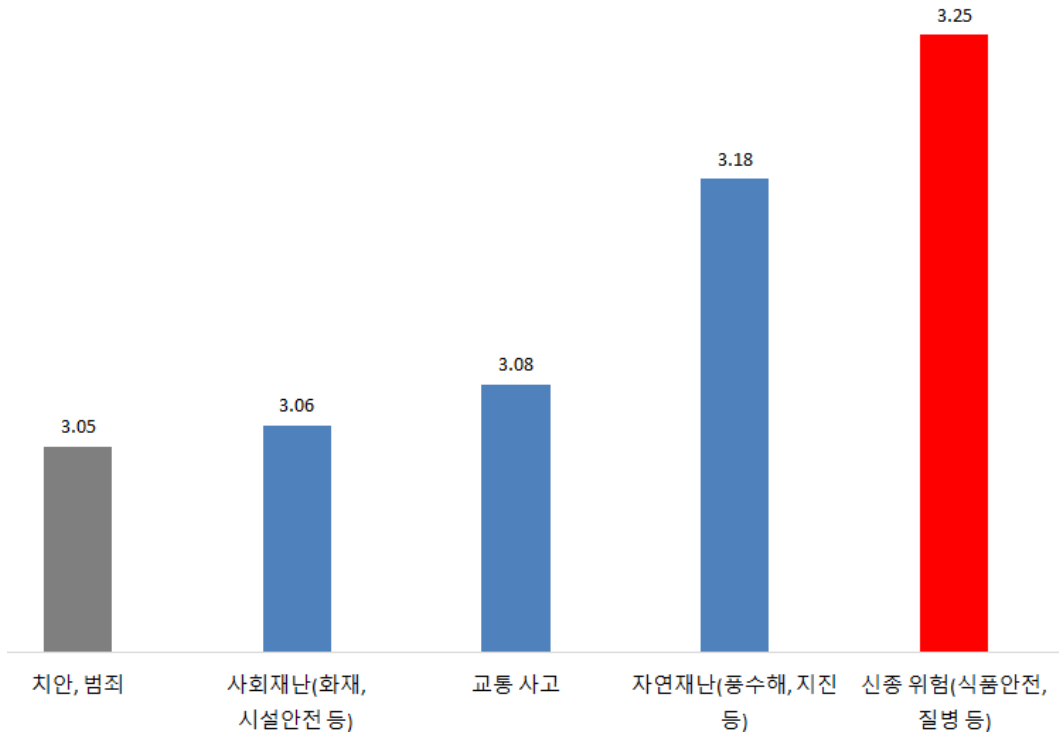
(7) 재난 유형별 관리 필요성 인식

① 재난 유형별 잠재적 위험도 인식

- 각 재난유형별로 향후 그 위험 정도가 확대 또는 감소할 것인지 그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12점으로 도출됨.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민들은 각 유형별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해 향후 어떠한 특정 재난이 특별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그림 4-23] 각 재난 유형별 향후 전망에 대한 고양시민 인식



□ 각 재난유형별 인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식품안전, 신종 질병 및 감염병, 환경 오염 등의 이슈들을 포함하는 신종 재난의 위협 가능성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3.25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위험요인과 비교하여 우려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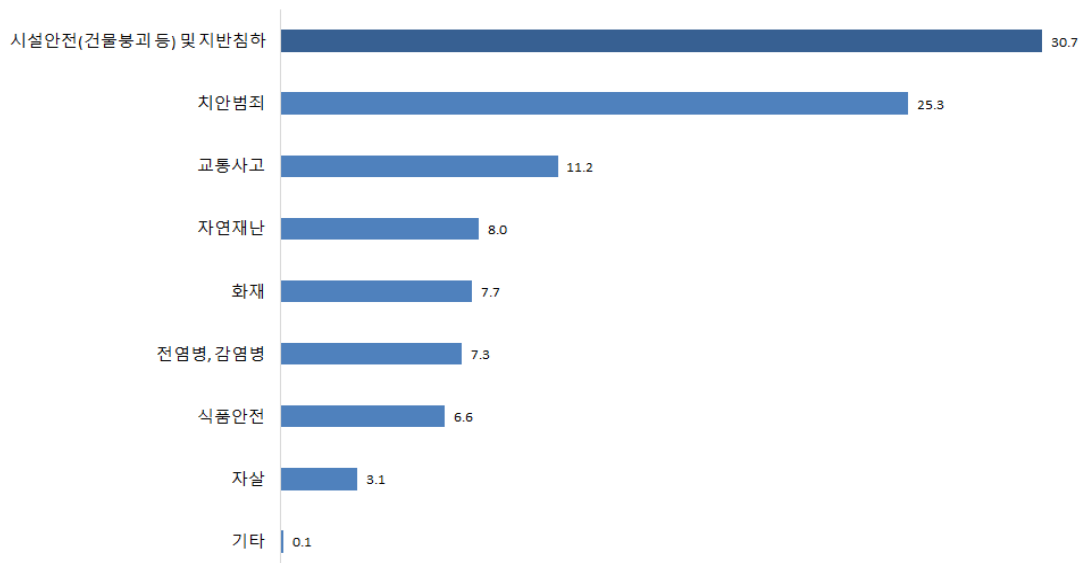
□ 신종위험의 경우 현대사회에 이르러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

하고 있는 안전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양시에서는 치안·범죄, 자연재난 등 기존에 운영·구축하고 있는 안전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신종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② 고양시 내 중점 안전관리 분야

- 각 재난유형별 위협도 증가 전망과 더불어, 보다 현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양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난 유형 및 이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그림 4-24] 고양시 중점안전관리 대상 인식



- 분석 결과, 시설안전 및 지반 침하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3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치안범죄(25.3%)> 교통사고(11.2%)> 자연재난(8.0%)> 화재(7.7%)> 전염병 및 감염병(7.3%)> 식품안전(6.6%)> 자살(3.1%)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4] 고양시 중점안전관리 대상 인식 - 거주지별 응답 비율 비교

거주지	치안범죄	교통사고	화재	시설안전 지반침하	자연재난	전염병 감염병	식품안전	자살
덕양구	25.4	13.3	7.6	26.4	8.3	7.1	7.8	4.1
일산동구	23.4	8.5	8.2	33.6	9.2	8.5	6.3	2.4
일산서구	26.7	10.9	7.0	33.7	6.3	6.8	5.6	2.4

- 고양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안전 분야에 대해 거주지별 인식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에 따른 우선순위에는 전체 종합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각 유형별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예로 덕양구의 경우 일산동구 및 서구와 비교하여 시설안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반면에 치안범죄,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13.3%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인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덕양구의 경우 식품안전(7.8%), 자살(4.1%)에 대해서도 다른 거주지의 응답자에 비교하여 관리 필요성이 공감하는 인원의 비중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일산동구의 경우 시설안전 및 지반침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원의 비중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덕양구와 비교하였을 때 7% 이상 차이가 존재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시설안전 및 지반침하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자연재난(9.2%), 전염병·감염병(8.5%), 화재(8.2%)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타 거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일산서구의 경우 시설안전, 치안범죄의 순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덕양구, 일산동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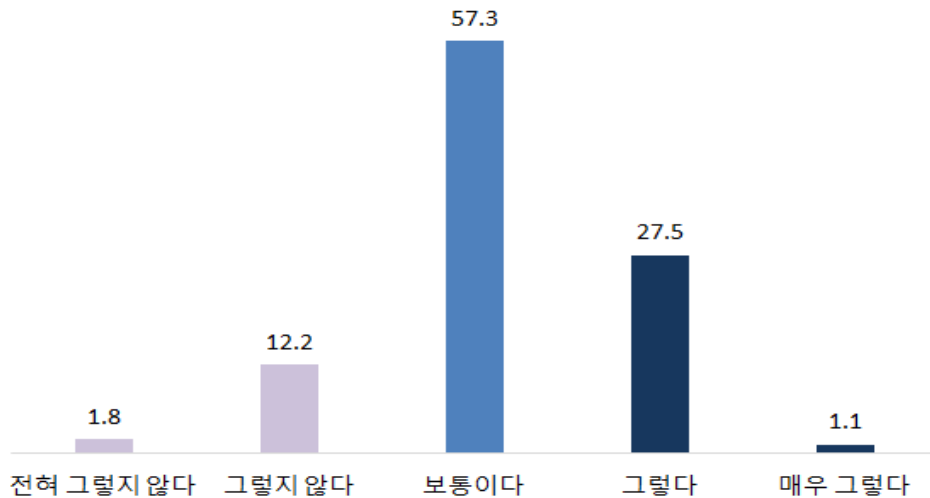
인원의 비중이 각각 33.7%,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연재난, 식품안전, 자살 등 상대적으로 다른 재난안전사고 이슈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인원의 비중이 가장 낮게 도출된 만큼 일산서구 지역의 안전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시설안전 및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4) 안전문화 일반

(1) 고양시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① 고양시 사회분위기 안전 중시정도

[그림 4-25] 고양시의 사회분위기 안전 중시정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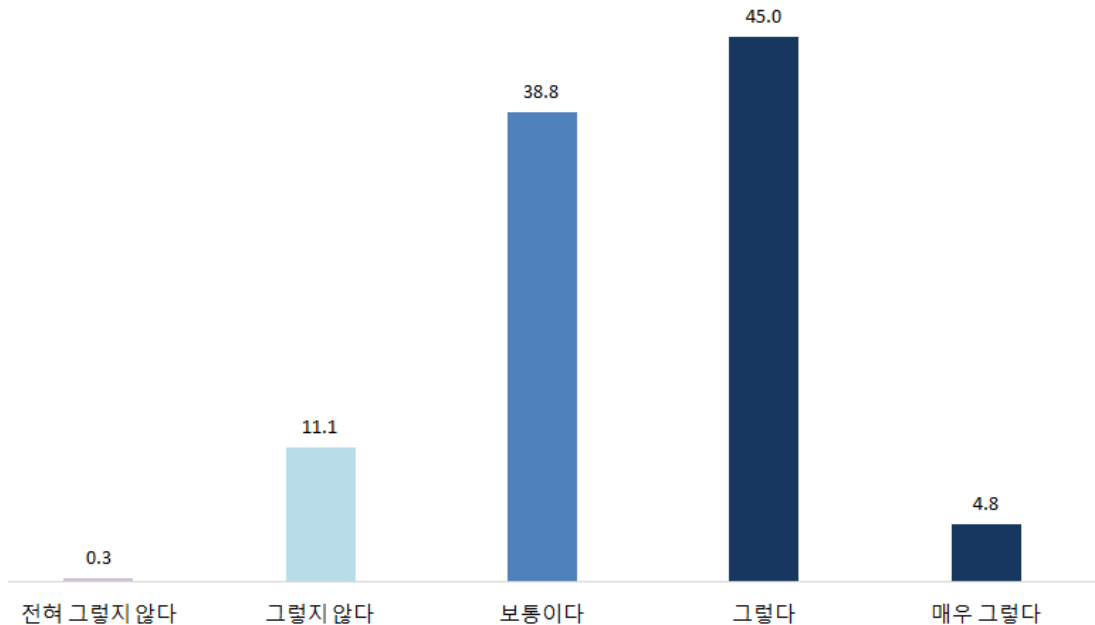


- 고양시 사회 분위기상 안전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 기준 3.1점이었으며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 또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안전을 중시한다(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8.6%로, 중시하지 않는다(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중 1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을 중시한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진단할 수도 있으나, 응답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② 개인차원 안전 중시정도

[그림 4-26] 개인차원의 안전 중시정도 - 업무 수행 시 안전 중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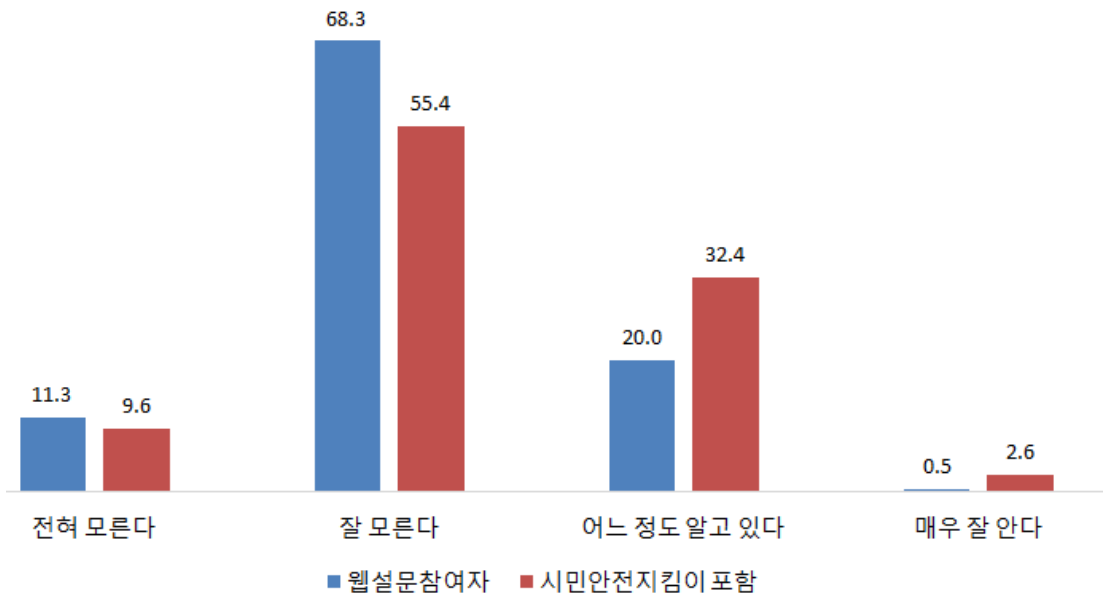


- 개인 차원에서 업무 수행 중 신속성, 효율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0%의 비율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8.8%)> 그렇지 않다(11.1%)> 매우 그렇다(4.8%)> 전혀 그렇지 않다(0.3%) 순으로 나타남.
- 긍정적(그렇다 + 매우 그렇다) 응답의 비중이 49.8%로 전체 응답자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은 11.4%에 불과하여 개인 차원에서 안전을 중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③ 고양시 안전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인식

[그림 4-27] 고양시 안전 정책 관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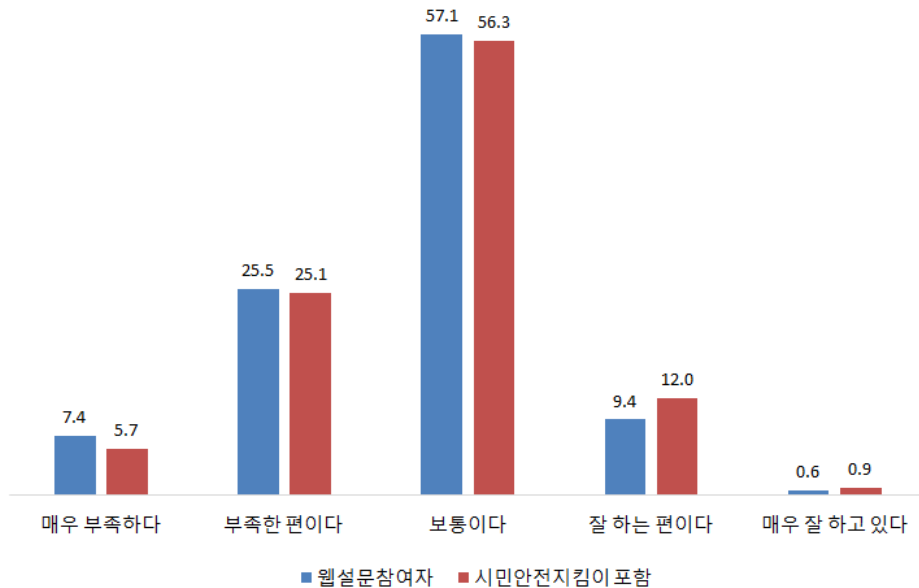


- 고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고양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위해 관련 정책들에 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그림4-27]과 같이 도출됨.
- 응답자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인원보다 모르고 있다는 인원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시민안전지킴이에 활동 중인 인원들이 참여한 2차 조사와 웹 설문

기반한 1차 조사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예로 웹설문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8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고양시의 안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시민안전지킴이에 활동 중인 인원까지 포함한 전체 결과(1,161명)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35%까지 늘어나,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약 65%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800명 대상 1차 조사 대비 15% 하락한 결과로 살펴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2차 조사에서 현재 시민안전지킴이 등 안전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 중인 시민들이 조사에 다수 참여한 데에서 나타난 결과로 살펴볼 수 있음.

[그림 4-28] 고양시 안전 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



- 고양시 안전 관련 정책의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도 인지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지킴이까지 포함된 전체 결과(1,161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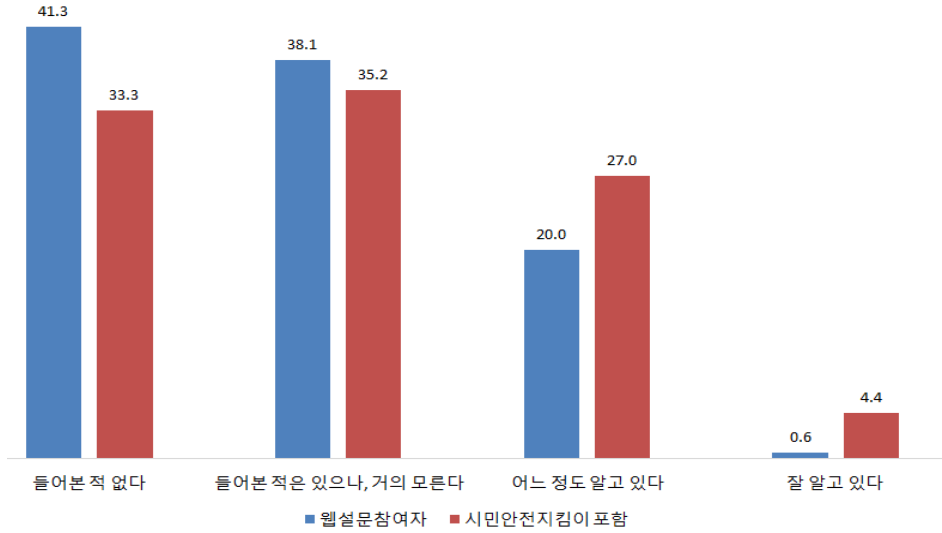
- 이러한 예로 800명의 웹설문 참여자 대상 1차 조사 결과에서는 부정적 응답자의 비중이 32.9%, 긍정적 응답자의 비중이 10.0%를 차지함. 이와 비교해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인원이 포함된 전체 결과에서는 부정적 응답자의 비중은 30.8%로 약 2% 하락한 반면 긍정적 응답자의 비중은 12.9%로 약 3% 상승한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그러나 인지도 조사 결과와는 달리 만족도 측면에서는 일반 시민들과 시민안전지킴이에 활동 중인 시민들 간에 상대적으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만큼 고양시의 현재 추진 중인 안전정책에 만족하기보다는 향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2)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① 고양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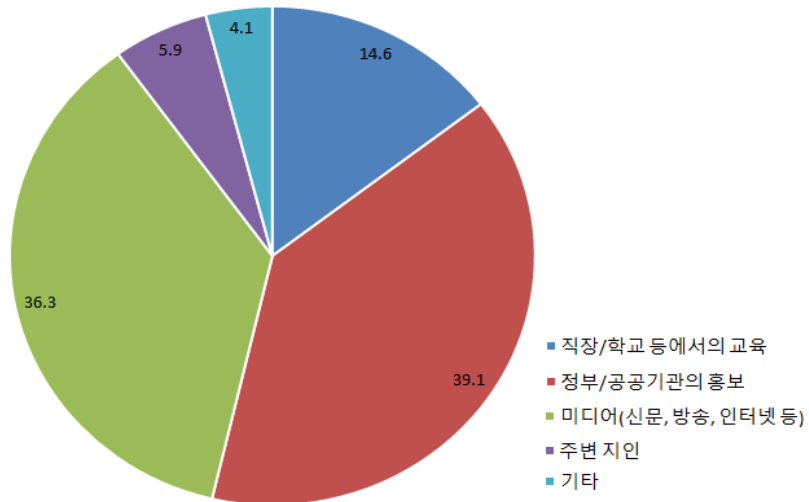
- 고양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전반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31.4%로 들어본 적 없다(들어본 적 없다 + 들어본 적은 있으나, 거의 모른다)고 응답한 인원(68.5%)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특히, 현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인원들이 포함된 2차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800명 대상 웹설문 결과만을 살펴보면 잘 모른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9.4%까지 상승하는 만큼 고양시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의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됨.

[그림 4-29]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관련 인지도



- 심층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과 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9.1%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홍보를 통해 습득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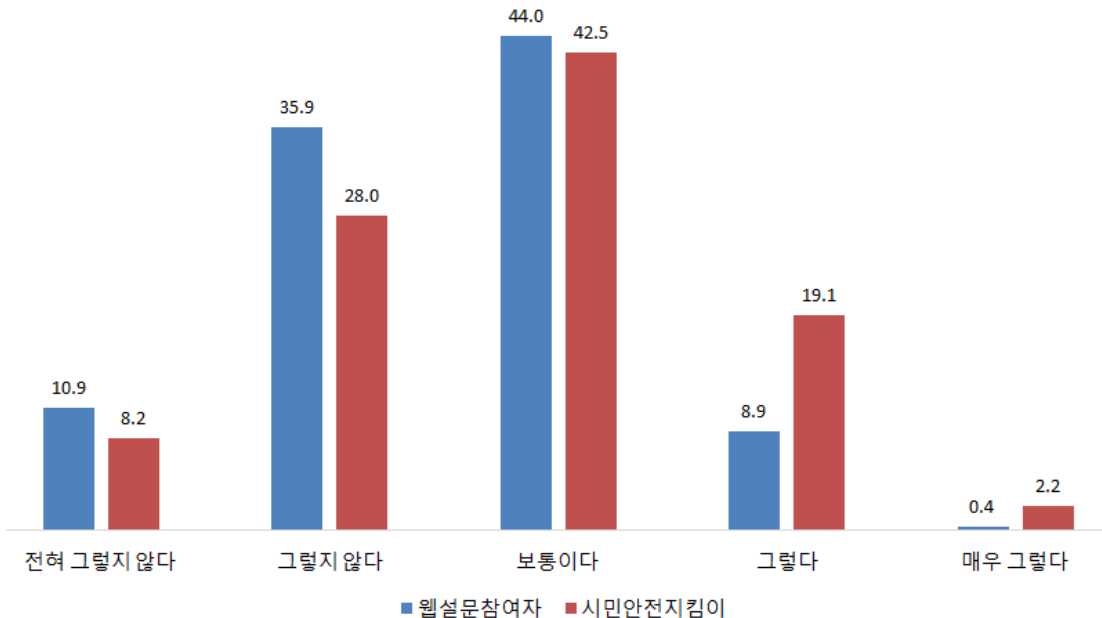
[그림 4-30] 안전문화운동 정보 관련 습득 경로



- 다음으로 신문·방송·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습득 경로가 약 36.3%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캠페인,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안전문화운동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됨.
-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민들의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향후 보다 더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함. 특히, 안전문화운동 관련 정보의 습득 경로 중 정부 차원의 홍보, 미디어를 통한 안내 등을 통해 인지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4이상(75.4%)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고양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나 캠페인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직장/학교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습득하였다는 응답이 약 5.9%에 머무르는 결과 등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 학교 등을 통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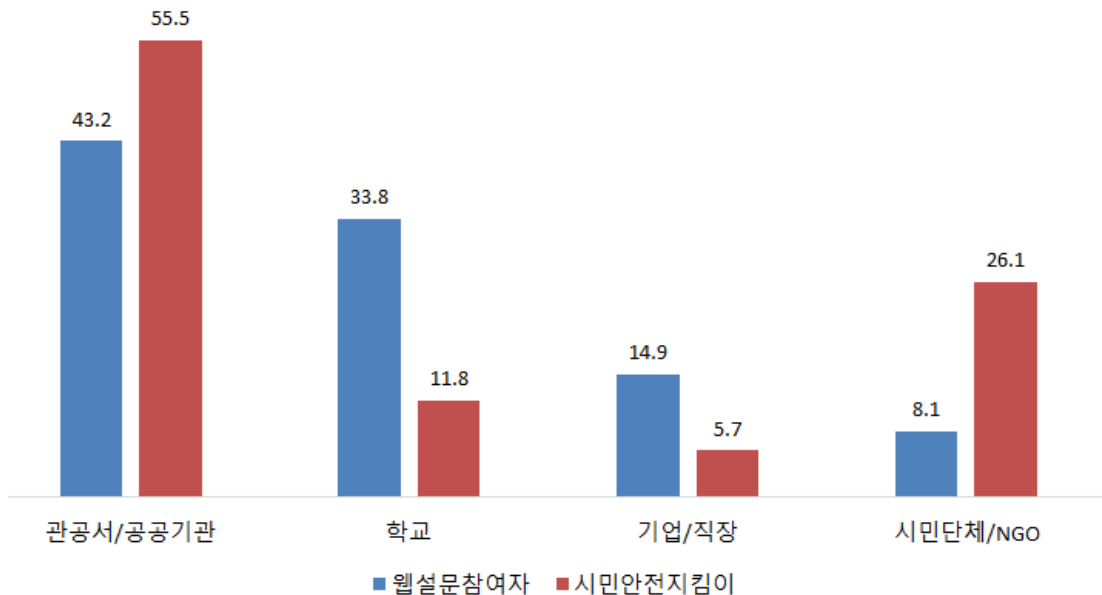
② 안전문화운동 추진 방법에 대한 인식

[그림 4-31]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긍정 평가 동의 정도)



- 고양시의 안전문화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중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조사 결과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긍정적인 응답(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경우 21.3%를 차지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36.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원이 높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특히, 시민안전지킴이를 활동 중인 인원을 제외한 1차 조사 결과(800명 대상 웹 설문)만을 구분하면, 긍정적인 응답자(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중은 9.3%로 약 12% 하락하고, 부정적인 평가(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경우 46.8%로 약 10%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다수의 고양시민들이 현재 안전문화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그림 4-32]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주체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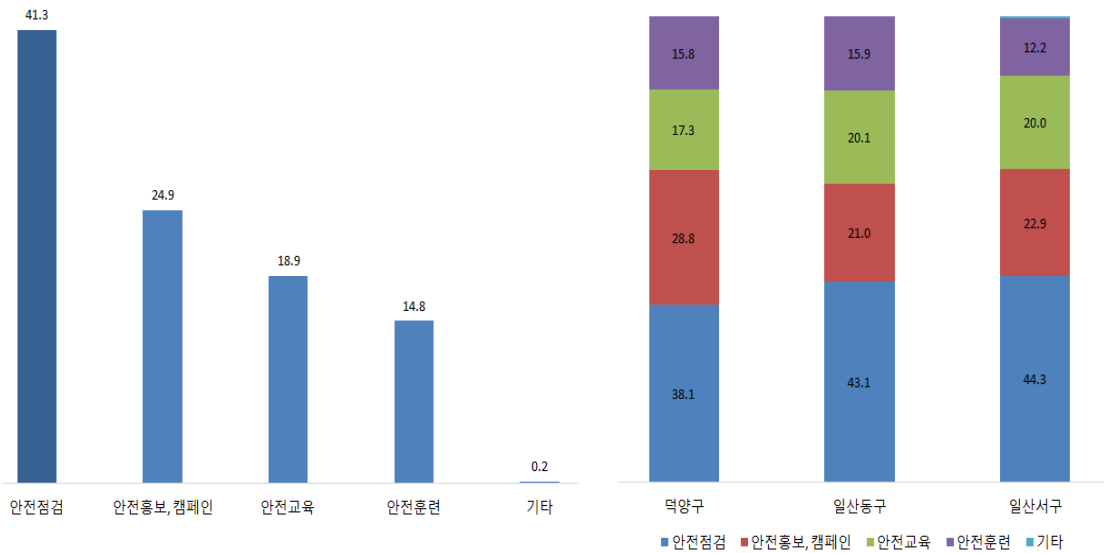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선 질문에서 현재 안전문화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인원에 한하여 현재 어느 기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함. 그 결과, 관공서/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5.5%를 차지하여 타 기관에 비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한편,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중인 시민들을 포함한 결과와 온라인 웹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구분하여 조사를 살펴보면 추진 주체 평가에 대해서 상반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웹설문결과에 기반하여 1차 조사 결과만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그림 4-32]와 같이 관공서·공공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학교(33.8%) > 기업/직장(14.9%) > 시민단체/NGO(8.1%)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하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인원이 참여한 전체 조사 결과에서는 시민단체/NGO의 평가가 26.1%로 관공서·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11.8%), 기업/직장(5.7%)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인 시민안전지킴이에 활동 중인 응답자들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가운데 향후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동시에 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협력 주체들을 구성한 거버넌스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③ 안전문화운동의 중점 추진 영역에 대한 인식

-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초점에 두어야 할 중점 영역이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안전문화운동이 필요한 활동 분야에 대하여 조사함.
 - 안전문화운동 활동 분야는 앞선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안전교

육, 안전점검, 안전홍보 및 캠페인, 안전 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4-33] 안전문화운동 중점 활동 분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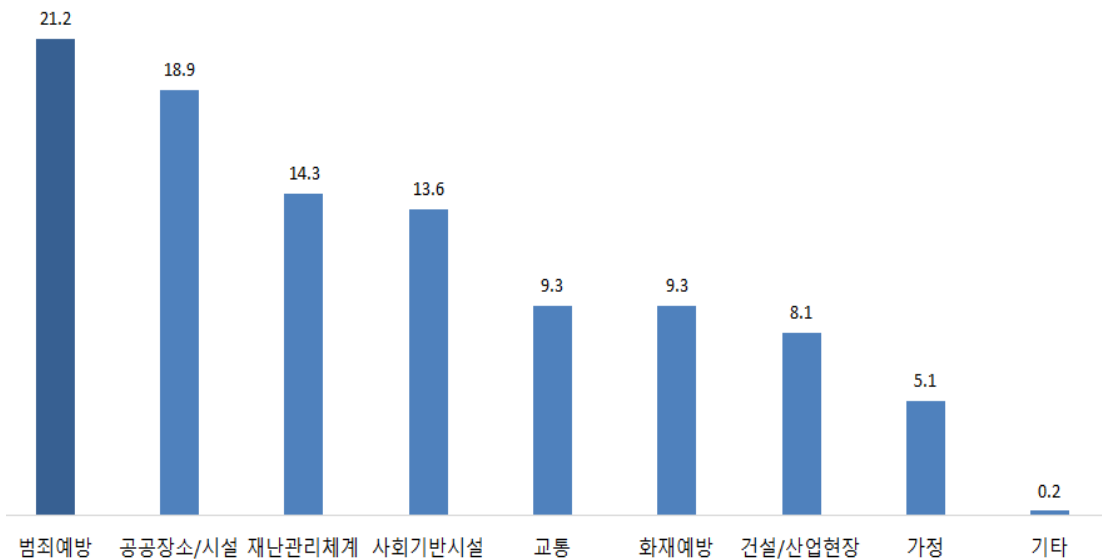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조사 결과, 안전점검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안전홍보·캠페인(24.9%)> 안전교육(18.9%)> 안전훈련(14.8%) 순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고양시민들은 안전교육이나 안전훈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점검 활동과 안전홍보 등의 활동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별 응답 조사에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안전문화운동의 중점 활동 분야에 대한 응답 비중을 거주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안전점검, 안전홍보·캠페인에 대한 중요도 순으로 강조된 데 대해서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그러나 덕양구의 경우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8.1%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일산동구 43.1%, 일산서구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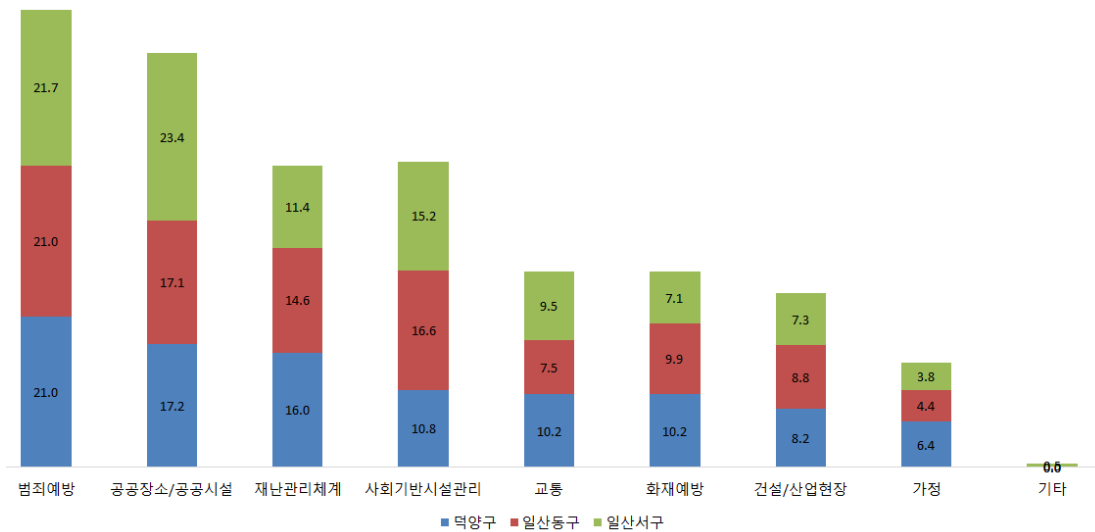
- 또한 덕양구는 안전홍보, 캠페인에 대해 강조하는 인원의 비중(28.8%)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와 비교해 일산 지역의 경우 덕양구와 비교해 안전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인원의 비중이 약 20.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산동구의 경우 안전교육, 안전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중이 각각 20.1%, 15.9%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회기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일산 지역의 경우 시설점검 등의 안전점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가운데 덕양구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 뿐만 아니라 안전 홍보·캠페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음.
- 두 번째로, 안전문화운동의 중점 추진 분야와 관련하여, 안전문화운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 조사함.

[그림 4-34] 안전문화운동 중점 적용 분야에 대한 인식



- 구체적인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기준으로 안전문화운동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1.2%로 다른 영역의 응답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타 응답자를 제외하면 가정 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5.1%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운동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논의에 대해 거주지별로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안전문화운동 최우선 추진 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4-35] 재난안전사고 우선 추진 분야에 관한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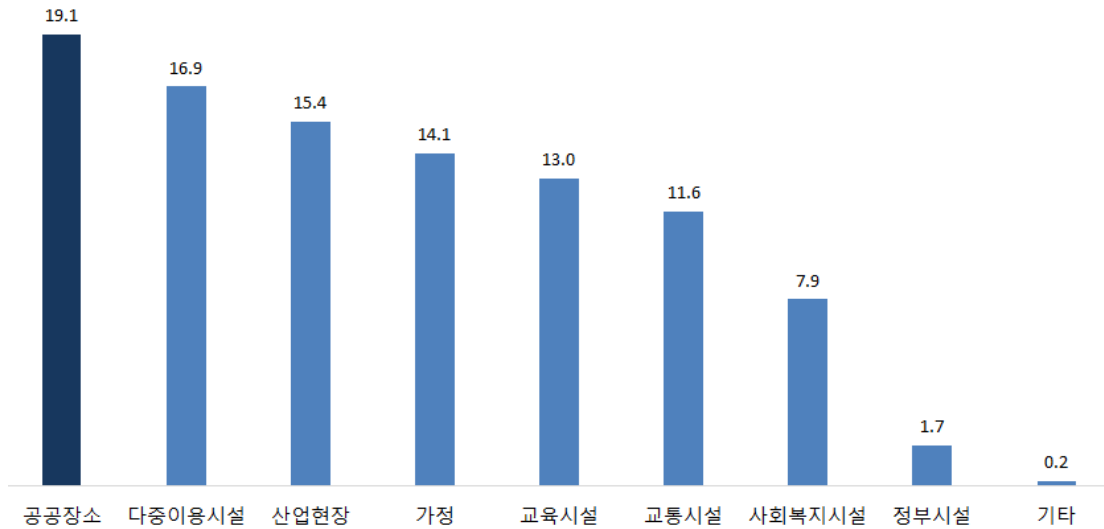


- 덕양구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0%로 가장 1순위로 나타났으며 재난관리체계(16.0%), 교통(10.2%), 화재예방(10.2%), 가정 영역(6.4%)에 안전문화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타 거주지의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와 비교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사회기반시설 관리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덕양구 지역주민들의 경우 범죄예방, 공공시설관리 필요성 등에 공감하는 동시에 타 지역보다도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산동구의 경우도 범죄예방 목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역 내에서 21.0%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건설/산업현장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이 8.8%로 타 거주지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에는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서구의 경우, 전체 결과와는 차별적으로 공공장소/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문화운동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사회기반시설관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중 또한 15.2%로 재난관리체계의 중요성보다 강조되는 등 전체 응답자 결과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일산서구 지역에서는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주요 시설들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공간적 측면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대해 조사함. 안전문화운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간 및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9.1%로 다른 장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16.9%)> 산업현장 및 생산시설(15.4%)> 가정(14.1%)> 교육시설(13.0%)> 교통시설(11.6%)> 사회복지시설(7.9%)> 국방시설 등의 정부시설(1.7%)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함에 따라 향후 고양시 차원에서 공공장소를 비롯해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해당 장소에서의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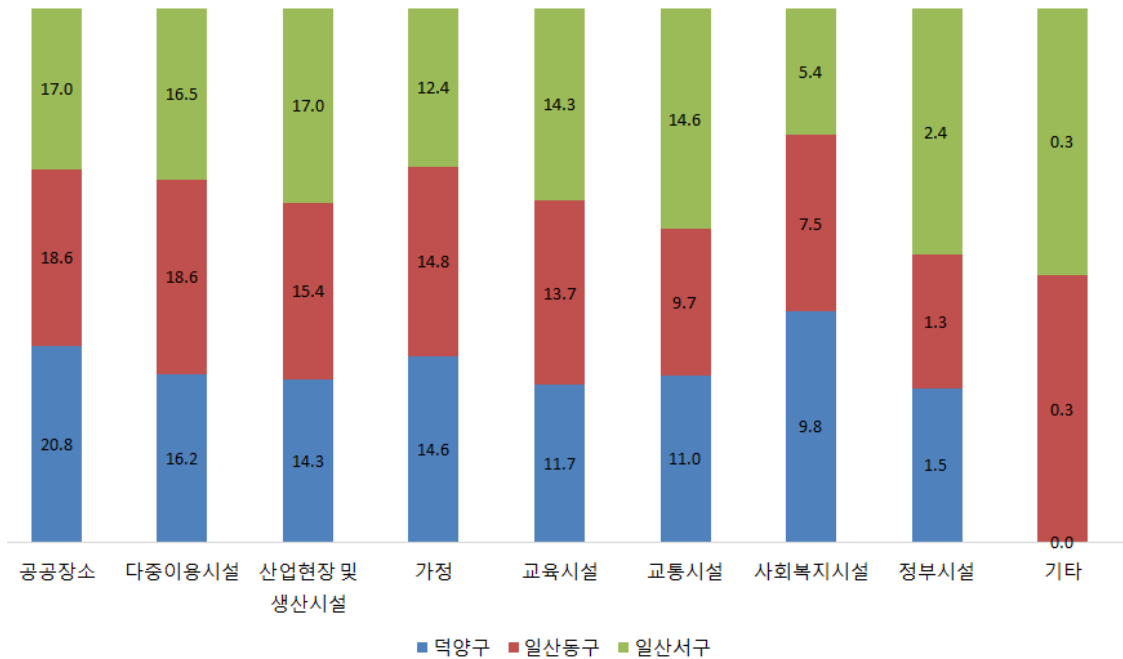
[그림 4-36] 안전문화운동 추진 장소



-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우선 추진 공간에 대한 의견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 특징 등을 분석하고자 지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함.
- 덕양구의 경우 추진 장소 중, 공공장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전체 결과와 비교하여 가정을 강조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14.6%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9.8%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산동구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8.6%로 동일하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는 3개구 가운데 1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서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다중이용시설보다 공공장소 및 산업현장·생산시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었으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운동보다 교통시설과 교육시설에 도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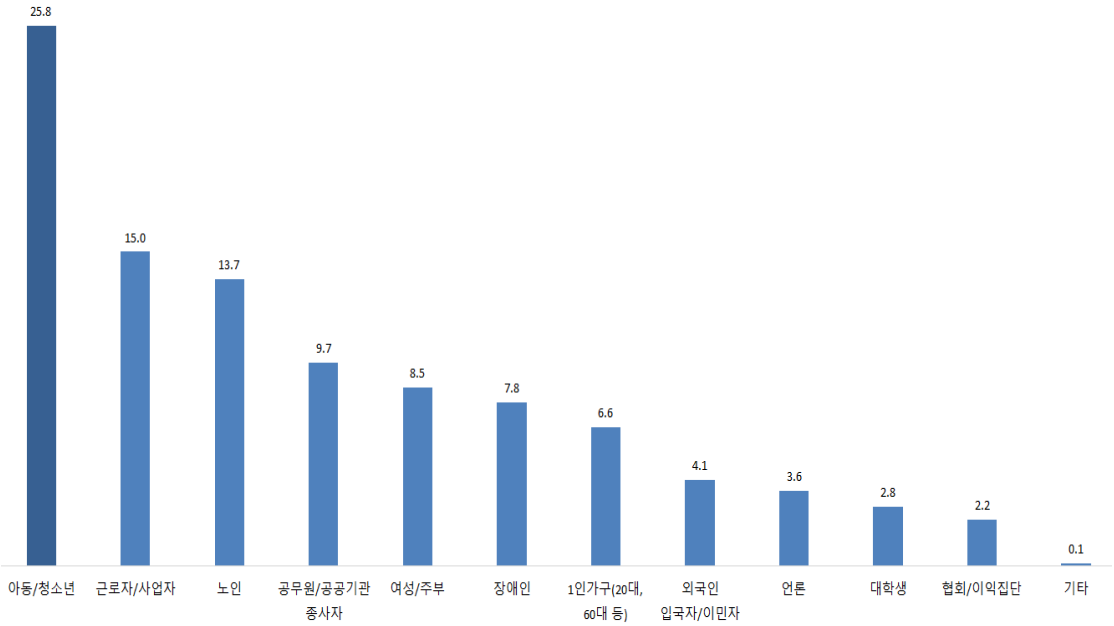
[그림 4-37] 안전문화운동 최우선 적용 장소에 대한 거주지별 비교



- 네 번째로, 안전문화운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조사함. 그 결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근로자/사업자(15.0%)> 노인(13.7%)>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9.7%)> 여성/주부(8.5%)> 장애인(7.8%)> 1인 가구(6.6%)> 외국인 입국자/이민자(4.1%)> 언론(3.6%)> 대학생(2.8%)> 협회/이익집단(2.2%)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문화의 특성상 체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발달기에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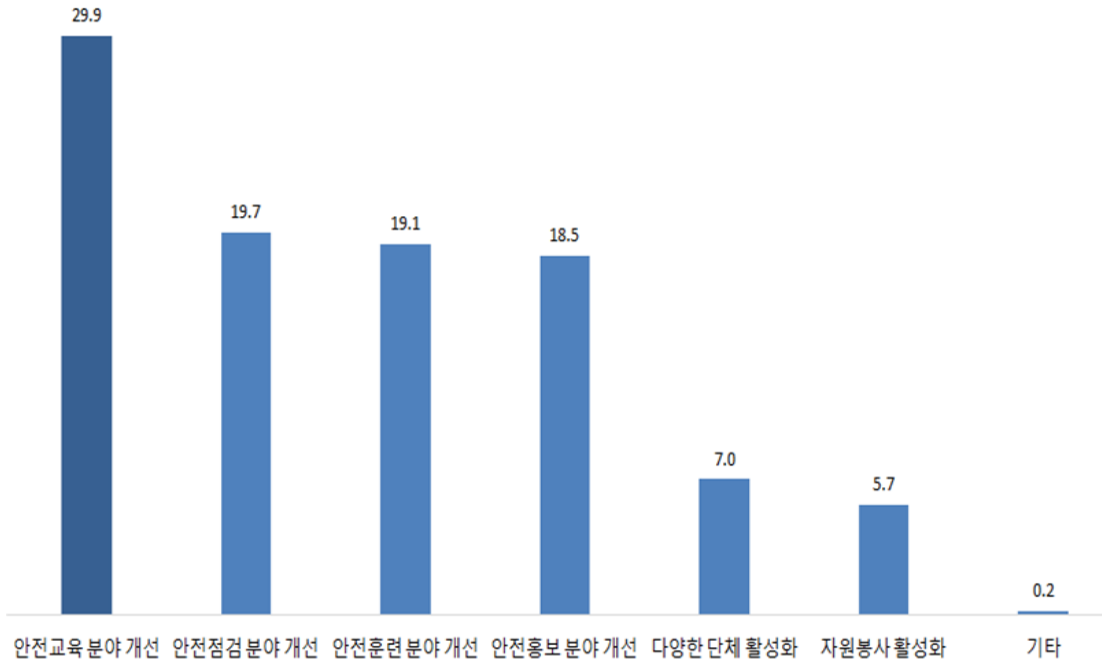
습득된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그림 4-38] 안전문화운동 우선 추진 대상



-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체계화·내실화 등 안전교육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9.9%로 다른 방안들에 비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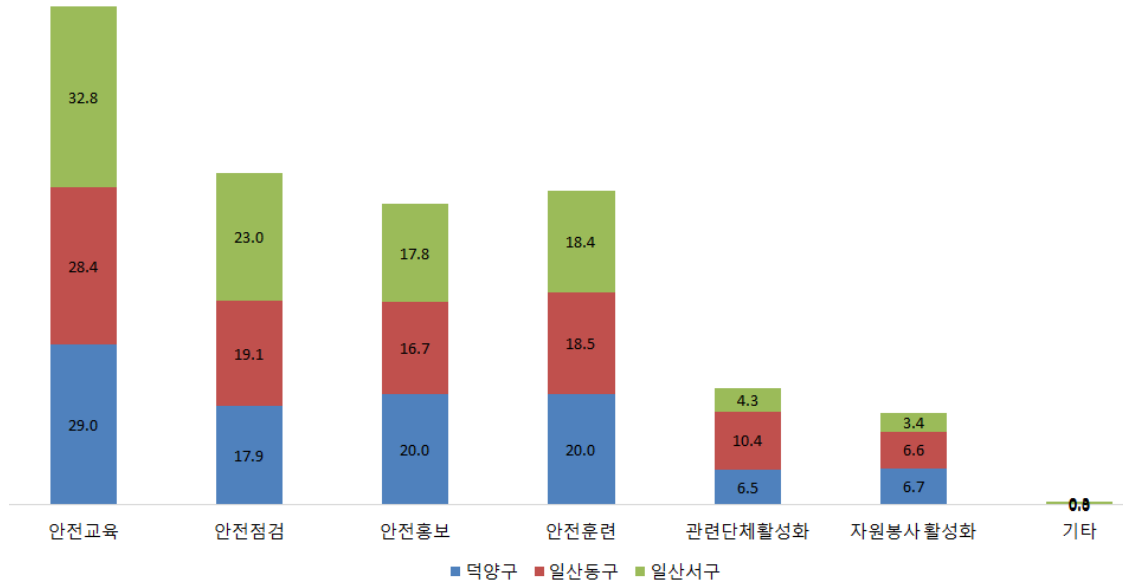
[그림 4-39]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필요 분야



- 안전교육 다음으로 안전점검(19.7%), 안전훈련(19.1%), 안전홍보(18.5%)의 순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비중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민들은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차원에서 안전교육의 확대 및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안전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분야에 대해 거주지별 인식을 비교한 결과 덕양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에 대한 비중이 29.0%으로 가장 높게 도출됨. 그러나 전체 결과와는 차별적으로 안전홍보와 안전훈련의 중요성이 각각 20.0%로 안전점검보다 더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해 덕양구 거주 시민들의 경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을 통해 안전홍보, 안전훈련의 중요성 등을 안전점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40]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필요 분야에 대한 거주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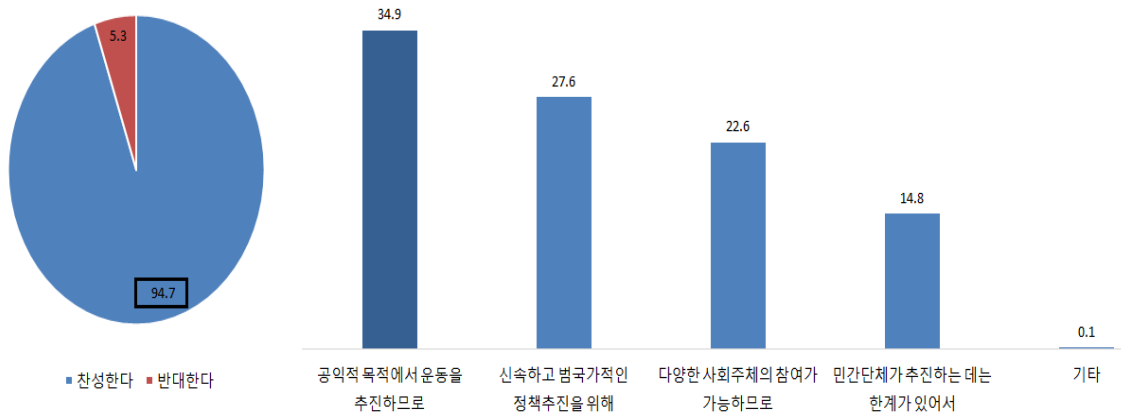
- 일산동구의 경우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개구 지역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그 비중이 28.4%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전체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안전홍보(16.7%)보다 안전훈련(18.5%)의 중요성을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다른 지역들과는 차별적으로 관련 단체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역구 응답자 가운데 10.4%가 동의하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일산서구는 안전교육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 지역 내 응답자 가운데 32.8%가 동의하여 3개구 지역 가운데에서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인원의 응답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산서구 지역 응답자들은 덕

양구, 일산동구와 비교하여 안전교육,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가장 많은 인원의 비중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결과와는 차별적으로 안전훈련(18.4%)이 안전홍보(17.8%)에 비해 우선적으로 강조됨. 이러한 결과는 일산서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안전홍보보다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안전훈련에 대해 그 필요성을 보다 더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④ 안전문화운동의 주체 및 참여 의사에 대한 의견

- 안전문화운동 참여의사에 대한 조사에 앞서 안전문화운동이 현재 공공부문(고양시)을 통해 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그림 4-41] 공공부문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에 찬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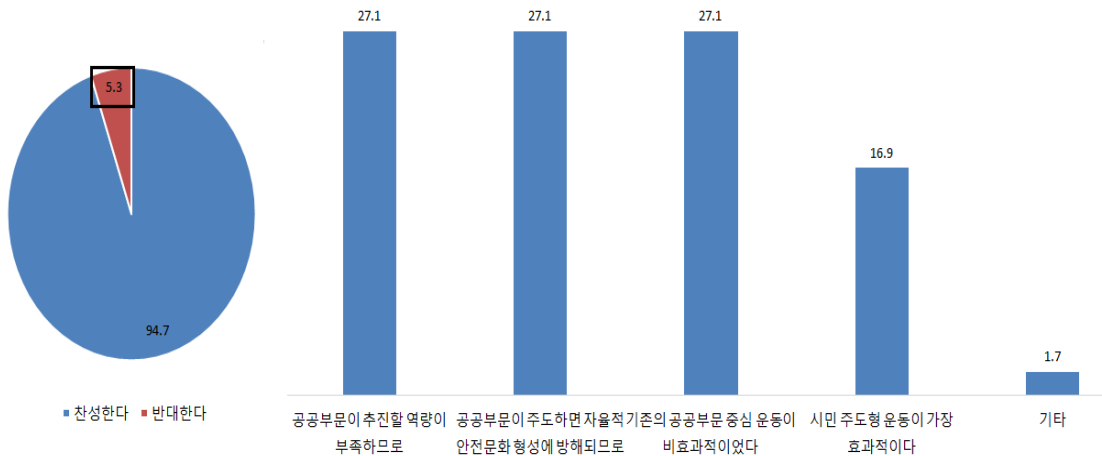


-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94.7%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익적 목적에서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된다는 응답이 34.

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 다음으로, ‘신속하고 범국가적인 정책추진을 위해(27.6%)’,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22.6%)’ 필요하다는 응답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14.8%로 가장 낮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도출됨.

[그림 4-42] 공공부문 주도 안전문화운동에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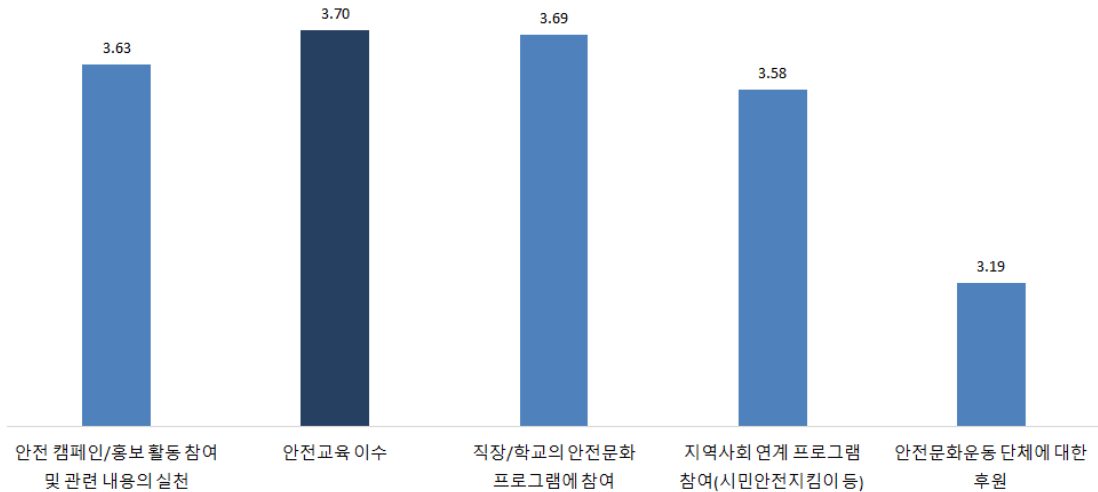


- 공공부문이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데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에게도 반대 이유를 추가로 조사함.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5.3%로 61명이었으며 ‘공공부문이 추진할 역량이 부족해서’, ‘기존의 공공부문 중심 운동이 비효과적이어서’, ‘공공부문이 주도하면 자율적 안전문화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27.1%(16명)로 동일하게 나타남

○ 이에 어떠한 특정 원인보다는 공공부문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이 그동안 자율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안전의식 확산에 효과적이었다고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두 번째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안전 캠페인·홍보 활동,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운동의 주요 활동별 참여 의사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 안전문화운동 참여 유형에는 안전홍보 및 캠페인, 안전교육, 직장·학교 내 안전문화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안전문화운동 단체 후원 등으로 구분됨.

[그림 4-43] 안전문화운동 유형별 참여 의사



- 안전문화운동의 유형별 시민 참여 의사를 분석한 결과, 세부 항목 5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3점대의 평균 점수가 도출됨.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민들의 안전문화운동 참여 의사는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안전교육 이수와 직장/학교의 안전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 3.70점, 3.69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안전문화운동 단체에 후원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안전문화운동 유형별 참여 의사 여부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인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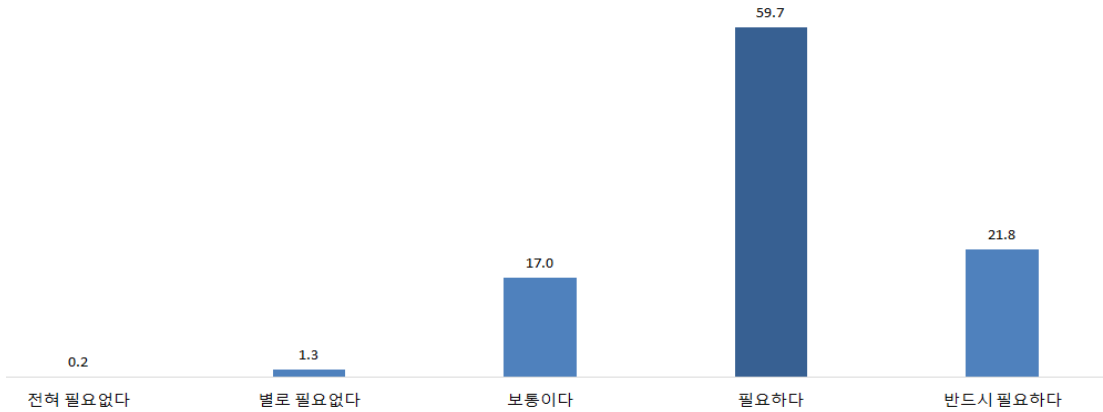
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함. 조사 결과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금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현재의 안전문화운동이 비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2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직장/학교 차원에서 연계하여 실시되는 안전문화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3)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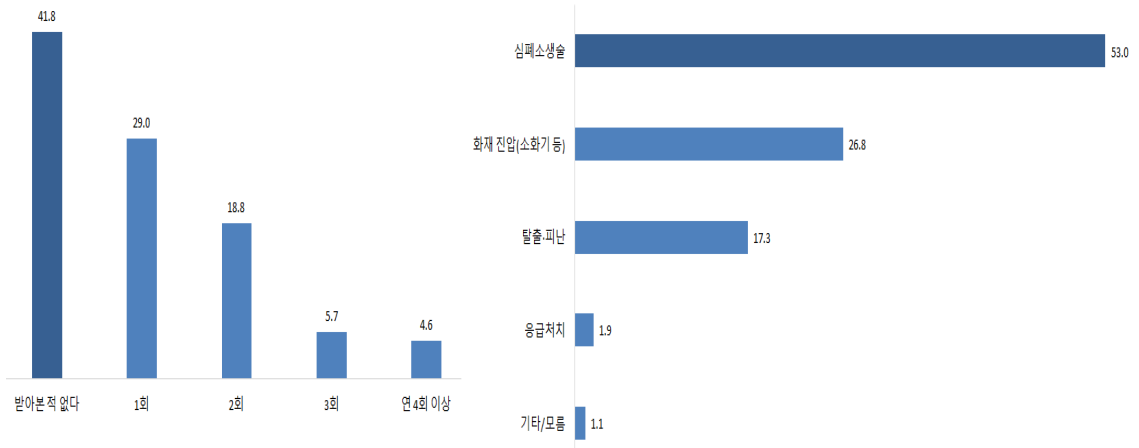
- 앞선 조사 결과에서 일반시민들이 안전문화운동에 상대적으로 가장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안전교육이 선정된 것과 같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을 조사함.
- 안전예방 차원에서 안전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비중을 차지한 것은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전체 응답자의 59.7%를 차지함.
- 또한 안전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인원(필요하다 + 반드시 필요하다)의 비중은 81.5%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반면, 안전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원(필요없다 + 전혀 필요없다)의 비중은 1.5%로 나타남.

[그림 4-44] 안전교육 훈련 필요성 인식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고양시민들이 안전교육이나 훈련에 대해 긍정적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고양시 차원에서 안전교육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4-45] 안전교육 이수 경험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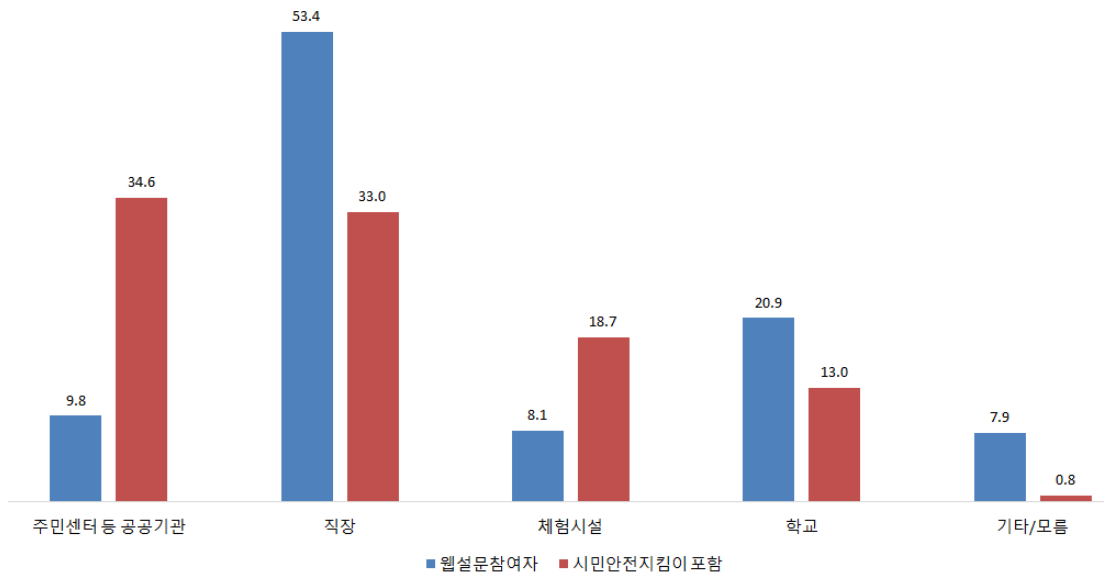


□ 1년 이내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8%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이러한 결과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인원이 포함된 2차 결

과에서 웹설문조사에 참여한 800명만을 대상으로 별도 분석하면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53.9%)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응답한 인원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심폐소생술이 53.0%로 가장 많이 이수한 교육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화재예방, 탈출·피난법, 응급처치 등에 대한 내용은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그 내용을 이수한 인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남.

[그림 4-46] 안전교육 이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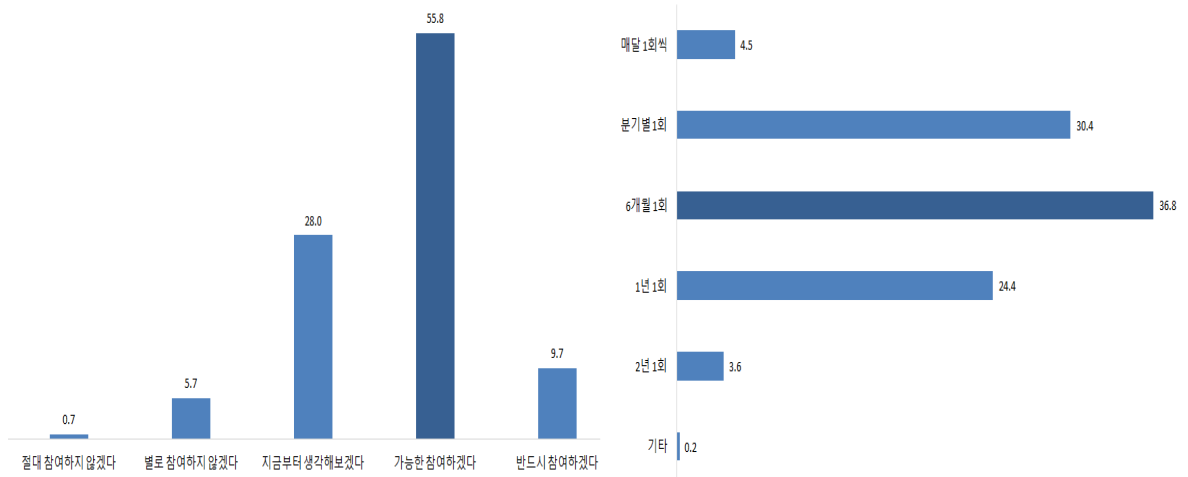


-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668명)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6%가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민안전지킴이가 포함된 2차 조사 결과와 웹설문조사 기반의 1차 조사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면 응답자들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시민안전지킴이 응답자가 다수 포함된 전체 결과에서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장(33.0%), 체험시설(18.7%), 학교(13.0%)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일반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369명 가운데 직장에서 이수하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교(20.9%),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9.8%), 체험시설(8.1%)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각 동센터를 기점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수행하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특성상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교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고양시민들의 경우 직장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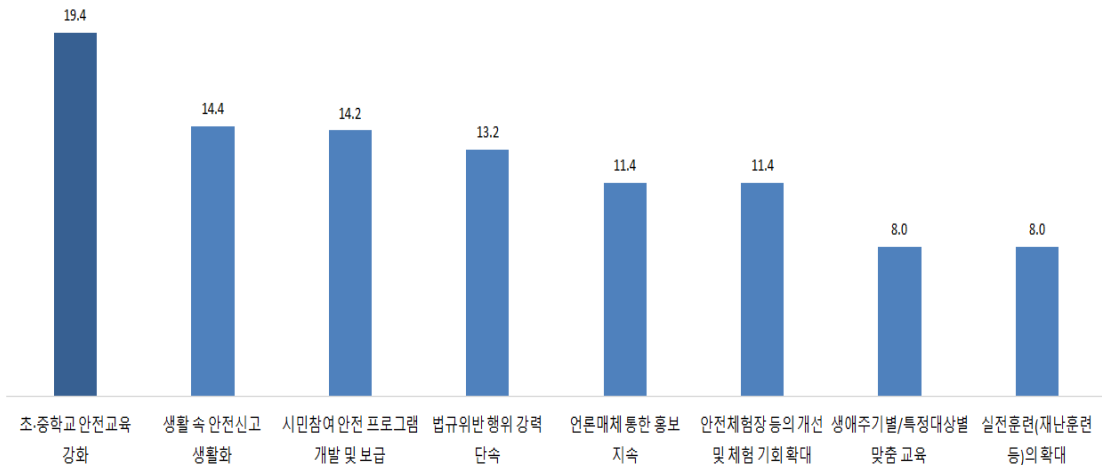
[그림 4-47] 안전교육 참여 의사 및 적정 횟수에 대한 의견



- 두 번째로, 향후 안전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를 조사한 결과 ‘가능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은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인원 등 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은 65.5%로 나타남.

- 향후 교육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가능한 참여하겠다 + 반드시 참여하겠다) 응답자 비중이 65.5%인 데 반하여 부정적인(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 별로 참여하지 않겠다) 응답자의 비중은 6.4%에 불과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안전교육 참여에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반기별(6개월 1회)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36.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분기별 1회(30.4%)> 1년 1회(24.4%)> 매달 1회(4.5%)> 2년 1회(3.6%) 순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고양시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요구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관련 문항을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분석함.

[그림 4-48]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 분석 결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초·중학교의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9.4%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일상 속 신고의 생활화, 시민참여 안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응

답한 인원의 비중이 각각 14.4%, 14.2%를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일반 시민들은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으로서 저학년 연령 시기부터 안전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활성화 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표 4-25]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효과적 교육방법에 관한 인식- 거주지별 응답 비교

거주지	초/중학교 안전교육 강화	생애주기 특정 대상 맞춤형 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체험 기회 확대	언론매체 활용 홍보 지속	안전 신고 생활화	법규위반 행위 강력단속	실전훈련 확대
덕양구	18.2	8.3	14.8	12.1	11.4	14.5	12.7	7.9
일산동구	19.4	8.2	13.9	10.1	10.7	15.5	14.3	8.2
일산서구	21.2	7.5	13.6	11.5	12.2	13.4	12.8	7.8

-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효과적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을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 덕양구, 일산동구 및 서구 3곳에서 모두 초/중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덕양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초/중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18.2%로 가장 높았으며, 생애주기/특정 대상 맞춤형 교육(8.3%), 시민안전체험교육 기회 확대(12.1%),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4.8%)에 대해서는 타 거주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산동구 거주 응답자 역시 초/중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가 1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었으며, 일상 속 안전신고 생활화(15.5%), 법규 위반 행위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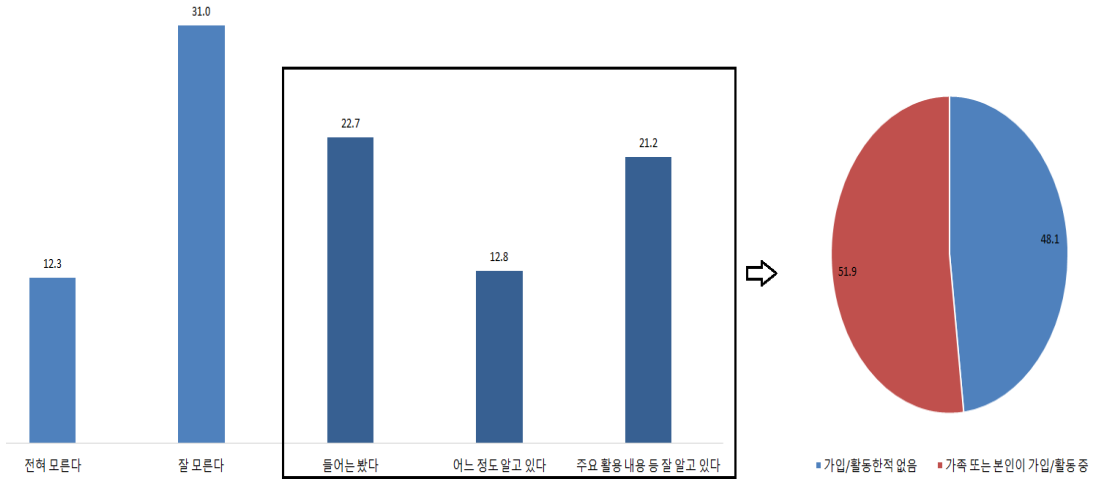
한 강력한 단속(14.3%), 실전훈련 확대(8.2%)의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타 거주지에 비해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산서구는 초/중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1.2%로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지속적 홍보(12.2%) 항목에서 타 거주지에 비해 높은 응답 비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분석 결과, 고양시 지역에 따라 효과적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학교 등 아동·청소년 대상의 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고양시 내 지역구에 맞는 안전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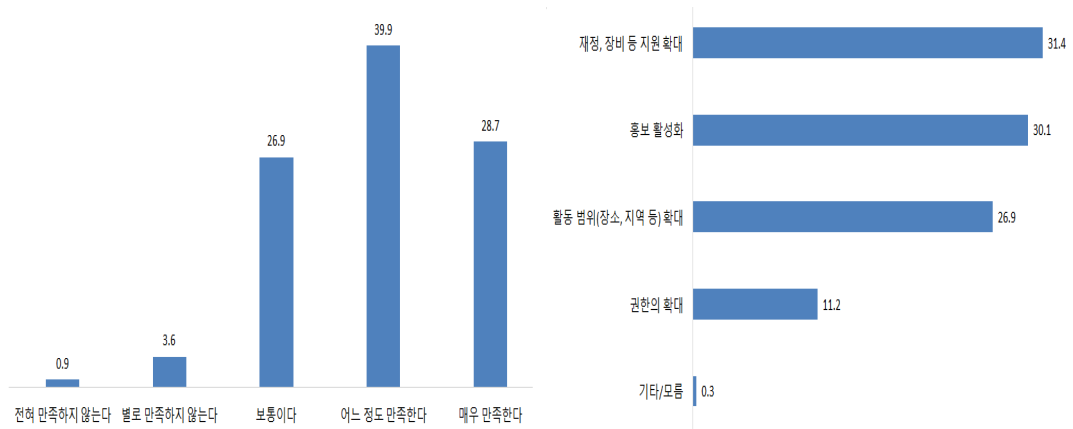
-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단체로서 고양시 내에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운영·지원 중인 시민안전지킴이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해 시민안전지킴이의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중은 21.2%였으며 시민안전지킴이에 활동 중인 응답자를 제외한 800명의 웹설문 참여자들에 대한 결과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중은 0.6%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민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들어는 봤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주요 활동 내용 등을 잘 알고 있다) 인원 6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시민안전지킴이 일원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입/활동한 적 없다는 응답자는 48.1%(322명)를 차지하였으며 51.9%(347명)는 가족 또는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9] 시민안전지킴이 인지도 및 활동 여부



-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해볼 때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는 시민안전지킴이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는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한편, 시민안전지킴이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331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현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6%가 만족한다(어느 정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인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향후 시민안전지킴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재정·장비 등의 자원 지원 확대와 홍보 활성화 방안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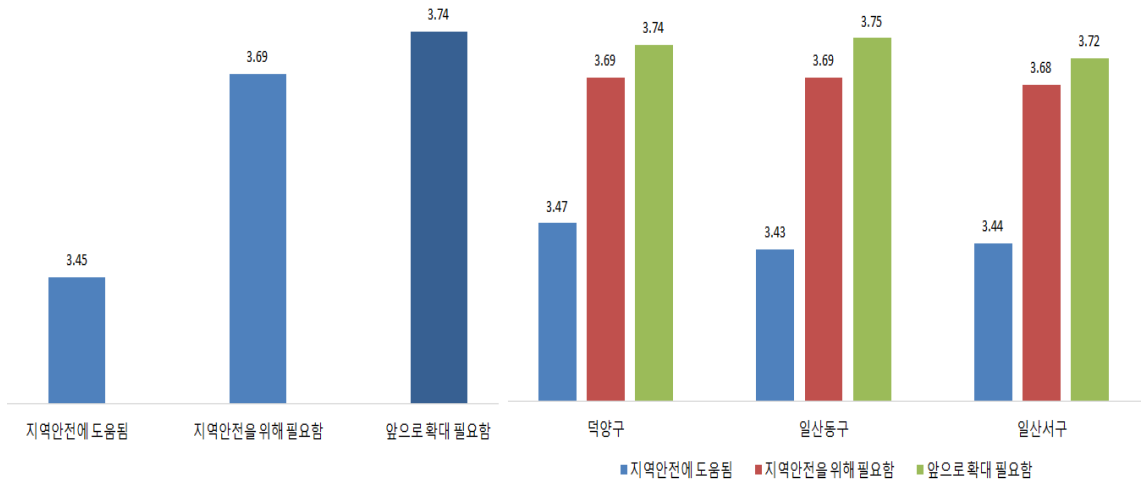
[그림 4-50] 시민안전지킴이 만족도 및 개선 방안



- 자원·장비 등 물적·재정적 자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31.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 지원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또한 그 다음 순으로 홍보 활성화 필요성이 30.1%를 차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의 내용을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 또한 강조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안전지킴이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함.
 - 구체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②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지역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③ 시민안전지킴이가 앞으로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하위 질문인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3점대의 평균 점수가 도출됨. 이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고양시민의 필요성 인식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인식 또한 존재하지만 향후 인식 개선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앞서 제시한 3가지 하위 항목 중에서는 향후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추가·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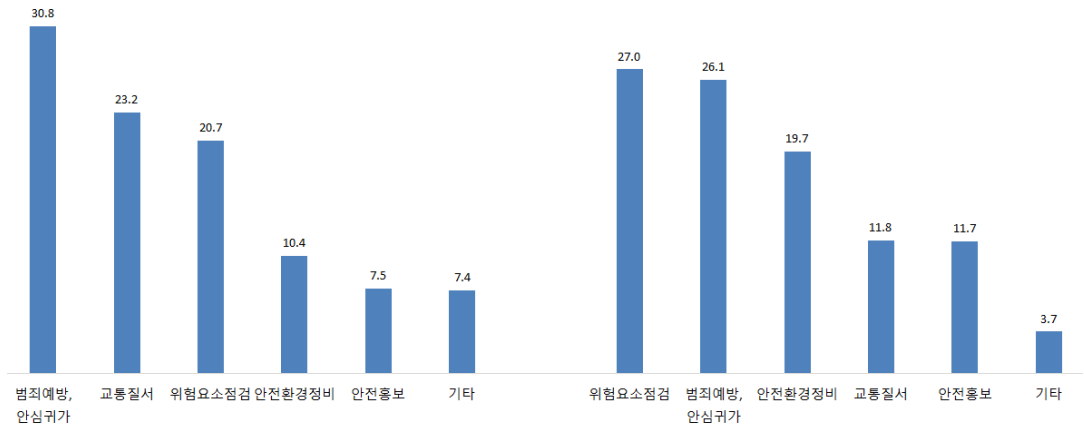
[그림 4-51] 시민안전지킴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그 다음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3.69점),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된다(3.45점)는 응답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각 지역구 간의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구에서 모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의 추가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도출됨(덕양구: 3.74점, 일산동구: 3.75점, 일산서구: 3.72점).
- 이러한 결과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인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향후 보다 더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함.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진단 및 전망에 대해 조사함.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킴이 활동 분야는 무엇이며, 앞으로 가장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분야는 현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위험요소 점검, 범죄예방 및 안심귀가, 교통질서 유지, 안전홍보, 안전환경 정비, 기타 등으로 구성함.

[그림 4-52]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분야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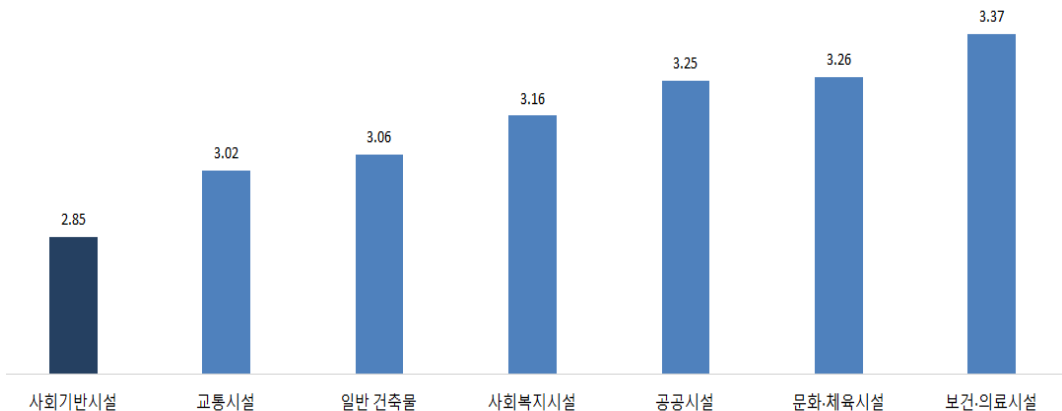
- 분석 결과, [그림4-52]의 좌측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분야는 범죄예방 및 안심귀가 활동(30.8%), 교통질서 유지(23.2%), 위험요소 점검 활동(20.7%), 안전환경 정비(10.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비교하여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부문에는 [그림4-52]의 우측 그래프 결과와 같이 위험요소 점검 활동이 27.0%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됨. 또한 범죄예방 및 안심귀가(26.1%), 안전환경 정비(19.7%), 교통질서 유지(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고양시민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위험요소 점검 활동이나 안전환경 정비 활동에 대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범죄예방 및 안심귀가 활동 등 치안 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5) 안전 인프라에 대한 인식

① 생활 주변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 본 연구는 안전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활 주변 건축물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도 인식에 대해 조사함.
- 이러한 인프라 항목에는 크게 일반 건축물(아파트, 빌딩 등), 교통시설(도로,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광장, 공원 등), 문화체육시설(공연장, 체육관 등),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 복지관 등), 사회기반시설(가스공급시설 등)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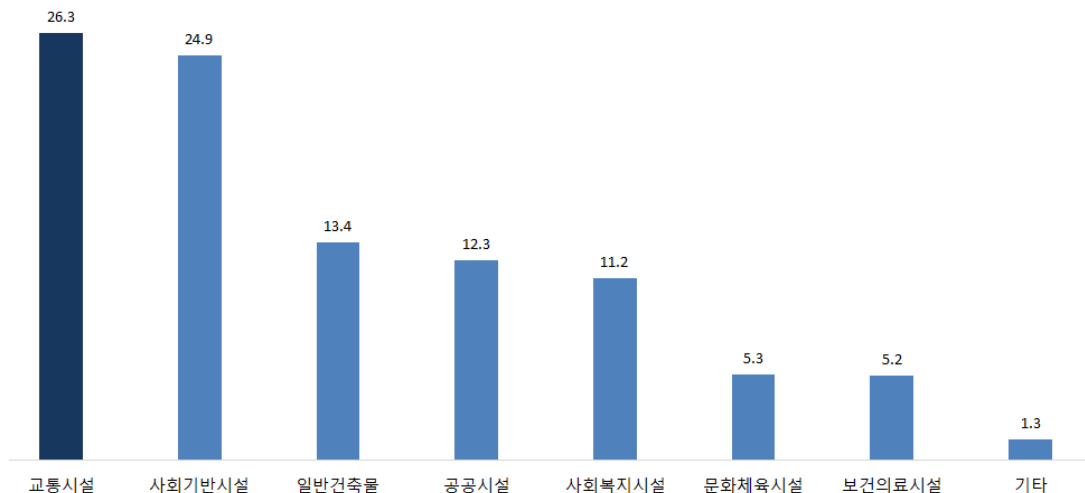
[그림 4-53] 사회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도 인식



- 공공시설과 주택, 아파트 등의 일반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생활 주변 건축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도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양시민들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도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4-53]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가스공급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도에 대하여 고양시민들은 5점 만점에 2.85점으로 평가하여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그 파급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인한 통신망 마비, 고양시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의 사례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려 다음으로는 교통시설(3.02점), 주택 등의 일반 건축물(3.06점), 사회복지시설(3.16점) 등의 순으로 안전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공간적 환경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시설점검 및 관리 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두 번째로, 본 연구는 건축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시설 가운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 안전 인프라 가운데 우선 투자 시설에 대한 의견 또한 앞선 시설별 안전도 인식 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시설별 안전도 인식에서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설, 일반 건축물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시설 또한 교통시설(26.3%), 사회기반시설(24.9%), 일반건축물(13.4%)의 순으로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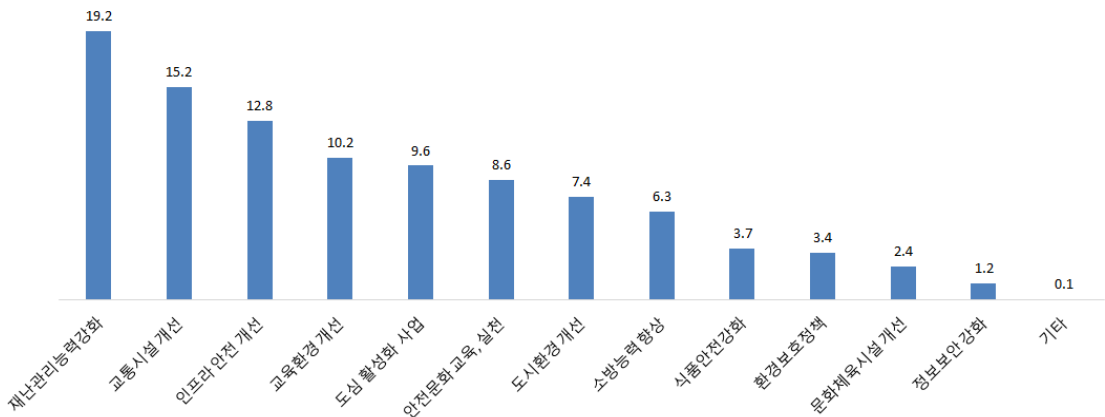
[그림 4-54]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우선 투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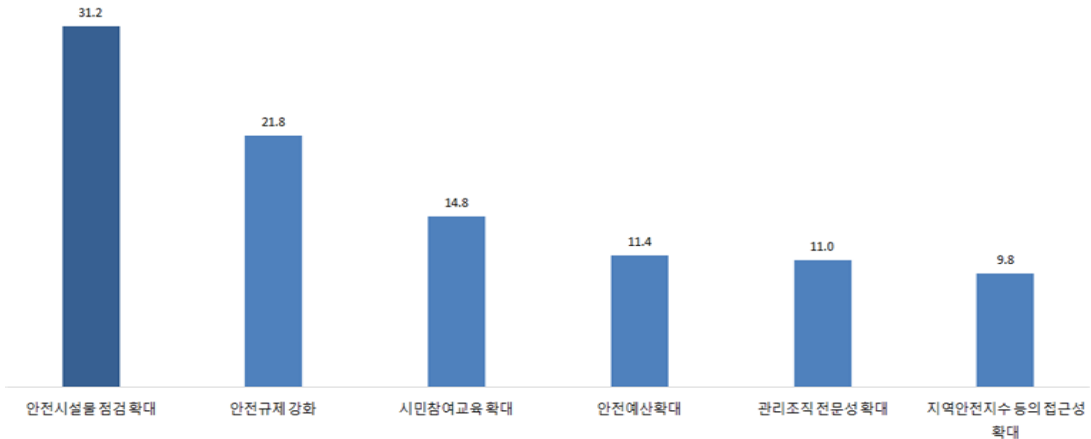
② 안전 정책에 대한 종합 의견

- 안전 정책 제고를 위한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 교통시설 개선, 안전문화교육, 재난관리 능력 강화 등 안전관리 역량과 관련된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
- 분석 결과, 시민들은 안전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분야로 재난 안전사고 및 재해 대응·대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관리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관리 능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원의 비율은 19.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교통시설 개선(15.2%), 인프라 안전 개선(12.8%), 교육환경 개선(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고양시민들은 고양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안전 인프라에 대한 관리·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그림 4-55] 안전 정책 이슈에 대한 우선 투자 순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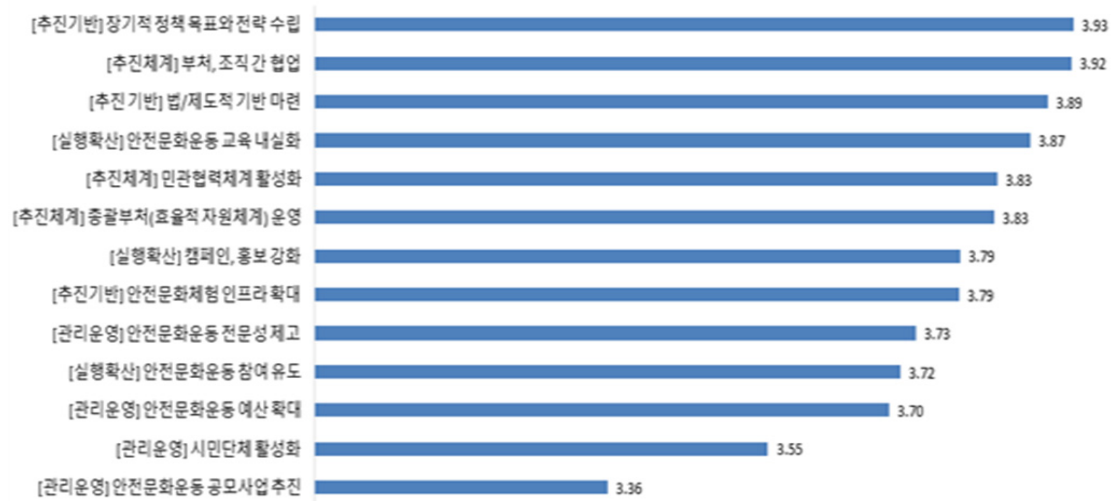
[그림 5-56] 가장 시급한 안전 이슈에 대한 의견



- 향후 안전 정책의 제고를 위해서 재난관리능력 강화와 함께 교통시설 및 안전인프라 개선이 강조된 것과 같이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전 이슈 조사에서도 안전 시설물 점검 확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도출됨.
 -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안전 시설물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의 비중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 등 안전 규제 강화(21.8%),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의 강화(14.8%) 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양시민들은 제도적 측면에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측면에서 안전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전 시설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법제도 등의 추진 기반 측면, 관리 조직 등 추진체계 측면, 시민단체 및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지원 등 관리운영 측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등 실행 확산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먼저, 추진 기반과 관련된 항목에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장기적 정책목표 및 전략 수립, 안전문화체험 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됨.

- 둘째,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총괄부처(효율적 자원체계)의 운영, 부처/조직 간 협업,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등이 포함됨.
- 셋째,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예산 확대, 안전문화운동 전문성 제고, 시민단체 활성화, 안전문화운동 공모사업 등을 조사함.
- 마지막으로 실행·확산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문화운동의 참여 유도, 캠페인 및 홍보 강화, 안전문화운동 교육의 내실화 등을 조사함.
- 추진 기반, 추진체계, 관리운영, 실행 확산 등 각 단계별 중요도 인식에 대해 평균 비교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추진기반(3.87점), 추진체계(3.86점), 실행확산(3.79점), 관리운영(3.59점) 순으로 그 중요도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각 단계별 세부 항목들을 대상으로 평균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고양시민들은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진 기반 단계 중 ‘장기적 정책 목표, 전략 수립’, 추진체계 단계 중 ‘부처, 조직 간 협업’ 과제가 각각 3.93점, 3.92점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됨.
 - 이러한 결과는 사회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안전 이슈의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부처들 간의 협업이 활성화될 필요성을 고양시민들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그리고 안전정책의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관점에서 지역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그림 4-57]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별 중요도 인식



○ [그림4-57]과 같이 세부 과제별 평균 결과를 비교하면 고양시민들은 안전문화운동 예산 확대와 시민단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등 관리운영과 관련된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정책 및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진기반 및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고양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전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내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전 관련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원활한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관협력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 또한 강조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또한 안전 관련 정책과 안전문화운동의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홍보, 캠페인 등 안전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 또한 제안할 수 있음.
- 종합하면 안전정책 및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기반 마련과 안전 교육, 안전점검, 안전홍보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됨.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실태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 제언

제절 실태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고양시민들의 안전의식 및 위험요인별 안전도 인식,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등 안전의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됨.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 본 연구는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안전의식 실태조사를 수행함.
 - 실태조사를 위해 웹 기반의 패널 조사와 39개 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설문지 배포 방식을 병행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의식, ② 위험요인별 안전도 인식, ③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 ④ 안전 인프라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됨.
 -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는 웹 기반 설문에 참여한 800명의 고양시민 패널, 시민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 361명 등을 포함하여 최종 1,161명의 고양시민이 참여함.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로, 안전의식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는 3.0 내외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별로 개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에 대해서 일산서구(3.10) > 덕양구(3.05) > 일산동구(3.03)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전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약 3.33점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안전의식 개선의 한계 요인으로는 관리·감독 및 점검 미흡, 안전불감증, 관리자층의 무관심(리더십) 등의 순으로 지적됨.
 - 안전불감증의 원인으로는 무관심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됨.
 - 안전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비교해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은 약 32%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유사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응 요령 숙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숙지 경험자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재난안전 대피시설에 대한 숙지 여부는 50% 이상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밖에 재난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는 4점 만점 기준 2점대로 '보통'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로, 위험요인별 안전도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교통안전, 치안범죄, 신종위험 등 각 유형별 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도 인식을 조사함. 분석 결과, 전체 응답을 종합하였을 때 고양시민들은 미세먼지(61.8%), 이륜차 사고(44.6%), 싱크홀(43.4%), 환경오염(38.4%), 자동차 사고(37.0%), 보행자 사고(35.1%), 노후건물 안전(32.5%) 순으로 해당 요인에 대해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각 지역별로 위험도 요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면 교통안전 > 사회재난, 신종위험 > 치안, 범죄 > 자연재난의 순으로 나타남.
 - 위험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싱크홀, 노후건물안전 등에 대한 불안은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덕양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우려는 일산동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위험도 요인에 대한 인식 비교 결과 재난안전사고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위험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남.
 - 남성과 여성 간의 위험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치안범죄 영역으로, 이후 사회재난과 교통안전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재난 부문에 대해서는

성별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안전문화 및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안전문화운동 유형별 참가 의사 측면에서는 학교/직장 프로그램 등을 통한 참여, 안전교육 이수 등의 형태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에 대한 평균이 각각 5점 만점 기준 3.69점, 3.7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안전 관련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인원의 비중 또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인원의 비중(6.4%)과 비교해 65.5%로 나타나 안전교육 참여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장 이상적인 교육 횟수로는 6개월 1회 방식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분기별 1회 교육방식 또한 30.4%를 차지함.
 -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약 3.69점, 앞으로 활동이 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3.74점으로 나타남. 또한 부정적 응답자의 비중보다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활성화 필요성에 고양시민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양시민들이 시설안전에서 구체적으로 불안해하는 유형은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설, 일반건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해서 안전점검과 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관리 주체의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강조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 기반으로서 장기적 정책 목표와 전략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부처, 조직 간 협업 필요성이 중요하게 강조됨.

제2절 정책 제언

1. 안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른 재난 유형별 대응 방안

- 고양시민들은 환경(미세먼지, 환경오염), 인적 재난(싱크홀), 교통안전(이륜차, 자동차, 보행자, 대중교통 사고), 사회재난(노후건물 안전, 시설안전, 화재), 신종위험(정보 보호,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해 불안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전염병·감염병, 환경오염 등 신종위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정도 또한 높게 나타남.
- 성폭력, 강력범죄, 사이버 피해(정보 보안) 등의 범죄위험군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통제가능성이 낮고 시민들이 두렵게 느낄 수 있는 위험들로 평가할 수 있음. 치안은 시민들의 불안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됨.
- 교통안전사고·화재·시설안전사고·산업재해 등은 모두 사회재난으로서 하나의 군을 형성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사회재난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안전, 신종전염병 등은 신종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한 자연재해 위험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남.

1) 화재 안전 대응 측면

-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요인들 가운데 화재안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시설 점검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정 내의 초동대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촉진 및 확충이 필요하며 화재에 대한 부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감지기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고양시의 경우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구 찾기 운동’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비상구 찾기 운동’은 안산시, 부천시 등에서 대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로 비상구 적정 여부 확인 및 지도, 비상구 설치 위치 및 개구부 크기 여부 지도, 비상구 상시 개폐 및 장애물 적치 여부 지도, 비상구 유도표지 및 표시등 적정 여부 등, 안내문 및 스티커 등에 의한 홍보, 영업장 내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비상구 안내도 부착·홍보, 지하철 등에 「비상구 찾기운동」 홍보안내 자막방송 추진,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내 자막방송 협조, 『비상구 찾기 운동』 신고센터 운영, 시민단체 및 관련 부서와의 연계 홍보 활동 전개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음(채진, 2018: 54).
 - 그리고 이러한 비상구 찾기 운동에 고려될 수 있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유흥업소, 24시간 영업장(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게임방 등), 공연장(멀티플렉스 및 소극장, 소공연장 등), 기타 다수가 모이는 입시학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채진, 2018: 55).
- 두 번째로 고양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화재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화재안전문

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크게 ‘방재관 및 소방박물관을 통한 홍보’, ‘유소년 소방클럽 등 방재조직을 통한 홍보’, ‘미니소방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유소년 소방클럽은 재난 약자인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화재의 무서움’을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 화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이며 이 중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양시의 경우에도 화재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유아 등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터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풍토조성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

2) 환경 및 미세먼지 이슈 대응 측면

- 위험요인별 안전 인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양시 일반시민들은 환경 오염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환경 이슈와 미세먼지 등 최근 사회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강조됨.
 - 미세먼지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난 3월 미세먼지 특별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강조한 바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 또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발표함.
 -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발표와 함께 시민들이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 또한 홈페이지 별도 운영이나 관련 정보들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7\mu\text{g}/\text{m}^3$

- 에서 오는 2022년까지 $18\mu\text{g}/\text{m}^3$ 까지 33% 저감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설정함.
- 또한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부권에 해당하는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등 6개시가 미세먼지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6개 도시에서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평택항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조기 설치, 충남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해결 공동대응,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지역별 사업 특성화, 미세먼지 전담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³⁴⁾.
 - 고양시 또한 미세먼지 이슈가 지자체 수준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 등의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림 5-1]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의 예



출처: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³⁵⁾

34) “미세먼지 OUT! 경기도-남부권역 6개 지자체,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식 체결”, 경기도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yeonggi_gov/221639852383) 접속일 2019.09.15.

- 또한 수원시의 경우 어린이집 영아,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환경미화원, 법인택시 운전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실외 근무자에 미세먼지 마스크 34만 9,140매를 보급하고 ‘대기 질 알리미 서비스’ 와 같이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대기 질 알리미 서비스는 천천동·신평동·인계동·광교동·고색동·영통동 등 수원시 내 6개 지점의 (초)미세먼지·오존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를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초기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수원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실내 미세먼지 관리법에 대한 전문 강사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리고 ‘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대책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8\mu\text{g}/\text{m}^3$ 이하’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수원시의 토지, 인구, 주거형태, 산업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고 내·외부 발생원인을 반영한 대기 질 모델 개발, 영유아·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도가 높은 시설 분석을 통해 계층별 맞춤형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고양시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대응방안 및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개발, 종합대책 수립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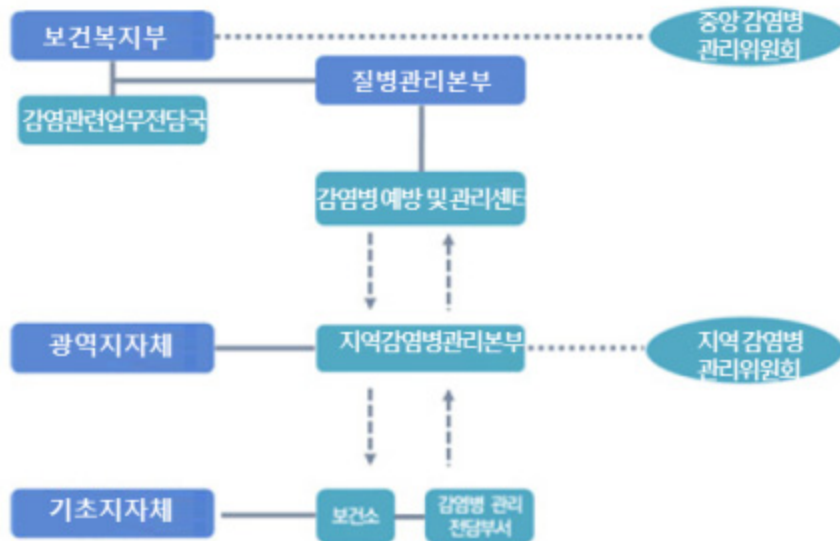
35)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https://bluesky.seoul.go.kr/>) 접속일 2019.09.15.

3) 싱크홀 및 감염병 등 신종위험 대응 측면

-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분석 결과,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노후한 하수관 손상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관로공사 등이 31%, 상수관 손상이 3% 순으로 나타남.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민들의 경우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와 같은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도 싱크홀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점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지반침하 예방대책 마련 및 지반탐사반 운영, 포장관리시스템(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의 보급 및 확산 등을 통해 싱크홀 이슈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상·하수도관 등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지하매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형 공동관리등급’을 개발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는 싱크홀 등 각종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35명으로 구성된 ‘싱크홀 24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음.
- 대전시는 2018년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과 ‘지반탐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대구시는 지반침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1,000mm 이상의 대(大)구경 하수관로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등 약 188km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싱크홀 및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경우 앞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운영권한 및 관리 주체 측면에서 국토교통부를 주관으로 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 하에 고양시 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지반침하 예방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전담 인력의 배치,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내실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이 고양시민들은 신종 전염병 및 감염병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관리 또한 관리주체 및 권한 측면에서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광역지자체(경기도)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 분권에 따른 기초 지자체 수준의 관리 대응 역량 강화 및 초동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해 향후에는 다음과 같이 감염병 관리 권한에 대한 이양 및 배분 방안을 검토하는 것 또한 고려될 수 있음.

[그림 5-2] 감염병 관리 체계의 개선 방안



출처: 김남순 외, 「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95.

- 또한 고양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상시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 훈련 등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훈련 등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 고양시 차원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 교통안전사고 대응 측면

- 고양시는 기초 지자체 가운데 2017년 교통안전지수를 최하위로 기록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타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주행자 사고, 이륜차 사고, 보행자 사고 등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고양시 또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현재 교통안전분야 SOC 자체 확대 추진 중에 있음. 구체적으로는 자유로 나들목, 통일로IC 하부 교차로 등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주요 도로의 교차로와 나들목을 대상으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선 유도시설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음³⁶⁾.
- 이러한 안전시설 및 인프라 차원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안전 제고 노력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 확대 실시 등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방안 또한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양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교통사고 유형으로 제기된 이륜차 사고 관련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경기 성남시, 충북 공주시의 사례와 같이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형성을 위한 교재 개발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전주시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매뉴얼을 개발한 사례가 있으며 경기 양주시는 지역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보행안전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마을 만들기 시민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됨.

³⁶⁾ “고양시, 혼잡구간 교차로·나들목 안전시설 설치”, KFM경기방송 뉴스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37320&cat=33> 접속일 2019.09.15).

- 고양시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교통안전계획의 체계화를 통한 계획의 연계성 확보, 교통안전 관련 사업 평가제도 강화 등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또한 교통안전 전담 조직의 운영 및 교통안전 전문가의 확보 노력, 경찰서 등 교통사고자료 공유 및 효율적인 교통정보 자료 구축 등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교통안전 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 교통안전 체험 실습 및 교육프로그램의 신설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교통안전 제고 및 운전자 의식 제고 등을 위해서는 체험 실습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 안전운전연수센터를 운영하여 안전운전 실습과 사고 사례의 시연, 시뮬레이션을 통합 연습 등 안전운전기능과 운전자 교육과정에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어린이의 연령 및 발달 상황에 맞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5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55+ 프로그램이라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국토부의 경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생 및 고령자,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령에 맞추어 보드게임, VR을 활용한 안전교육 체험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하여 고양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별 교통안전교육을 개발·실시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양시 또한 앞서 논의한 사례들을 활용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신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 교육의 다각화, 내실화를 추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5) 치안 이슈 대응 측면

- 고양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에 해당하는 만큼 소방서를 비롯하여 경찰 조직 또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 조직과 연계한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민들의 경우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 치안 문제와 사회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사회 치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됨.
- 시 차원에서 치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CCTV 보급 확대 및 활용의 고도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고양시는 방범, 주정차단속, 문화재관리 CCTV 등 1,751개소 6,283대 CCTV를 통합 관제 운영 중에 있음(2019년 1월 기준).
 - 상당량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고도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CCTV의 활용 용도는 주로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사후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CCTV의 확대 설치를 통해 우범 지역 및 범죄 발생 위험 지역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CCTV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 대전시의 경우 2018년에 관내 사고 및 화재 감시를 위해 학교·골목길·상업 밀집지역 등 80여 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대전시, 2018)³⁷⁾. 또한 화성시는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공모 사업’을 통해 약 7,000대의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치안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비교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대상 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37) “시민안전 지키는 스마트CCTV 사업 선정”, 대전시 보도자료(2018.06.19.)

- 고양시는 현재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 택배, 여성 안심 화장실 등의 지원 정책을 운영 중에 있음.
-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그림 5-3]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예



출처: 충남공공디자인센터³⁸⁾

2.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회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안전홍보 등의 측면에서 정책적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즉,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나 안전에 대한 가치관, 의식, 습관 등

³⁸⁾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선진사례 -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http://www.cpdcr.kr/html/design/design_case.php?mode=v&bbs_data=aWR4PTU5OCZQYWdlTnVtYmVvPTQmbGlzdE5vPTY5JnRhYmxiPWlkX2Jic19kYXRhJmNvZGU9ZGVzaWduX2Nhc2U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c2VhcmNoX2NhdG9nb3J5PQ==11) 접속일 2019.09.15.

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며, 우수한 콘텐츠를 학교 및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미디어 등에 홍보하는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문화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됨(류영아·김대옥, 2014).

1) 안전교육 측면

- 안전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 교육의 대상,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 및 전담 강사의 선정, 전담 인력 및 조직 등의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예로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체험해 봄으로써 안전 요령을 체득하고 안전 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습 중심,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 필요성이 강조됨. 그 밖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방식의 도입, 사회재난·복합 재난 등에 대한 교육 보강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옥, 2014: 121).
- 또한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녀 차이에 따른 위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성별에 따른 차별성 있는 교육 전략이 요구됨.
- 이와 동시에 연령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므로 연령대별로 차별화하여 세대별 다른 형식의 교육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안전교육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운영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옥, 2014: 118-119).
- 유아·어린이, 초등학교 대상 안전교육
 - 119 신고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초등학교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

록 유도하고 위급 상황 발생시 119 안전신고센터 등 구조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을 통해 숙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학 중의 교통사고, 놀이시설 사고, 미아 사고, 불량식품 및 식중독 등 유아, 어린이들의 주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안전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안전 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함.
- 이러한 교육 내용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등) 대상 안전교육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구되는 대처 요령 외에 통학 중 교통사고, 가정 내 안전사고, 체육시설 등의 이용 중 사고, 화재 대피·대응 요령 등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제공함.
- 그 밖에도 인명 존중의 정신교육 등이 교육 콘텐츠로서 고려될 수 있음(류영아, 김대옥, 2014: 118).

○ 성인. 일반인 대상 안전교육

[표 5-1] 성인(일반인)용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예

영역	프로그램 내용(예시)
영역별 안전 개요	교통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영역별 안전 전반에 대한 개요
생활안전	승강기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범죄안전	학교폭력, 성폭력 등
교통안전	대중교통(철도, 지하철, 버스 등) 안전, 자동차(운전자)안전, 보행자 안전 등
자연재해	지진, 눈사태, 홍수, 태풍, 산사태 등
산업안전	건축물, 유해물질관리 등
식품안전	농수축산물, 학교식중독사고, 전염병, 의약품 등
교육시설	보육시설, 학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등
기반시설안전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시설 등
여가생활	행사장 등 공연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등

자료: 류영아 김대옥,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p.119.

- 안전문화의 필요성과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안전 습관, 안전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제공함.
 - 자연재해, 화재, 시설붕괴 등의 긴급 상황시의 대처 요령, 유사시 대피 요령, 신고 및 구조 방법, 응급처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
 - 성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예는 [표5-1]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욱, 2014: 119).
- 연령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취약계층 안전교육, 근로자용 안전교육, 시기별 안전교육 등 교육 내용의 다양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가상 훈련 실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대피훈련의 정례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욱, 2014: 120).
 - 또한 근로자용 안전교육의 예로 건축, 토목 등 산업안전 교육이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교육 강화 방안,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위기 대피훈련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이러한 훈련의 예로는 심폐소생술 훈련, 대피훈련 등이 포함됨.
 - 그리고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예로, 하계나 동계 등 시기에 따라 차별적이고 보다 더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음.
- 또한 안전교육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강의 중심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는 방식의 교육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
- 최근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몸으로 직접 체득하는 체험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에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로 내년부터 이동안전체험버스를 운영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고양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특화된 안전교육시설을 구축하여 제공할 경우, 안전교육효과를 높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조인식·배재현, 2016).

- 이러한 측면에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이동안전교육 체험버스나 안전교육체험센터는 교통, 소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안전체험시설에서 생애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습위주의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윤영배, 2017).
-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등 성인이 되기 전 안전의식을 내재화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진적인 안전의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5-4] 안전체험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예(경기 평택시)



출처: 행정안전부,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 평택시 송신초편, 2017, p.15.

- 이러한 예로 경기 평택시의 경우 안전체험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도구 보급, 실천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위기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한 것으로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수상하는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음.
- 안전교육의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내용 뿐만 아니라 안전 전문가 육성 및 활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필요성 또한 강조됨.
 - 특정 연령대나 안전에 취약한 특정 계층, 특정 시설이나 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문화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지닌 전문가의 양성 및 확보 필요성이 강조됨.
 -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인 동시에 고양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지킴이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별도의 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안전홍보 측면

- 안전문화 홍보 측면에서는 홍보 수단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 내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예로 대중매체를 비롯해, 안전문화에 대한 언론 홍보, 안전문화 캠페인, 온라인 마케팅 및 바이럴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방식, 안전 문화 포털사이트의 구축을 통한 홍보 등을 고려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욱, 2014).
- 안전문화 홍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먼저, 대중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운동의 광범위한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 지역신문, 지역 케이블 TV, 지역 소식지, 지역 인터넷 신문 등 시민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지역 단위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공익 차원에서 안

전문화를 다루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옥, 2014: 123). 이 밖에도 TV, 일간지, 온라인 뉴스사이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이벤트와 프로모션 형식의 행사 개최, 공모전, 체험단/기자단/학생 참여단 등을 통한 캠페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공모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님. 또한 시민들의 관심 유발, 정보력 제고, 시민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온라인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는 인터넷 검색, 배너 광고, 키워드 광고, 유튜브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옥, 2014: 124). 또한 최근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드 뉴스는 안전문화 캠페인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안전문화 동영상 캠페인 등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네 번째로, 바이럴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는 포털사이트의 오픈/테마 캐스트, SNS 등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포함됨(류영아·김대옥, 2014: 124). 일반 시민들의 관심유도 및 안전문화 관련 사이트로의 유도 기능,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오픈캐스트는 방문자가 안전문화에 대한 정보를 구독하겠다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안전문화 정보가 구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님(류영아·김대옥, 2014: 124-125).
- 다섯 번째로, 안전문화 관련 웹사이트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현재 고양시는 고양시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임.
 - 이러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문화 종합포털사이트’로서 기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례로 ‘원클릭’으로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 관련 종합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안전문화 관련 정보를 총망라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류영아·김대옥, 2014: 127).
- 이 밖에도 TV, 라디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문, SNS, 모바일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단체, 기업, 언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음(류영아·김대옥, 2014: 128).
- 특히, 안전 관련 앱 등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 고양시민들이 안전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있어서 앱을 통한 정보 습득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성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 관련 종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앱을 개발하고, 현재 고양시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난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앱 설치가 가능한 URL 주소를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안전문화의 날 등을 통한 홍보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재 매달 4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문화의 날과 같이 안전문화운동의 날 지정 및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충북도의 경우 충북대와 충북 지속가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1년에 1번씩 안전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음. 해당 기간에는 지역주민, 대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영화제, 안전 교육, 안전 관련 경진대회,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됨. 고양시 또한 안전문화운동을 안전 문화 축제와 접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3) 안전점검 및 훈련 측면

-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에 있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분야로는 재난 발생 직후의 구조 및 구급, 대피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구난구호 물자의 배분, 귀가 곤란자에 대한 지원 대책, 피난대피소 운영 등이 고려될 수 있음(라정일, 2016).
- 또한 평상시에는 재난을 예방, 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직장, 학교 등 비거주시설 내에서의 재난 대응 훈련, 방재재해지도 작성,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환기, 방재 목적의 자원 비축 및 비축 물자에 대한 안내 등이 재난 훈련 내용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음(라정일, 2016).
- 이러한 안전훈련 제고방안의 예로, 일본의 경우 인구 84만 명의 오사카 부 사카이 시(大阪府堺市)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재난대피훈련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물플레잉 대피훈련, 대피 목청왕 대회, 최신 기술의 지진체험을 할 수 있는 지진 방석, 방재탈출 게임 실시 등 훈련과 이벤트를 융합하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그림 5-5] 일본 사카이 시 어린이 대상 안전대피훈련 시행의 예



출처: 라정일 “지진 대응과 교육훈련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안전총남 이슈브리프』, 2016, 2: 10-14.

- 또한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생들의 방재교육 및 대피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 매일 아침 원내방송에 따라 원아들이 운동장에 모여

선생님의 도망가라는 소리에 맞추어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사례 등이 존재함 (라정일,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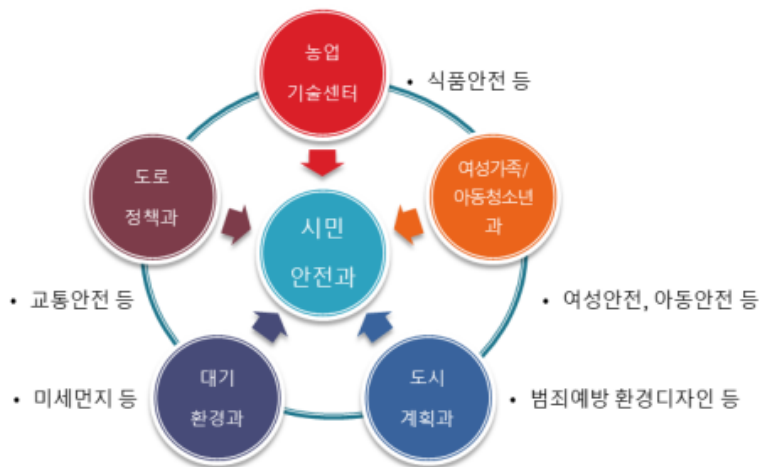
- 고양시 또한 안전훈련의 내용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일반시민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안전교육·훈련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음.

4)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측면

-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안전 훈련 및 점검 등의 확대와 내실화 노력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뒷받침 또한 중요하게 강조됨.
- 고양시 내에 안전과 관련된 조례는 「교통안전 조례(2012.11.9)」,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8.)」,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2016.12.23)」,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2015.01.09)」 등이 있음.
 - 따라서 고양시 안전문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고양시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가칭)」 제정 등의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안전문화운동 전담 인력 및 조직 지원(시민안전과 중심의 총괄업무 구체화)
 - 시민안전지킴이 등 관련 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 생애주기별 관점의 맞춤형 교육 제공,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등
 -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관련 조례 제정 방안 외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의회 위원들을 각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조례 마련 외에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측면에서 안전문화운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됨.
- 안전문화운동은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관련 행정부서와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연계·협력할 때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이형복, 2015).
-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각각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주체인 동시에 안전사고에 직면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조직들과 연대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이 제기됨(이형복, 2015).
 - 이러한 예로 구미시의 경우 LG디스플레이와 구미소방서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설치, 소방 교육 확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에 있어 안전문화운동의 시행 주체들 간의 협력과 협업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처 간 협업, 민관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주관부서의 역량 강화 및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

[그림 5-6] 안전 이슈별 대응 기관 및 관련 부처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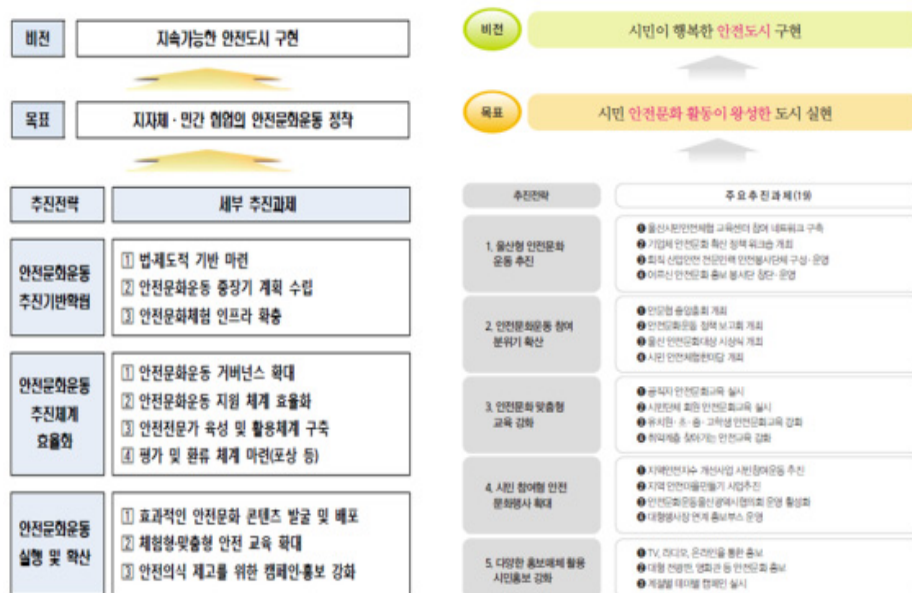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그림 5-6]과 같이 사회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 걸쳐 존재하며, 단일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관련된 부서나 기관이 상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하는 가운데, 시민안전과가 총괄 부서로서 기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즉, 관계 부서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시민안전과는 주무 부서로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집행, 관련 행사 및 교육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윤영배, 2017).
 -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과의 경우 1명의 인력이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서 논의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확충 등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강조됨.
- 또한 시민안전지킴이 등 안전문화운동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안전문화운동은 재정적·인적 자원 등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고,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활동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이형복, 2015).
 - 안전교육 측면에서도 안전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과 교육 장소, 교재, 교육시설 등 지원 기반이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함.
 - 따라서 안전문화운동협의회 및 각 동별 시민안전지킴이 조직의 구성 현황과 활동 내용,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계자들의 요구(needs)나 기대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강조됨(이형복, 2015).
 - 또한 지원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나 기존의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참여 활성화, 다양화를 위해 인센티브제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2016년부터 서울시민상 부문 중 안전상을 추가하

여 안전문화 보급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안전문화운동 기본계획, 추진전략 수립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청됨.
- 안전문화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최호진·오운경, 2015).
- 이러한 측면에서 5년 단위 등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전략 수립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조사 및 전략적 의제 발굴 등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최호진·오운경, 2015).
 -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의 예로 [그림 5-7]과 같이 대전시나 울산시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그림 5-7] 안전문화운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의 예



출처: 이형복,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2015, p.73; 윤영배(2017). 전계서, p.71.

- 지금까지 논의한 안전문화운동의 범·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인프라 강화, 조직 역량 강화 등의 측면을 종합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고려할 수 있음.

[그림 5-8]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기본계획 수립안의 예시

목표	고양시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선진화			
전략	안전문화운동 제도적 기반 확립 (법/제도적 측면)	민관협력 기반 안전문화 조성 (시민참여 및 네트워크 측면)	안전문화운동 인프라 확보 (인프라 역량 강화 측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역량 강화 (조직 역량 강화 측면)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시설점검 및 관련 관리 감독 강화 •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실천운동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 시민 참여 중심의 체험형, 생애주기별 교육 학습 강화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발굴 및 안전 공모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의 내실화, 전문성 확보 • 안전훈련 확대 및 훈련 내용의 다양화 •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앱 개발 온라인 종합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관부서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환류체계 구현 • 중장기적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

자료: 연구진 작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양시(2019). 「2018 안전문화활동 추진 현황 보고」, 고양시청.
- 국민안전처(2017). 「국민안전교육표준실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 김근영·윤종현·박근오·이용배·황지민·남보라(2012).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김남순 외(2016). 「중앙과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명열(2017). 「안전문화가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 공학과.
- 나채준(201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라정일(2016). “지진 대응과 교육훈련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안전총남 이슈브리프」, 2: 10-14.
- 류영아·김대욱(2014).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변상호·조석현·이수아(2017). 「고양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한국규제학회.
- 서혜승(2019).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참가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 오금호·정길호·최현주·조윤(2002).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민안전봉사자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방재연구소 연구보고서.
- 오금호·박병철·박민규(2006).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오영민·장근택(2013). “원천 안전문화지표 제시를 위한 실증조사체계 구축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인간공학회(2013년 10월), pp.436-441.
- 오윤경(2015).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2015(10): 1-6.
- 윤영배(2017). 「울산형 인본중심 안전문화운동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종열·박광국·장재운(2007).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 지수 개발 연구」, 소방방재청 연구용역보고서.
- 이형복(2015).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지범(2009). “광의와 협의의 위험, 위기, 재난관리의 범위”,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한국방재학회.
- 정지범·류현숙(2009). 「한국인의 사회위험 지각과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만상(2017).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안전문화 실현 방안”, 『안전총남 이슈브리프』, 2017(3):1-8.
- 조인식·배재현(2016).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과 운영을 위한 과제 119 소방안전체험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 채진(2018). “제천화재를 계기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망”, 『대전세정포럼』, 64: 46-57.
- 최호진·오윤경(201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행정안전부(2017). 『2017 안전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료』, 행정안전부.
- 현대경제연구원(2014).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현안연구과제 보고서.

2. 해외문헌

- Berends, J. J. *Developing and using a widely applicable measurement tool for safety culture*. Eindhoven: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5.
- Duncan, C., & Nigel, R. *The zero index: A path to sustainable safety excellence*. Ojai, CA: Behavioral Science Technology, Inc., 2012.
- FEMA. *Citizen Corps A Guide for Local Officials*. Washington D.C.: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1.
- Guldenmund, F. W. “The use of questionnaires in safety culture research-an evaluation”. *Safety Science*, 45(2007): 723-743.
- Mathis, T. L. & Galloway, S. M., *STEPS to Safety Culture Excellenc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13.
- Neal, A., & Griffin, M. A. “A study of the lagged relationships among safety climate, safety motivation, safety behavior, and accidents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2006): 946-953.
- Redmill, F & Rajan, J. *Human Factors in Safety: Critical Systems*. Butterworth Heinemann Linacre House, Oxford, England, 1997.
-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report 1998-Life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for all*. WHO.
- 일본 센다이시 소방국(仙台市消防局)(2013). “応急手当e ラーニング &救命ナビアプリケーション”, 仙台市消防局 資料
- 일본 총무성 소방청(總務省消防庁)(2009). “地域防災スクールの推進”, 消防の動き, 09年 4月号
- 일본 후쿠오카시 福岡市(2018). “平成 30年度 福岡市市民 総合防災訓練”, 福岡市 市民局 防災・危機管理課 資料

3. 기타 자료

[법·조례]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통계 자료 및 보도자료]

경기도소방재난본부(2019). 「2018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고양시(2018), 「2018 고양통계연보」, 고양시청.

“2018년 지역안전등급지도(지역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12.12.)

“2020년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추진계획”, 경기도청 보도자료(2019.08.21.).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출범”, 고양시 보도자료(2013.11.21.).

“시민안전 지키는 스마트CCTV 사업 선정”, 대전시 보도자료(2018.06.19.)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02.05.)

“행안부, 2019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07.15.)

[온라인 신문 기사]

“고양시, 혼잡구간 교차로·나들목 안전시설 설치”, KFM경기방송 뉴스(2019.04.12.)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37320&cat=33> 접속일 2019.09.15.)

“미세먼지 OUT! 경기도-남부권역 6개 지자체, 미세먼지 공동 대응 협약식 체결”, 경기도 공식 블로그(2019.09.05.)
(https://m.blog.naver.com/gyeonggi_gov/221639852383) 접속일 2019.09.15.

“안전신문고 활용 ‘저조’...공무원 동원 ‘강제설치’ 급급”, 디지털 타임스(2015.05.0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50802100860800001 접속일 2019.08.15.)

[온라인 자료]

미국 Distracted Driving 홈페이지 (<https://www.nhtsa.gov/risky-driving/distracted-driving>) 검색일: 2019.08.15.

미국 Ready 홈페이지(<https://www.ready.gov/>) 접속일 2019.08.15.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https://bluesky.seoul.go.kr/>) 접속일 2019.09.15.

세이프키즈코리아(<https://www.safekids.or.kr/>) 접속일 2019.08.15.

송파안전체험교육관(<http://www.isafeschool.com/songpa/>) 접속일 2019.08.12.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 접속일 2019.08.31.

영국 Think! 캠페인 홈페이지(<https://www.think.gov.uk/>) 검색일: 2019.08.15.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river/bousai/education/movie/movie.html>. 접속일: 2019.09.28.

일본 센다이시(仙台), <https://sendai-resilience.jp/efforts/government/human/education.html>. 접속일: 2019.09.29.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선진사례 -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

(http://www.cpdcr.re.kr/html/design/design_case.php?mode=v&bbs_data=aWR4PTU5OCZQYWdlTnVtYmVvPTQmbGlzdE5vPTY5J) 접속일 2019.09.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contBusinessCul01.do>) 접속일 2019.08.12.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웹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Index/screen.do>), 접속일 2019.08.10.

부록

고양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인식 조사

부록

고양시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현재 『고양시민 안전의식 조사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고양시민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하여 엄정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하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개인 정보는 철저히 블라인드 처리된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조사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커피 기프티콘 5,000권)를 드리오니, 내용 확인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연구책임자: 이정철 부연구위원

연구수행 및 문의: 황휘욱 연구원

(☎: 031-8073-8410 / Email: retinder06@gyri.re.kr)

■ 다음은 통계분류를 위한 **응답자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문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보기에 ○ 이나 v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구 ()동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연령을 기입해주십시오 만 ()세

4. 귀하께서는 혼인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5. (혼인하신 경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가요? ① 예 ② 아니오
6. 귀하의 최종학력을 표시해주십시오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이상
7. 귀하의 직업을 표시해주십시오
 ① 전문직 ② 일반 사무직 ③ 서비스판매직 ④ 농림어업 종사자
 ⑤ 생산·제조 등 기능직 ⑥ 단순노무직 ⑦ 공무원/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
8. 현재 거주하시는 주거 형태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빌라 ③ 아파트 ④ 주상복합/오피스텔
 ⑤ 기타()

■ 다음은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안전의식 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지문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보기에 ○ 이나 v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본인/고양시/우리 사회 전체를 중심으로 각각 생각해볼 때,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불안 하다	불안 하다	보통 이다	안전 하다	매우 안전 하다
(나)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고양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우리 사회)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세월호사고(2014년)를 비롯해 고양시 내에 발생한 터미널 화재(2014년) 사고 등을 계기로 그 이전과 비교하여 안전의식 수준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나빠졌다	조금 나빠졌다	비슷하다/변화없 다	조금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	①	②	③	④	⑤
시(市)의 관심과 노력	①	②	③	④	⑤

6.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전불감증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안전교육 미흡 ② 무관심 ③ 조금중(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 ④ 안전 관련 홍보 부족 ⑤ 정책적 의지 미흡 ⑥ 적당주의
- ⑦ 기타()

7. 귀하께서는 우리 市가 안전확보를 위한 규범이나 제도상의 규정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1. (문7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규범이나 제도상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당사자들의 무관심 ② 비현실적인 규정
- ③ 관리 감독자들의 무관심 ④ 규정을 따를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 ⑤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
- ⑥ 기타(직접작성:)

8. 귀하께서는 평소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자주 접하시는 편입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귀하께서는 평소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시는 편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신문잡지 ② 방송(라디오/TV) ③ 인터넷(배너광고, 인터넷 뉴스 등)
 ④ 주위사람 ⑤ 학교 등 교육기관 ⑥ 직장/산업현장에서의 교육
 ⑦ 공공기관의 홍보, 캠페인 ⑧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 ⑨ 기타(직접작성:)

10. 귀하가 획득한 정보가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1. (문10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획득한 정보가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보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 ② 지속적인 정보속지가 되지 않아서
 ③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④ 실제 적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⑤ 기타(직접작성:)

11. 귀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대응 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교육, 훈련받지 않았으나 알고는 있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잘 안다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①	②	③	④
비상구, 대피소 위치	①	②	③	④
완강기 유무와 사용법	①	②	③	④
심폐소생술 방법	①	②	③	④

12. 귀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평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문항입니다.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나는 평소에 안전 문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나는 소화기 구비 등 우리 집 화재 예방에 철저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재난, 사고에 대비해 집안에 비상용품(비상약, 구급용품 등)을 잘 구비해 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나는 마스크와 문자알림 등 재난 관련 예고가 있으면 외출 및 안전관리에 주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나는 극장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비상구를 숙지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나는 안전 관련 뉴스나 정보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나는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 탑승시 안전띠를 항상 착용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목격하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3. 고양시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지역별로 **재난안전 대피시설(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소 등)**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 ③ 조금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 다음은 **위험의식 및 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문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보기에 ○ 이나 v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고양시 통합앱(안전 분야 포함), 방범CCTV 운영, 찾아가는 안전 교육 서비스 등 고양시가 제공하고 있는 안전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해도	(고양시의 안전 관련 정책들을)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안다.
2) 만족도	(고양시는 안전 정책 면에서)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 하고 있다.

3) 평가	(고양시 안전 정책 중 잘 알고 계시거나 이것만큼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 는 정책이 있으면 기입해주시시오 - 무응답 가능)
-------	--

2. 귀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유형에 대한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위험하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사회 재난	1) 화재(주택/공장 화재, 산불 포함), 전기·가스 등에 의한 폭발	①	②	③	④	⑤
	2) 시설안전(다중이용시설, 놀이시설 안전 등)	①	②	③	④	⑤
	3) 노후건물안전(건물 붕괴, 승강기 사고 등)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재해, 작업환경안전사고	①	②	③	④	⑤
	5) 놀이(레저)시설, 문화체육시설 안전사고	①	②	③	④	⑤
	6) 싱크홀, 지반 침하	①	②	③	④	⑤
	7) 미세먼지	①	②	③	④	⑤
치안 범죄	8) 폭력 범죄(살인, 강도 등)	①	②	③	④	⑤
	9) 성범죄(강간, 추행 등)	①	②	③	④	⑤
	10) 절도, 주거침입	①	②	③	④	⑤
	11) 특정(노인/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①	②	③	④	⑤
교통 사고	12) 자동차 주행중 사고	①	②	③	④	⑤
	13) 대중교통 이용 사고(지하철/버스/ 철도 등)	①	②	③	④	⑤
	14) 자전거/오토바이 이용 사고	①	②	③	④	⑤
	15) 보행자 사고	①	②	③	④	⑤
자연 재난	16) 풍수해(태풍, 침수·범람 등)	①	②	③	④	⑤
	17) 폭설 및 한파	①	②	③	④	⑤
	18) 폭염 및 가뭄	①	②	③	④	⑤
	19) 지진, 산사태	①	②	③	④	⑤

신 중 위 험	20) 식품문제(먹거리안전 문제 등)	①	②	③	④	⑤
	21) 질병문제(신종 플루 등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 사례)	①	②	③	④	⑤
	22) 정보 보안(해킹 등 사이버 안전)	①	②	③	④	⑤
	23) 에너지/통신 등 사회기반시설 사고	①	②	③	④	⑤
	24) 자살	①	②	③	④	⑤
	25) 안보위협, 테러	①	②	③	④	⑤
	26) 환경오염	①	②	③	④	⑤
기타 위험(필요시 작성:)		①	②	③	④	⑤
전반적인 위험도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앞서 보여드린 사회재난, 자연재난, 교통사고, 치안범죄, 신중 위험 요소로 인한 위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감소할 것이다	대체로 감소할 것이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대체로 증가할 것이다	매우 증가할 것이다
사회재난 (화재, 시설안전등)	①	②	③	④	⑤
치안, 범죄	①	②	③	④	⑤
교통 사고	①	②	③	④	⑤
자연재난 (풍수해, 지진 등)	①	②	③	④	⑤
신중 위험 (식품안전, 질병 등)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고양시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안전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안범죄 ② 교통사고 ③ 화재
- ④ 시설안전(건물붕괴 등) 및 지반침하
- ⑤ 자연재난 ⑥ 전염병, 감염병 ⑦ 식품안전 ⑧ 자살
- ⑨ 기타(직접 작성:)

- 4-1. (문5에서 ④ 또는 ⑤로 응답한 경우) 안전문화 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기관은 어느 기관입니까?
① 관공서/공공기관 ② 시민단체/NGO ③ 기업/직장 ④ 학교
⑤ 기타(직접작성:)
5. 고양시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전교육 ② 안전점검 ③ 안전홍보, 캠페인 ④ 안전훈련
⑤ 기타()
6. 귀하께서는 안전문화운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통 ② 범죄예방 ③ 화재예방 ④ 건설/산업현장 ⑤ 공공장소/공공시설
⑥ 가정 ⑦ 재난관리체계 ⑧ 사회기반시설관리 ⑨ 기타(직접작성:)
7. 귀하께서는 안전문화운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장소(또는 대상)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②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마트 등)
③ 교육시설(대학교, 영유아원 등) ④ 산업현장 및 생산시설(건설현장, 공장 등)
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요양원 등) ⑥ 교통시설(역, 터미널 등)
⑦ 공공장소 (집회장소, 광장, 공원 등) ⑧ 정부시설(국방시설 등)
⑨ 기타(직접작성:)
8. 귀하께서는 안전문화운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아동/청소년 ② 근로자/사업자 ③ 노인
④ 외국인 입국자/이민자 ⑤ 장애인 ⑥ 여성/주부
⑦ 대학생 ⑧ 1인가구(20대, 60대 등) ⑨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⑩ 협회/이익집단 ⑪ 언론 ⑫ 기타(직접작성:)

9. 귀하께서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교육 분야 개선: (예) 안전교육의 체계화, 확대 등
- ② 안전점검 분야 개선: (예) 안전점검의 날 확대 운영 등
- ③ 안전홍보 분야 개선: (예) 민·관 협력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
- ④ 안전훈련 분야 개선: (예) 안전훈련 확대 등 영
- ⑤ 안전할 권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단체 활성화
- ⑥ 안전관련 자원봉사 활성화
- ⑦ 기타(직접작성:)

10. 귀하께서는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10-1. (찬성의 경우)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익적 목적에서 운동을 추진하므로
- ② 다양한 사회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 ③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 ④ 신속하고 범국가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 ⑤ 기타(직접작성:)

10-2. (반대의 경우)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민 주도형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 ② 기존의 공공부문 중심 운동이 비효과적이었다
- ③ 공공부문이 주도하면 자율적 안전문화 형성에 방해되므로
- ④ 공공부문이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 ⑤ 기타(직접작성:)

11. 귀하께서는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12. 향후 고양시 안전문화 의식 확대를 위해서 다음의 안전문화운동 유형에 얼마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항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이다	조금 있다	매우 있다
1) 안전 캠페인/홍보 활동 참여 및 관련 내용의 실천	①	②	③	④	⑤
2) 안전교육 이수	①	②	③	④	⑤
3) 직장/학교의 안전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4)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참여(시민안전지킴이 등)	①	②	③	④	⑤
5) 안전문화운동 단체에 대한 후원	①	②	③	④	⑤

13. 향후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시는 데 부정적이라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의 안전문화운동이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 ② 안전문화운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③ 안전문화운동에 관심이 없어서
- ④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으므로
- ⑤ 해당없음(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음)
- ⑥ 기타(직접작성:)

14. 귀하는 안전예방차원에서 안전 교육 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1년 이내 안전 관련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 없다	1회	2회	3회	연 4회 이상
①	②	③	④	⑤

15-1. (받아보았다고 응답하신 경우) 귀하는 어떤 안전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해당되는 모든 번호 표시)

- ① 화재 진압(소화기 등) ② 심폐소생술 ③ 탈출·피난 ④ 응급처치
⑤ 기타()

15-2. (받아보았다고 응답하신 경우) 귀하가 안전 관련 교육을 받으신 시설 (장소)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② 직장 ③ 체험시설 ④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⑤ 기타()

16. 귀하께서는 향후 안전 관련 교육이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② 별로 참여하지 않겠다 ③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다
④ 가능한 참여하겠다 ⑤ 반드시 참여하겠다

17. 귀하께서는 안전 관련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달 1회씩 ② 분기별 1회 ③ 6개월 1회 ④ 1년 1회 ⑤ 2년 1회
⑥ 기타()

18. 귀하께서는 고양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초·중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② 생애주기별/특정대상별 맞춤형 교육
③ 시민참여 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안전체험장 등의 개선 및 체험 기회 확대
⑤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 ⑥ 생활 속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신고 생활화
⑦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행위 강력한 단속
⑧ 실전훈련(재난훈련 등)의 확대
⑨ 기타()

19. 귀하는 고양시에서 운영·지원하는 시민안전 지킴이 단체 및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들어는 봤다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⑤ 주요 활동 내용 등 잘 알고 있다

문항	위험 요소 점검	범죄 예방 안심 귀가	교통 질서	홍보 (행사/ 훈련)	안전 환경 정비	기타
1)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분야 중 현재 가장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2)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이 앞으로 어느 분야에 더 보강,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②	③	④	⑤	⑥

■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문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보기에 ○ 이나 v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고양시 생활 주변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안하다	조금 불안하다	보통이다	조금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일반 건축물(아파트, 빌딩 등)	①	②	③	④	⑤
교통시설(도로, 지하철역 등)	①	②	③	④	⑤
공공시설(광장, 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체육시설(공연장, 체육관 등)	①	②	③	④	⑤
보건·의료시설(병원, 보건소 등)	①	②	③	④	⑤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사회기반시설(전기, 가스공급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건축시설 중, 주로 어디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건축물(빌딩, 아파트 등) ② 교통시설(도로, 지하철역 등)
 ③ 공공시설(광장, 공원 등) ④ 문화·체육시설(공연장, 체육관 등)

구분		매우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 다
추진 기반	법/제도적 기반 마련, 확대	①	②	③	④	⑤
	장기적 정책목표와 전략 수립	①	②	③	④	⑤
	안전문화 체험 인프라 확대	①	②	③	④	⑤
추진 체계	총괄부처(효율적 자원체계)	①	②	③	④	⑤
	부처, 조직 간 협업	①	②	③	④	⑤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관리 운영	안전문화운동 예산 확대	①	②	③	④	⑤
	지역안전문화 전문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시민단체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안전문화운동 공모사업 추 진	①	②	③	④	⑤
실행, 확산	안전문화운동 참여 유도	①	②	③	④	⑤
	캠페인, 홍보 강화	①	②	③	④	⑤
	안전문화운동 교육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 현재 고양시는 4대 목표 중 하나로서 ‘풍요로운 삶의 시민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고양시가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 또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Awareness and Improvement of Safety Culture in Goyang City

Jungchul Lee*, Huiuk Hw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degree of safety awareness of Goyang City citizens, including the awareness of safety culture and the degree of risk by disaster type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the safety culture movement, a policy tool to enhance the safety culture.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safety culture in the region has been emphasized to effectively prepare for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ex in our society. Accordingly,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s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spread safety culture more widely. Despite these efforts,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afety culture movement was introduced, criticism continues that these policies are not effective.

Starting from this recognition, this study aims to discover safety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to enhance safety culture in Goyang City through a safety awareness analysis and to draw up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ing safety culture movements more effectively in the futur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concept of safety culture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education activities centering on safety culture movement in Goyang City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cases to find implications for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improvement of safety culture in Goyang City.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afety awareness of Goyang City citizens, and 1,161 citizen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erception of Goyang citize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afety awareness of Goyang citizens and Goyang city can be diagnosed as the average level of around 3.0. These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the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safety awareness to a more positive level;

Second, with regard to safety awareness in each region, it was found to be relatively negative in order of Ilsandong-gu, Deokyang-gu, and Ilsanseo-gu;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isk perception of each type of risk factor such as social disasters, natural disasters, traffic safety, security crimes, new types of risks, the following issues were found to be most disconcerting: micro dust problems (61.8%), motorcycle accidents (44.6%), sinkhole and ground subsidence issues (43.4%), environmental pollution (38.4%), car accidents (37.0%), pedestrian accidents (35.1%), and obsolete building safety (32.5%)—in that order. When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risk factors in each region, the order of the perception is as follows: traffic accidents > social disasters, new disasters and hazards > crimes and security problems > natural disasters. It was also found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y gender;

Fourth, in order to prevent such disasters and accidents, Goyang citizens were positive about participation in safety education and training;

Lastly, the need for safety inspection and capacity building were emphasized to enhance facility safety in terms of safety infrastructure, and the importance of long-term policy goals, strategies, and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were emphasiz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safety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countermeasures for disaster issues and policies for activating a safety culture movement.